제43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2026년7월20일(월) 오후 2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7월20일 개의하여 7월21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9995)

상정된 안건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9995) ····· 2
- 무제한토론 의원(윤상현) ····· 3
- 무제한토론 의원(김한규) ····· 40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 77
- 무제한토론 의원(김동아) ····· 101
- 무제한토론 의원(이진숙) ····· 131
- 무제한토론 의원(전은수) ····· 152
- 무제한토론 의원(김태규) ····· 197
- 무제한토론 의원(윤용근) ····· 244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1인 서면동의) ····· 276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9995) ····· 277

(14시09분 개의)

○의장 조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멈춰서는 안 되며 국민께 온전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께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 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7월 2일 경찰청장으로부터, 7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중간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9995)

(14시11분)

○의장 조정식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종합특검 수사가 그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그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 중 첫째,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증원하고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연장하며 셋째, 특별검사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내란을, 불법 비상계엄을 해외 등에 합법화한 그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김건희 등의 관저 증축 등 관련해서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 윤재순, 김대기, 김오진 등이 그 죄를 인정받아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가 지시해서 관저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심우정 등 대한

민국의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어떻게 뭉개고 은폐하는 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무원들이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종합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조정식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윤상현)

(14시16분)

○의장 조정식 먼저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1조야말로 대한민국헌법의 출발점이자 우리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자유는 짓밟히고 민주는 형해화되고 그리고 공화는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 조정식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한마디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의장 조정식 윤상현 의원님!

○윤상현 의원 민주당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1조는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

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조정식 윤상현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아니, 이게 다 특검법 관련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정식 안내말씀드리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4시 17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대법관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대법관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려서 카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시켜 차베스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4심제를 만들었습니다. 3심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4심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법왜곡죄를 도입해서 판사와 검사를 겁박 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청을 곧 해체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46%가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찬성은 39%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또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놨습니다. 이제는 2차 종합특검법을 또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습니다. 1차로 30일 연장했습니다. 2차로 30일 또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파견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수사 대상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또 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을 택해서 공소유지 변호사로 쓰겠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이 그동안의 기간을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면 먼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수사 기간이 짧아서, 수사가 미진해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어서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검사입니까?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인 상설수사기관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장 관철시켜야 될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현장.

그래서 저 윤상현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여야가 동시에 같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었고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법 절차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사실상 정치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를 더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파헤치는데 왜 막는 거야? 예,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수사를 더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지 또 왜 법을 고쳐 가며 수사를 늘리는 것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지 또 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스스로 없앴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입니다. 원래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검찰 자신처럼 너무 힘이 센 대상이라면 보통의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국민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 바깥에 임시 수사팀을 하나 차려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수사권을 주고자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라는 말입니다.

특검은 세 가지 약속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첫째, 예외성입니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나라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상설기관이 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특검을 만듭니다. 예외가 일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시성입니다. 특검은 반드시 끝나는 날짜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수사하고 그날이 되면 문을 닫는다 이것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겠습니까? 기한 없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야 수사팀도 핵심에 집중하고 수사받는 사람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최소한의 예측을 갖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충성입니다. 특검은 정해진 사건, 정해진 범위만 수사를 합니다. 특정 사건을

규명하려고 국민이 만들어 준 팀이지 아무것이나 눈에 띄는 대로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팀이 아닙니다. 수사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그것은 원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특검법에도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한시적인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이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에서 이렇게 임의로 연장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은 1999년입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기본 30일에 연장을 더해도 두 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옷 로비 특검은 검찰 수사가 놓친 사실관계를 새롭게 밝혀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2000년 1월…… 2001년이지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은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했으며 기간 연장을 위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간 7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하여 수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특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특검법안의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칼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법대로 임명하고 법대로 끝낸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정치의 양심이 작용한 하나의 귀감적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한의 준수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얼마든지 양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정부, 어느 국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법을 고쳐 늘려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 원칙은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란특검법 개정법률은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 특검 모두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외라 부를 수 있어도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특검의 한시성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됩니까. 재탕, 삼탕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 때는 가스 비용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숫자를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기간이 총 510일입니다.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검은 법이 정한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습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연장을 두 번 다 썼습니다. 그리고 150일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월 24일이 법이 정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며칠 앞두고 법을 고쳐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 법안입니다.

510일에 150일, 여기에 30일 더하면 690일입니다. 햇수로 2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구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게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조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안에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징하고 없으면 철수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기한이 아쉽다고 해서 무기한 남아 있는 그런 세무조사 제도는 없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남은 기간은, 남은 사건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 또 국가수사본부 이런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무제한 연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후속절차를 지키자는 것이 법치, 그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무조사 조사관이 두 달이 지나도 안 나갑니다. 규정상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연장해서 다섯 달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것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본청에 얘기해서 조사 규정 자체를 바꿔 옵니다. 이 가게 세무조사는 특별히 한 달 더 할 수 있다, 조사 인원도 늘린다 그리고 조사 항목도 원래는 매출 누락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종업원 관리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세무조사를 받는 가게가 장사를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조사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어느 가게가 마음 놓고 장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가게의 주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규정을 고쳐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 가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규칙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기본 룰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도중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서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그 경기는 이미 스포츠가 아니라 심판의 폭력만 남을 뿐입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사건에 따라서 특검법의 기간·절차를 임의로 고치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 믿고 따를 수 있는 공통의 룰, 공통의 규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기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는 약 98억 원의 국민 세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수사 운영비가 약 40억 원, 인건비가 약 28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억 원, 사무실 마련에 6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피땀으로 벌어서 바친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 돈과 150일의 시간 그리고 130명의 파견공무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이 특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람은 8명입니다. 8명이 적다 많다를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8명을 기소하는 데 정말 150일과 150억 원이 필요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30일과 추가 예산을 더 주면 지난 150일 동안 못다 한, 못 찾은 무엇이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오히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대 특검의 수사·재판의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줄줄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 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을 했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2만 1563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스스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복귀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마약 사범, 민생 사범, 치안 불안에 투입해도 모자란 인력을 이렇게 정치보복 수사에 다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

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검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세금 100억 원을 쓰는 기관이 장부를 안 보여 주면서 국회에는 돈과 시간과 사람을 더 달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상값도 안 갚은 사람이 다시 외상을 달라는 경우입니다. 국회가 정부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내역부터 보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법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기간을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30일 연장합니다. 법이 허용한 연장을 이미 다 쓴 특검에게 법 자체를 고쳐서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둘째,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립니다. 곧 문을 닫아야 할 임시기구의 몸집을 오히려 불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행위를 새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종합특검법의 법 이름이 분명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런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겨냥한 감사 방해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다가 필요해지니 감사특검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뒤로 미루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파견 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이 군 관련 사건과 정보에 상시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조치입니다. 군검사, 군사경찰까지 특검 인력풀에 편입이 되면 군 내부의 지휘, 감사, 작전 판단이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외환 특검을 명분으로 군을 정치적 수사 레이더 안에 두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안보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쟁으로 군을 내부에서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괜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군 관련 정책 흐름을 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에서는 80년을 유지해 온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를 뒤집어서 전문성을 악화시키는 통합 실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고쳐 국방부까지 특검 파견 목록에 올리고 군검사와 군사경찰을 정치 특검의 상시 인력풀로 끌어들입니다.

교육, 장교 양성해서 군을 흔들고 수사 정치화해서 군을 끌어들이는 이중의 흐름은 결국 군을 전투조직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실험대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은 하되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거리

를 지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군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의 국방체계는 정치에 의해 오염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사건들을 검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들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끝나가는 임시 기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아 가는 상설 기관의 모습입니까? 우리 당이 이 법안을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하다 말면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7월 24일에 문을 닫아도 수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위에, 종이 바닥에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었을 때 국가수사본부는 실제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본부장을 임명하여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인계 제도는 이미 한 번 작동해 본 검증된 길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있고 더 예외적인 사정이 생기면 상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법 절차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14년도에 사건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폐단을 끝내자며 상설 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설 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90일입니다.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는 5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30명 이내입니다. 이것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한 특검이라는 예외 기구의 표준 규격입니다.

이제 오늘의 종합특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두 차례 연장으로 이미 150일,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180일이 됩니다. 상설 특검법 최대 기간의 딱 2배입니다. 파견 공무원은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상설 특검법 기준의 5배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만든 표준의 2배, 5배짜리의 예외 기구를 이번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당 단독으로 더 키워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자기 손으로 만든 기준을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은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특검이 문을 닫으면 수사가 끊긴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불과 몇 달 전의 기록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 드리는 것은 보도와 경찰 발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뒤 남은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으며 사흘 뒤인 12월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특별수사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의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12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차례로 종료되면서 잔여 사건이 인계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만 사건번호 기준 144건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순직 해병 사건 수사팀, 내란 사건 수사팀, 김건희 사건 수사팀을 각각 편성하였고 김건희 사건 수사팀만 해도 팀장을 포함해 40명 규모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투입된 경찰관은 별도 전담 사건까지 합쳐 200명이 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특검이 문을 닫은 뒤의 실제 모습입니다. 수사는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설 수사기관이 이어받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4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는 나라에서 특검이 끝나면 진실이 묻힌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연장 논리의 전제 자체가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성립될 수 없는, 인정될 수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이런 억지 주장을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앞에 철로가 끊어지고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계속 달리기만 하는, 달려만 가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기관차를 보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특검은 진상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진상규명을 법이 정한 정상적인 기간과 절차로 이어 가느냐 아니면 법을 고쳐 가며 예외 기구를 계속 연명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전자가 법치고 후자는 법치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법의 언어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에는 적어도 일곱 가지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법치주의의 출발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미리 법에 정해져 있고 국가도 그 법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와 처벌처럼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직접 건드리는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특검법은 처음 만들 때 수사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기본 90일, 연장을 두 차례까지. 그것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사받는 사람에게는 방어권의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지 알아야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생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그 기간이 끝나 가는 시점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법 자체를 고쳐 기간을 늘립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후반전이 끝나 가고 있는데 지고 있는 쪽이 심판진과 상의를 해서 경기 시간을 다시 30분 늘리는 규칙을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추가된 그 30분 동안 골이 들어가면 그것이 정당한 골이겠습니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못 밝힌 것을 기간을 고쳐 가며 밝혀낸들 그 절차의 정당성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국회가 법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는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 특정 피의자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수사를 늘리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을 손대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입법의 탈을 쓴 수사 지휘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수사기관의 기간과 인력과 대상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 수사기관은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다수당의 뜻에 의한 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 분립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나라의 힘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 법을 판단하는 법원. 왜 나눴습니까? 한 손에 세 부의 권한이 전부 모이면 권한 남용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 즉 소추권은 본래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특검은 그 예외로서 국회가 관여해 임시로 만드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짧아야 하고 예외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수당이 특검을 만들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법을 고쳐 또다시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인력을 붙여 주기를 2년 가까이 계속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국회가 자기 직속의 수사기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다수당이 저 소수당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운영합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 권력이 같은 명분으로 상대를 수사하는 특검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안에 영구적인 보복수사 전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이 풍토를 그대로 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이 특검의 설치 목적은 법률의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감사 방해는 그것과 전혀 다른 유형의 사안입니다.

수사 실무에는 별건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한 혐의가 잘 안 나오면 수사 과정에서 눈에 띈 다른 건을 잡아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과 법조계는 오래전부터 별건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전형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수사, 우리는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사법의 대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있어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소련의 비밀경찰 KGB의 책임자는 '사람을 데려와라, 죄목은 내가 찾겠다'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습니다. 문명국가의 형사 절차는 바로 그런 전근대적인 범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화국의 법은 권력이 원하는 사람을 정해 놓고 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같은 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특검법을 사건에 맞춰 바꾸고 별건을 본건으로 올리는 순간 우리는 형사법의 원칙만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의 기본 철학까지 함께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무죄 추정 원칙과 장기 수사의 인권 문제입니다.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가까운 수사 정국은 이 원칙을 현실에서 무너뜨립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기소되기도 전에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소환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사회적으로는 이미 유죄가 되어 버립니다. 수개월, 수년의 수사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절차에 의한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무죄여도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부서져 있습니다.

죄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로 단죄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사를 길게 끄는 것은 죄 있는 자에게는 시간을 벌어 주고 죄 없는 자에게는 고통을 늘리는, 그 어느 쪽으로도 정의에 반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의 위헌 소지입니다.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단순한 입법 기술이 아닙니다. 헌법이 전제해 온 국가소추주의, 적법 절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추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공익대표자로서 객관적인 의무를 지는 검사에게 묶어 두는 이유는 그 권한이 인사, 감찰, 징계, 헌법책임의 사슬 안에서 통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특검법처럼 소추권을 임시기관인 특검이 다시 경력 5년의 변호사에게 넘기고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변호사가 사실상 공소유지를 계속하게 한다면 그 사슬은 끊깁니다.

누가 공익의 대표자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누구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우리 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딱 단 한 줄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도 검사, 공소의 수행 즉 공소유지도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소추주의라고 부르는 이 원칙은 근대 형사법의 뼈대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는 어떤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까?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임을 선언하고 그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하는 객관의 의무를 지고 인사와 징계와 감찰의 책임체계 안에 있습니다. 공소권이라는 무거운 권한을 검사에게만 맡기고 있는 것은 검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무와 책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안의 공소유지 변호사는 이 사슬 밖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정한 주체가 아니고 검찰청법이 정한 의무의 담당자도 아닙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이 제도가 법체계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장 조정식 윤상현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그러세요.

○의장 조정식 지금 방청석에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국민들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실 소개로 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상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조정식 윤상현 의원님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국가의 형벌권이 책임의 구조를 떠나서 허공에 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적법절차와 공화국의 법 철학이 가장 경계해 온 상태입니다.

여섯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어기는 문제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단계에서도 수사기간 연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만들 때 전문위원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후 입법에 대해 확립해 온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종전의 법질서를 신뢰하여 형성한 법적 지위를 국가가 사후 입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제한한다. 새 법령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침해받는 신뢰의 보호 가치와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되는 방법 그리고 새 입법으로 실현하려는 공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개인의 신뢰 이익이 공익에 우선하는 경우 그 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이 법리를 오늘 법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7월 24일 종료라는 법률상의 기한은 수사 대상자들이 방어를 준비해 온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종료 직전에 수사받는 쪽이 아니라 수사하는 쪽의 요청으로 뒤집는 입법이 침해받는 신뢰와 얻는 공익의 형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물을 뿐입니다.

이 모든 근거에 위반해서 법 위반이라는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는데도 이 법안은 우리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점입니다. 예산 통제, 즉 국민의 지갑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은 나라살림에 대한 심의와 통제를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관도 국민 세금을 쓰면서 내역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약 98억 원의 예산 중 무엇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안에는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1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집행내역도 검증하지 않은 채 기관과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얹어 주는 것은 국회가 자기 손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 돈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하게 놔두겠습니까? 선거관리 하면서 투표용지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하고 비슷한 경우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개정안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상설로 거머쥐고 별건과 표적 수사를 법으로 승인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어 내고 국회 스스로의 심사기준과 예산통제 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일곱 개 여러 문 중 어느 하나만 열려도 법치의 집에는 비바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곱 개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을 운영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라는 건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로 씨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참고서입니다.

특검제도의 원조, 미국입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대선 재선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도청하다 적발되었고 수사가 대통령과 백악관에 향하자 닉슨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아치볼드 콕스지요—콕스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이른바 토요일의 대학살입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그 수사는 더 이상 독립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미국 의회는 1978년 정부 윤리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는 독립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검사가 맡아야 한다, 오늘날 특검제도의 원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립검사가 스무 차례 넘게 임명되었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공화당이 상대 진영을 겨냥한 독립검사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만든 제도

가 정쟁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1940년도에 로버트 잭슨 미국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위험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장관이었고 훗날 연방대법관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수석검사를 지낸 로버트 잭슨이 1940년 4월 1일 더 페더럴 프로시큐터(The federal prosecutor), '연방검사'라는 제목으로 미국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입니다. 검사 권력의 본질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설로 꼽힙니다.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명예에 대해 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검사가 사건을 골라 수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재량에 검사 권력의 가장 큰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법전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가 가득 차 있으므로 검사가 누군가를 정해 놓고 뒤지기 시작하면 거의 누구에게서든 최소한 기술적인 위반 하나쯤은 찾아낼 수 있다. 진짜 위험은 여기에 있다. 검사가 사건을 골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골라 놓고 그에게 붙일 죄목을 법전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 처벌할 사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검사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남용이다'.

국민 여러분, 사람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수사의 위험을 경고한 로버트 잭슨의 이 말은 전체주의 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법무부장관이 자기 부하 검사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문명 국가는 이 위험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경계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48년 뒤 다음에 읽어 드릴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반대의견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개의 사건이 이 제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이란-콘트라 사건입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가 금지한 무기 거래, 해외 비밀 작전을 벌인 의혹이었고 이를 수사한 독립검사 로런스 월시의 수사는 무려 6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끝났을 때 미국 사회가 던진 질문은 진상이 뭐냐가 아니라 어느 한 건의 특검 수사가 6년씩 계속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화이트워터 특검입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몇 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라 전체를 그 몇 년 내내 수사와 탄핵 공방에 묶어 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목적한 혐의가 안 나오자 대상을 넓혀 가는 수사, 바로 별건수사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국가적인 규모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기록이 있습니다. 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독립검사, 특별검사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를 심사했습니다. 당시 의회가 만든 정부 윤리법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 특별법원이—특별법원은 3인 판사 패널입니다—독립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대통령 권한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스칼리아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제도의 본질

을 이렇게 꿰뚫었습니다. '통상의 검사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수사하지만 독립검사는 오직 한 사람, 한 진영만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세상 누구라도 그의 삶 전체를 뒤지면 걸릴 것이 하나쯤은 나오는 법인데 특정인만 겨냥해 무한정 파는 수사 기구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 그리고 그는 '이 위험이 언젠가 모두를 물 것이다'. 물 것이다, 바이트(bite)할 것이다. 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모리슨 대 올슨 판결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이 홀로 남긴 반대의견의 주요 대목을 번역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모리스 대 올슨 사건의 배경부터 결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안 쟁점에 직접적 참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1971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했습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지요.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미국 의회는 1978년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만들어서 독립검사, 1983년 개정에서 미국은 독립검사를 인디펜턴트 카운슬(independent councel)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립검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입했지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가 접수되면 법무부장관이 예비 조사를 하고 수사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독립검사 임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컬럼비아 특별부 연방 항소법원 소속의 3인 판사 특별부, 스페셜 디비전(special division)에서 독립검사를 임명하고 그 관할 범위를 정합니다. 독립검사는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소추권이라는 행정권의 일부를 행정부의 지휘 계통 바깥에 떼어 놓는 것입니다.

둘째, 사건의 발단은 특검과 무관한 행정부와 의회의 자료 다툼이었습니다. 1982년 레이건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이 유해폐기물정화기금 집행 관련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법무부 법률자문실장이었던 시어도어 올슨이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이유로 일부 문서의 제출 거부를 자문했습니다. 이후 1983년 올슨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나가서 이 경위를 증언하였는데 1985년 하원 법사위는 올슨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법무부장관에게 독립검사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1986년 특별부는 알렉시아 모리슨을 독립검사로 임명해 올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게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리슨이 올슨 등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자 올슨 측은 독립검사 제도 자체가 위헌이므로 소환장이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1988년 6월 연방대법원이 7 대 1로 이를 뒤집고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만 반대한 것이지요.

세 번째, 쟁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임명 조항(appointment clause)의 위반 여부입니다. 헌법상 주요 공무원은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해야 하는데 법원이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위헌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은 독립검사가 관할이 한정되고 임무가 끝나면 소멸하는 한시적 존재이므로 하위 공무원에 해당하고 하위 공무원은 의회가 법률로 법원의 임명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법부가 검사를 임명하고 관할을 정하는 것이 헌법 제3조 사법권 위반인지, 다

수 의견은 특별부의 역할이 임명과 관할 확정 등 부수적 권한에 그치고 수사 소추 자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권력분립 위반 여부입니다. 핵심은 해임 제한이었습니다. 소추는 행정권의 핵심 기능인데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지요. 법무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독립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면 행정권 침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종전의 형식적 기준을 버리고 기능적인 기준을 택했습니다. 즉 해임 제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권이 남아 있고 관할이 좁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의 기능을 잠식하거나 다른 부가 행정권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단독 반대의견입니다.

스칼리아는 임명 초기였던 당시에 홀로 반대하였습니다. 이 반대의견은 훗날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게 됩니다. 논지는 세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칙론입니다. 미국 헌법 제2조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소추가 행정권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은 다수 의견도 인정했으므로 그 일부라도 대통령이 통제받게 되는 순간 그 자체로 위헌이며,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저울질하는 다수 의견의 기능적인 심사는 헌법의 명문을 형량으로 대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나온 문장이 위험한 법률은 대개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늑대는 늑대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실질에 대한 분석입니다.

통상의 검사는 수많은 사건 사이에서 자원과 우선순위를 배분해야 하므로 어떤 사건이 기소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감각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독립검사는 오직 한 사람, 한 사건을 위해 임명되고 사실상 무제한의 예산과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길은 그 대상에서 무엇이든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스칼리아는 여기서 로버트 잭슨 미 법무장관의 1940년 연설을 길게 인용합니다. '법전에는 범죄가 가득하므로 누구든 뒤지면 기술적 위반 하나쯤은 나오게 마련이고, 검사 권력의 가장 큰 남용은 사건을 골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골라 놓고 죄목을 찾는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독립검사제는 바로 그 남용을 제도로 만든 것이라는 게 스칼리아의 진단입니다.

끝으로 정치적 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독립검사 임명 요구가 정파적 무기가 될 것이고 임명을 거부하는 법무장관은 은폐 의혹의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제도가 과잉 작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제도가 언젠가 지금의 다수 진영에게도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그 예언은 10년 안에 바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남용에 대한 예언이 10년 안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란-콘트라의 월시 특검 6년 수사에, 민주당은 화이트워터에서 출발해 르윈스키 사건까지 번진 스타 특검에 시달렸습니다.

1999년 독립검사법의 시한이 도래하자 클린턴 행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독립검사 당사자인 케네스 스타까지 폐지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의회는 여야 합의로 재연장을 포기했습니다. 판결로는 스칼리아가 졌지만 역사로는 이겼다는 평가가 정착이 되었고, 이

후 미국 법조계에서 이 반대의견은 반대의견이 시간이 지나 통설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이 됩니다.

연방대법원 스스로도 2020년 세일라 로 사건 등 행정권 통제 관련 후속 판결들에서 모리슨 다수의 의견을 사실상 좁히고 스칼리아의 단일 행정부 논리에 접근해 왔습니다. 참고로 수사 대상이었던 올슨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고 훗날 부시 행정부의 송무차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규정에 근거한 특별검사를 씁니다. 관할이 임명문서에 좁게 특정이 되고 법무장관의 감독과 예산 통제를 받으며 행정부의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이 옛 독립검사와 다릅니다. 물론 이 판결의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합헌판결을 받은 제도조차 20년 안에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다. 즉 우연이 아니어도 나쁜 제도일 수 있고 그 판단은 입법자의 몫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오늘 국회가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할 논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 미국 의회는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칼리아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나라, 독립검사·특별수사 제도를 만든 나라가 20여 년의 경험 끝에 스스로 그 제도를 역사 속 유물로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폐기 당시 의회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취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당시 법무장관 재닛 리노의 증언입니다. 민주당 행정부의 법무장관이 자기 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이 법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그 결함은 개정으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립검사는 책임의 구조 바깥에 있고 하나의 대상에 무제한의 시간과 자원을 쏟는 구조는 검찰권 행사의 균형감각을 파괴한다'. 이것이 재닛 리노 법무장관의 증언입니다.

다음, 당시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증언입니다.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나는 이 제도의 안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말한다. 독립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무책임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국민 여러분!

이 제도를 운영해 본 미국의 여야가, 그 제도로 칼을 휘둘러 본 당사자까지 나서서 함께 그 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도의 폐해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 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었고 수사를 정치화했으며 나라의 에너지를 소진시켰던 것입니다. 스칼리아 법관 한 사람의 이견이 기록으로 남아 훗날 나라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을 써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고위층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씁니다.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미국과 우리하고 다르냐?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수사 범위가 임명문서에 좁고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둘째, 법무장관의 감독과 예산의 통제를 받습니다. 셋째,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 안의 책임체계에 놓입니다. 즉 미국은 20년을 돌아 결국 소추는 책임지는 기관이 좁은 범위에서 하는 것이라는 원칙으로 돌

아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이 버려 버린 이 쓰레기 같은 제도를 왜 우리가 구태여 가져와서 사용해야만 합니까? 미국이 20년 걸려서 배운 교훈을 우리가 굳이 되풀이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힘으로 하는 것이 되어 버렸으니 소수당 의원이 하는 말에 다수당 의원분들께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부시맨 마을 한복판에 비행기에서 버려진 콜라병 하나가 떨어집니다. 부시맨은 그 콜라병을 보고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처음 보는 그 신기한 물건을 신이 준 선물로 생각하고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콜라병 하나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질서가 깨지고 공동체가 갈라지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썩히는 악한 물건이구나. 그래서 다시 그 콜라병을 신에게 돌려주겠다며 사막 끝으로 던지러 떠납니다.

지금 여당이 하자는 특검기간 연장은 이미 마을을 뒤흔든 콜라병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를 더 가져오자는 요구입니다. 이미 특검이라는 특별한 병으로 몇 달째 온 나라가 정치, 행정, 민생을 흔들어 놓고도 모자라 기간을 더 늘려 계속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정권의 시신 곁에서 콜라병을 부관참시 도구처럼 휘두르며 또 한 번 두들겨 패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법의 연장안입니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신주처럼 모시며 싸우는 동안에 사막의 사냥감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굶어갑니다.

지금 우리 국회도 지나간 권력을 향한 부관참시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분들께 묻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힘이 이긴 선거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긴 선거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만병통치약처럼 내란몰이라는 콜라병을 흔들어 댄 민주당의 안이한 전략이 낳은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국민은 결코 사막의 부시맨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지적 수준과 전광석화 같은 디지털 기구를 손에 쥔 국민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필연적으로 필패할 것이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전제조건에 대해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확실한 전제는 있습니다. 이대로 특별법을 계속 연장, 연장시킨다면 필연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실패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콜

라병이 아니라 콜라병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특검은 이미 한 번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처럼 나라를 충분히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병을 사막 끝으로 분리수거해야 할 때입니다. 더 굵고 더 단단한 병을 달라고 떼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연장해야 할 것은 특검 기간이 아니라 상식과 법치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공정한 감시입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이 계속 콜라병을 들고 흔들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충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이 불리한 길로 가는 것을 제가 굳이 말리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당에게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92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정치권의 뇌물 구조를 파헤치는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마니 풀리테(Mani Pulite), 우리말로 깨끗한 손이라는 대대적인 부패 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 행위를 말합니다. 초기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썩은 정치를 검찰이 청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정치인과 기업인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수십 년 된 집권당과 주요 정당들이 몇 년 사이에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더 좋은 정치로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수사받던 기업인과 정치인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고 기소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몇 년 뒤 무죄나 공소시효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회에는 수사기관이 정치의 심판자가 되는 관행, 정치적 반대자를 수사로 제압하려는 유혹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오히려 베를루스코니 같은 구악 정치인이 부상하고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성장하는 부작용이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패 청산이라는 대의로 시작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함께 남긴 것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사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사로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는 죄를 다루는 도구이지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수사가 정치를 삼키기 시작하면 죄는 사라질지 몰라도 정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치가 사라진 그 자리에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련, 중국, 북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특검이 소련의 비밀경찰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에게 아직도 법원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런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장치를 하나씩 떼어 낸 수사기구가 종착점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인류가 이미 실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고, 대상에 제한이 없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는 수사기구. 오늘 개정안이 허물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안전장치가 없는 세계.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전부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 세계가 어떠했는지 보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련입니다.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은 무법천지에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58조라는 근거 조문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있었고, 검사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사기관, 즉 내무인민위원부가 어떤 기관이었느냐입니다. 이 기관은 수사 대상을 스스로 정했고 수사 기간에 제한이 없었고 어느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37년에는 지역별로 몇 명을 체포하고 몇 명을 처형할지 할당량을 정한 명령서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숫자가 있어서 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을 데려오라, 죄목은 내가 찾겠다'라는 말이 이 기관, 소련의 KGB 책임자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재판이 어떠했는지 당사자들의 기록이 증언합니다. 스탈린의 검찰총장 비신스키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로 유명했습니다. 물증이 없어도 자백만 받아 내면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사는 자백을 짜내는 기술이 되어 버렸습니다. 혁명의 동지였던 부하린은 공개재판에서 있지도 않은 간첩죄를 자백하고 처형당했는데 처형 직전 스탈린에게 남긴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바—코바는 스탈린의 옛 애칭입니다—나의 죽음이 왜 자네에게 필요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수사한 쪽도 알고 수사받는 쪽도 알았지만 재판은 진행되었고 판결문은 작성되었습니다. 훗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작가 솔제니친은 그 시대를 기록하며 '수사관들이 무엇을 밝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서명을 받으러 왔을 뿐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스탈린이 죽은 뒤 소련 공산당 스스로가 그 수많은 사건이 조작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십만 명을 뒤늦게 복권시켰습니다.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비공개회의에서 서기장 흐루쇼프는 훗날 비밀연설로 불리게 된 보고를 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인민의 적이라는 규정은 이념 논쟁을 물리적 절멸로 바꾸는 장치였다. 유죄의 근거는 오직 자백이었으며 그 자백은 육체적 강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당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다수가 근거 없이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수사기구가 만든 사건을 수십 년 뒤 국가 스스로 조작으로 인정하고 서류로 복권시키는 일 그것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종착역이었다라는 것을 그 권력을 유용했던 국가 자신의 문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가 서류로 돌아온들 무엇이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중국입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에는 전안조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특별사건조사조, 말 그대로 특정 인물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그때그때 만들어진 특별수사기구입니다. 정식 검찰도 법원도 아닌 당 지도부 직속의 임시조직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국가주석 류사오치를 조사한 전안조입니다. 어제까지 국가원수였던 사람이 배신자, 간첩이라는 결론이 미리 정해진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감금되었습니다. 병 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1969년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국방부장을 지낸 팽덕회(펑더화이)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중국 공산당 류사오치 사건이 당 역사상 최대 조작 사건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복권시켰습니다. 조사를 지휘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훗날 당적 박탈과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순서는 같았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은 특별수사기구, 형식만 갖춘 절차, 뒤늦은 복권, 그사이에 사람이 이미 죽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의 일이고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심화조 사건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이 굶어 죽던 시기에 민심 이반의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성 안에 심화조라는 특별조사조직을 만들고 간부들의 과거 행적을 다시 캔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습니다. 6·25 때 행적까지 수십 년을 거슬러 뒤졌습니다. 당의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관희는 식량난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미국 간첩으로 몰려 공개처형되었습니다.

이 심화조 수사로 숙청된 간부와 그 가족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탈북 인사들의 일치된 증언입니다. 고문으로 받아 낸 자백이 또 다른 체포의 근거가 되고 그 자백이 또 다음 사람을 끌고 오는, 수사가 수사를 낳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몇 년 뒤 김정일은 숙청이 지나쳐 체제가 흔들릴 지경이 되자 이제는 심화조 사건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그 책임을 심화조 책임자들에게 돌려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소련의 비밀경찰 KGB 수장 베리야도 스탈린 사후 총살당했습니다.

역사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기준을 제시한 권력은 그 권력이 약해질 때 자신의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소련,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끌어 내고 싶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과 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기구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의 수사는 사람에게서 출발해 죄를 만들어 줍니다. 문명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에 반드시 기간과 범위에 족쇄를 채워 두는 이유, 미국이 그 족쇄가 풀린 독립검사제를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의 사례들에 있습니다.

둘째, 법의 형식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재판에도 법조문과 검사와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절차의 실질, 즉 수사의 기간 제한, 대상의 한정, 방어권의 보장 그리고 수사기구에 대한 통제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 정확히 그 실질적인 안전장치들입니다. 민주국가로서, 자유공화주의 문명국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을 파괴하고 그 기간

을 고쳐서 늘리고 대상을 고쳐서 넓히고 통제장치 없는 소추자를 만드는 것, 방향이 그 쪽이라는 사실을 보고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길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하린을 몰아냈던 자들이 다음 숙청에서 몰렸고 류사오치를 조사하던 자들이 훗날 단죄되었습니다. 심화조는 심화조에 의해 당했습니다.

정적을 수사로 제압하는 정치가 한번 자리 잡으면 오늘의 수사자가 내일의 피수사자가 되는 회전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회전문을 여는 손잡이가 바로 필요할 때마다 수사기구의 시한과 범위를 고쳐 주는 입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 나라들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안전장치들 때문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떼어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것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고위층 비리도 일반 검찰이 수사합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제도 없이 상설 사법체계 안에서 고위층 수사를 해냅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식의 특검 논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건마다 새로 만드는 대신에 있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은 수사기관을 강하게 만들되 좁게 묶었고 실패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수사기구를 넓고 길게 풀어 놓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특검 역사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999년 이후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을 경험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기간이 짧았습니다. 끝나면 깨끗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반대로 논란을 남긴 특검들의 공통점이 수사가 늘어지고 대상이 번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세계의 경험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세계가 실패로 기록한 요소들, 즉 기간의 무한정성, 대상의 확정성, 책임의 부재를 한 법안에 모아 놨습니다. 미국이 쓰레기였다고 판단하고 폐지한 그 법안이었고 이탈리아가 심각한 정치 파탄의 후유증으로 증명한 그 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연장 시도는 그 실패한 길을 다시 가려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수사 정국 너머에 있어야 할 정치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법 이야기, 외국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 지금 이 나라의 살림살이와 또 정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일 동안 이 나라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대한민국 뉴스의 첫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소, 내란. 아침 뉴스도 수사였고 저녁 뉴스도 수사였습니다. 아침에도 내란, 점심에도 내란, 저녁에도 내란몰이었습니다. 고작 몇 시간 어설픈 계엄령 하나를 놓고 지금 몇 년째 사골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뼈까지 다 허물어져서 뼈국물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제 6·3 지방선거 결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솔직히 야당으로서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내란몰이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서울의 집값, 전월세 뛰고 뛰고 뛰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이자에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집 걱정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국회가 밤을 새워 다루어야 할 의제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검 기간을 30일 늘리는 법안을 놓고 밤을 지새우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도 그 답답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죄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켜져 있는 5개의 경고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등들이 오늘의 특검법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 카지노가 되어 가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이미 국가경제의 뇌관입니다. 오늘 현재 한국은행 금융 당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200조 원 안팎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로 따지면 약 90% 수준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리와 부동산 불확실성과 투기적 대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계부채는 더 이상 일부 과잉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뇌관 위에 금리인상과 자산가격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DP 대비 90%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위에 레버리지 빚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재 숫자가 그려 내는 그림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구당 이자 부담은 수백만 원씩 늘어납니다.

가계부채가 뇌관이라면 금리는 도화선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약 52조 원에서 70조 원 가까이로 17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이자 부담이 132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약차주는 어떻습니까? 다중 채무를 지고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가구의 이자 부담은 가구당 연 330만 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56%에서 1%를 넘는 수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치적 수사를 떠나서 그대로 읽어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구당 이자 부담이 수백만 원씩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평균 가구는 연 132만 원, 취약차주는 약 330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에서 금리와 자산가격의 작은 변동은 추상적인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식탁과 난방비와 교육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가계부채를 넘어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상위권이고 디레버리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높은 가계부채 위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융자, 주식담보대출 이른바 빚투가 겹겹이 얹혀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언론은 우리 증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 팔아 레버리지 또 샀다. 홀짝 도박판 된 코스피', '도박판 같은 증시'. 이란전쟁 이후로 코스피가 하루 10% 안팎으로 널뛰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베팅하듯 번갈아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판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구조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 원대에서 30조 원, 거의 40조 원대로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년 사이 5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을 합친 빚투 규모는 50조, 60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일부 시점에서는 사상 최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10% 가까이 급락하는 날에는 반대매매, 강제청산 규모가 수천억대로 치솟았고 투자자 예탁금이 한 달 사이 수십조 원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빚으로 달아오른 시장, 뒤늦게 밟은 브레이크, 시작된 강제청산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레버리지 매수, 그 속에 재산을 날린 서민들의 피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레버리지 판돈을 키우는 카지노 심리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장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의 실제 숫자가 보여 주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

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투기적 대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목표를 세우고 일부 대출규제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을 포함한 빚투 구조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청년, 취약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와 증시 변동성을 함께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 원 가까이 육박하고 레버리지 빚투는 50조, 60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의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정치와 정책은 이 구조적 위험에 앞서가는 설계도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고 레버리지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는 동안 이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부 관리 노력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 가계부채 빚투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가계부채, 특검과 레버리지 증시,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는 한 나라의 에너지와 관심과 제도 설계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난 690일 동안 우리 정치가 쓴 에너지의 대부분은 소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도 수사, 저녁 뉴스도 수사였습니다. 그 사이에 가계부채는 조용히 2000조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그사이에 레버리지 빚투는 조용히 50조, 60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사이에 금리와 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이 국민의 식탁과 난방비와 교육비를 흔들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다시 특검 30일 연장 법안을 놓고 밤을 지새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자체가…… 특검 연장에,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눈과 손과 시간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특검 30일 연장이 아니라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한 몸으로 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종합적인 금융·재정·부채 관리 대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계부채가 뇌관이고 금리가 도화선이고 레버리지 증시가 불쏘시개가 되어 가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특검 연장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 언젠가 이 구조적 위험이 현실의 위기로 폭발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위험이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책 실패와 규제 부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수사의 나라에서 민생의 나라로, 보복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빚투 그리고 특검 연장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함께 놓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필요합니다. 특검도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숫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이자, 레버리지와 빚투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을 직시하고 법치와 권력분립을 지키면서 민생과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빚으로 달군 증시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경제 이 시한폭탄 위에 지금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경고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피를 잃은 부동산정책입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 보셨습니까? 2025년 6월 대책, 9월 대책, 10월 대책, 2026년 1월 공급 대책, 4월 가계부채 대책. 1년 남짓한 사이에 굵직한 대책만 대여섯 번입니다.

대책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앞의 대책이 잘 안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스물여섯 번인가요 여덟 번인가 대책을 내놓고 서울 집값을 두 배로 올려 놨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묶는 대책이 발표된 날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요, 입장도 없다고 했다가 한 시간 뒤에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 한 편으로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세 공제 제도를 흔들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묶이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 전 재산이 걸린 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이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라는 정상 경로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와 번복 그리고 한 줄의 SNS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벼우면 시장은 정책을 믿지 않게 되고 정책을 믿지 않는 시장은 어떤 대책에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스물여섯 번의 교훈인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더 빠른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등입니다.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의 잔치입니다. 주식과 집을 가진 사람의 장부에는 숫자가 불어나지만 가진 것이 월급과 전세보증금뿐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른 물가와 전월세 그리고 올라간 이자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뛰고 그 청구서는 시장에서 장 보는 서민의 지갑으로 갑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501원, 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에 28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6월 하순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 누계 136조 7841억 원입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외국인 주식 자금의 유출이 국내 주가 상승에 후행하는 차익 실현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인데 외국인은 100조 원 넘게 팔고 나가고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 나라의 경제부처와 국회가 밤새워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국회의 시간이 이 특검법 연장에 바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에서도 양극화입니다. 대형주가 몰린 코스피가 6할 오르는 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린 코스닥은 오히려 2할 가까이 빠졌습니다. 돈이 큰 곳으로만 몰리고, 돈이 큰 곳으로만 쏠리고 작은 곳에서는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 서울과 지방, 세 개의 골이 동시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자산 가진 사람의 투자 수익을 못 따라간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희망을 잃든지 아니면 일터가 아니

라 카지노로 가게 됩니다. 건전한 투자시장이 아니라 도박판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경고등입니다. 준비 없는 곳에 부어지는 정책 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센터에 총 1400조 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가야 할 길입니다. 문제는 순서와 검증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있어야 하고 그 전력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투자가 회수될 수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전력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발표되어 거꾸로 전력계획을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계획이 투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발표가 계획을 고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조 원 가운데 정부 재정이 얼마이고 민간 투자가 얼마이고 민간이 실제로 투자를 확약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리고 국회 상임위 심의라는 정상 절차 대신에 특별법의 특례로 모든 검증을 뛰어넘겠다고 합니다. 준비 안 된 땅에 부어진 돈은 산업이 되지 않고 부실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이 세계사에 드문 성공을 거둔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전국 3만 3000여 마을에 시멘트를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의 노동과 자기 자금을 보탤 길을 넓히고 지붕을 바꾼 마을에만 다음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일어선 곳에 더 주는 차등 지원, 즉 국민의 자조 노력 위에 정부 지원을 얹는 원칙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오늘의 산업정책으로 옮기면 답은 분명합니다. 기업과 지역이 자기 돈과 위험을 먼저 거는 곳에 정부가 매칭 지원을 할 때 투자와 고용 유지와 운영까지 이어지는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발적 투자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 조 단위 숫자가 배정이 되면 사업이 끝나는 순간 사람도 떠나고 돈만 사라진다는 것이 세계 개발 경험의 일치된 교훈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정책 자금의 민주화가 아니라 책임의 민주화에 있었습니다. 마을이 먼저 책임을 지고 정부가 그 책임 위에 자금을 얹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조의 노력과 민간의 선투자가 확인되는 곳에 예비타당성과 국회 심의로 검증된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것 그것이 산업과 일자리,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투자가 정치적 논리로, 무슨 민주화 투쟁의 보상 논리로,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보상 심리로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총 14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8.4GW의 전력망 구축을 하고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 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어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같은 자리에서 당정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고 의무지출까지 덜어내 내년 예산안에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도 당정 차원에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아닙니까? 국가전력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에 없는 초대형 투자가 발표되고 또 발표에 맞춰 전력계획을 고치고 원전 시설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절차를 만들어 예산을 얹었습니다.

계획, 검증, 심의, 투자의 순서가 아니라 발표, 계획 수정, 특례 입법, 예산의 순서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순서의 딱 정확한 역순입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전제 확인 없이 퍼부어지는 자금은 축복이 아니라 자칫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듭 말하지만 저는 호남 발전에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떼어 낸 자동차의 경고등입니다. 또 하나의 경고등은 브레이크를 떼어 낸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경고등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 너무 쉽게, 가볍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이 검토되지 않고 후유증은 계산되지 않고 발표가 심의를 앞지릅니다.

대통령의 SNS 한 줄이 시장을 흔들고 대변인의 말이 반나절 만에—청와대 대변인이지요—대변인의 말이 반나절 만에 뒤집히는 나라, 이것은 특정 정책의 실패 이전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고장입니다.

과정이 왜 고장났습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브레이크는 누구입니까? 야당입니다. 비판하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이견을 말하는 공무원입니다.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입니다.

브레이크는 차를 세우라고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차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부딪히는 차입니다. 소위 필연적 필패의 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690일째 이어지는 이 특검 정국이 야당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투자계획을 검증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할 이 시간에 소환장에 대응하고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이런 필리버스터로 날을 세웁니다. 견제 세력의 에너지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소진되는 것, 이것이 수사 정국의 첫 번째 경제적 비용입니다.

두 번째 비용은 훨씬 더 은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신호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어떤 결정을 본인 공무원이 내린 뒤에 몇 년 뒤에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신호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신호를 받은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도장을 안 찍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 책임 있는 결정을 피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고 결정을 미룹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압니다. 수천조 원의 정책이 굴러가는 이 실핏줄이 바로 공무원의 판단인데 그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수사와 수사의 공포로 굳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새벽에 결단해야 할 공무원이 변호사부터 찾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용, 가장 큽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더 가벼워집니다.

○의장 조정식 윤상현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학생들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상현 의원 세 번째 비용이 가장 큽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더 가벼워집니다. 야당이 수사에 묶여 있고 공직사회가 움츠러들고 반대 목소리가 값비싼 일이 된 환경에서 다수당의 정책 결정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고 내일 시행하는 정책, SNS로 예고되는 세제, 검증 없이 부어지는 조 단위 자금, 앞서 말씀드린 경고등은 바로 그 경고등이 만들어 낸, 바로 그 환경이 만들어 낸 증상입니다. 바로 그 정책들이 무너지는 날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빚내서 주식 산 개미, 대출 낀 실수요자, 시장의 상인, 바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검 연장안에 반대토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기 전에 민생의 문제입니다. 견제 세력을 수사로 묶어 두는 나라에서는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져도, 아무리 켜져도 그것을 읽어 줄 사람, 멈추라고 말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야당을 죽이는 것은 야당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경제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떼어 내는 일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민생으로 돌아옵니다. 역사상 모든 대형 정책 실패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 결정의 순간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가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면 정치는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국정의 에너지가 과거를 파는 데 소진되고 미래를 설계할 힘이 남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상대가 수사의 대상인데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타협을 하겠습니까? 여야가 마주 앉아야 풀리는 민생법안들, 지금 몇 건이나 멈춰 서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민생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폭력으로 보입니다. 버젓이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 놓고 여당이 강요하는 대로 하자는 대화, 이게 무슨 대화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탕 해서 당장 잔치만 즐기면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걱정들이 아무 쓸데없는 잔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 무게와 책임감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예감 때문에 유시민 작가께서 이 정부가 실패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의 걱정과 제 걱정의 전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같다는 것은 뭔가 한번 멈춰 서서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한번 보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국민의 의원들입니다. 보복의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치의 오래된 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반복되어 온 역사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수사받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한 나라의 전직 최고지도자가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죄가 많아서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수사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린 탓이 더 크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무서운 점은 자가 증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을 당한 쪽은 다음에 이기면 정권을 잡으면 더 크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수사는 갈수록 커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3대 특검 510일이 2차 종합특검 150일로 이어졌고 이제 또 30일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대로면 다음 정권에서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만일 다음 정권이 현재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당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선례가 언젠가 여러분들을 향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미국의 스칼리아 대법관이 경고한 그대로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은 모두를 물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미국의 여야는 함께 그 제도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 방법은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와 정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법이 정한 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름만 정의인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2차 종합특검은 법이 정한 대로 7월 24일에 활동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중단이 아니라 법의 이행입니다.

둘째,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현행법의 인계 조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수사조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이며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 보완하면 됩니다.

셋째, 이미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유지는 정식 검사가 맡으면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소유지변호사라는 임시 장치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넷째, 만에 하나 앞으로 정말로 예외적인 수사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건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 관행이야말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특검법안의 연장 논의보다 먼저 이

루어졌어야 할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 어디에도 진상규명을 막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재판도 계속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 예외적인 기구가 법대로 문을 닫고 그리고 나라의 정상적인 수사기관들이 제 몫을 하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왜 안 됩니까? 안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수사의 필요가 아니라 수사 정국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적 필요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제도의 취지로, 세계의 경험으로, 민생의 논리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헌법의 조문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확립해 온 심사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 법안이 헌법과 얼마나 충돌하는지를 한 단계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심사의 대상을 확정해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료 직전의 수사기간은 30일 연장, 둘째 파견인력 130명에서 150명으로의 증원, 셋째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의 추가, 넷째 국방부 파견의 추가, 다섯째 공소유지변호사의 도입.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헌법의 5개 잣대로 차례차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잣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잣대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입니다.

법률은 원래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만을 겨냥한 법률을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입니다.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선고된 2007헌마1468 결정, 이른바 BBK 특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합리적 이유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 그리고 그 예외가 짧고 한시적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690일째의 특검에도 그 합리적 이유가 살아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정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미 정권이 교체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권력의 압력 자체가 사라졌는데도 말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소멸한 개별사건법률이 남기는 것은 단 하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차별적 취급뿐입니다. 허용의 조건이 사라진 개별사건법률의 연장은 그 자체로 평등 원칙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잣대는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심사 기준입니다.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은 없는가, 그리고 얻는 공익과 잃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가, 이 네 관문에 이 법안이 과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문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진상규명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 관문은 통과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관문, 수단의 적합성부터 흔들립니다. 특검은 이미 150일을 수사했고 법적 연장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기소 8명입니다. 30일을 더 주면 150일 동안 못 이룬 규명

이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낼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사회주의국가 수사 같은 인권침해가 진행될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최소한의 개연성조차 입증되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관문입니다.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이 법안은 침해의 최소성 이 관문 기준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권리를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같은 목적, 즉 잔여 수사의 계속을 이룰 수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현행법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수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인계조항입니다.

이 길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그런 길입니다. 지난해 순직해병특검이 종료되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잔여 사건을 실제로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바로 이 인계제도를 들어서 수사대상을 확대, 수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인계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이 있습니다. 또 상설특검법의 절차도 있습니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국회 스스로의 검토기구가 그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입법자는 그 중 가장 침해적인 수단, 즉 예외기구의 사후연장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정면 위반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잉금지의 네 단계 중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내세우는 목적이 노골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드물고 수단이 목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적합성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가치형량이라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 헌법재판에서 위헌결정의 다수가 갈린 지점이 바로 세 번째 관문,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원칙의 명제는 간단합니다. 같은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면 국가는 그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더 침해적인 수단을 택한 입법은 그 사실만으로 위헌이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심사의 대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법철학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을 정한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의 뿌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을 정한 원칙, 이 원칙의 뿌리는 19세기 독일 경찰행정법의 필요성 원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로이센 법원들이 세운 명제가 경찰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수단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를 표현한 유명한 경고가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 독일 기본법 아래에서 비례원칙으로 정식화되었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37조제2항의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에서 이같은 원칙을 읽어 낸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 원칙이 선언한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입니다.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것, 국가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의 뒤에 머물러야 하며 목적이 요구하는 최소한을 한 치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는 국가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쓸 수 있는 것이지 목적을 내세워 넉넉히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형사절차에 적용하면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수사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활동입니다. 소환, 압수수색, 출국 금지, 구속…… 수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모든 제한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방어권과 신속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그만큼 압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최소성 원칙은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이 시민을 어디까지 붙들어 둘 수 있는가라는 자유의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국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열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을 부수는 행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성 심사가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목적, 대안의 존재, 대안의 실효성. 이 법안은 세 가지가 모두 그것도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목적이 같습니다. 연장안의 목적은 잔여 수사의 계속입니다. 인계제도의 목적도 정확히 그것입니다. 수사기간 내 완료되지 못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 가라고 만들어 둔 조항이니 목적의 동일성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대안이 가정이 아니라 현행법의 명문입니다. 최소성 논증에서 가장 흔한 약점은 덜 침해적인 대안이 논자의 머릿속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자는 그런 수단은 현실성이 없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대안은 입법자 자신이 같은 법률안에 만들어 놓은 인계조항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설계해 둔 출구를 국회가 외면하고 더 침해적인 길을 택한 것이므로 대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방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셋째, 대안의 실효성이 실증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국수본 인계는 특검 연장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동등 효과성 시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직해병특검 종료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실제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간 선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로 이 인계제도를 가리키며 그 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안이 존재하고 작동한 권력이 있고 국회 자체 검토기구가 그 길을 권고까지 한 상태에서 입법자가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예외기구의 사후연장을 택했다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었다라는 변명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들 사이의 침해 강도 서열입니다. 인계제도는 기존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므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의 절차는 예외적인 수단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표준규격 속에서의 예외입니다. 반면 개별 특검법의 사후 개정 연장은 진행중인 수사의 규칙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침해적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하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층층이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데도 민주당 측에서 굳이 더 따져 볼 논리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더 있을 수 있는 반박을 이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성 심사에서 입법자의 판단 여지를 존중해 대안이 입법 목적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때에만 최소성 위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특검의 수사 연속성, 축적된 기록과 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계는 동등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첫째, 수사 기록과 증거는 인계 조항에 따라 그대로 넘어가므로 단절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조직의 간판일 뿐이라는 것.

둘째, 효과성의 근거로 삼을 특검의 실적 자체가 150일에 기소 8명으로 연장된 특검이 인계받은 국수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입증할 자료를 입법자가 제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침해의 최소성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넉넉해도 된다는 사고를 금지하는 원칙이고 그 철학적 핵심은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이며 이 법안이 그 정면적인 위반이 되는 이유는 같은 목적을 이룰 덜 침해적 수단이 상상이 아니라 현행법에 명문으로, 그것도 작동의 실적과 국회 자체의 권고까지 갖춘 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관문입니다. 법익의 균형성도 무너집니다. 이 연장으로 얻는 공익은 무엇입니까? 30일간의 추가 수사로 무언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기대입니다.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사 대상자들의 방어권, 신속한 절차를 받을 권리, 공직사회의 안정, 법이 정한 기한은 지켜진다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입니다. 확실한 침해와 불확실한 이익, 도대체 어떤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네 관문 중 세 관문에서 탈락하는 법률,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을 정직하게 적용하면 이 법안의 성적표는 이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잣대입니다. 세 번째 잣대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을 보면 체포·구속·압수·수색의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형사절차의 공적 주체를 얼마나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조문들입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신분과 책임을 정해 놓은 기관, 즉 검사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헌법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변호사 조항은 이 설계 바깥에 새로운 소추 주체를 만들어 냅니다. 법사위 통과 안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경력 5년의 변호사가 국가의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그는 검사가 아니므로 검찰청법상의 객관의무도 인사와 징계와 감찰의 책임 체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할 수 있

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므로 검사 아닌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 자체가 형사절차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명한 특검이 해산되고 나면 지휘계통 자체가 소멸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적법절차 원칙이 금지한 것의 정의입니다. 헌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한정한 취지를 법률 하나로 우회하는 이 조항은 훗날 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낳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잣대입니다. 헌법 제13조에 깃들어 있는 소급금지와 신뢰보호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물론 수사기간의 연장은 형벌조항의 소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벌이 아니더라도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7월 24일에 수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법률이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수사 대상자들은 그 약속을 전제로 방어를 준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종료 2주 전에 그것도 수사를 받는 쪽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쪽의 요청으로 뒤집는 것, 이것이 신뢰보호 원칙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를 사후에 추가하는 것은 진행 중인 절차의 규칙을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우연성이 한층 짙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잣대는 권력분립, 즉 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가 그리는 국가 권력의 설계도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합니다.

소추와 수사는 행정권의 영역입니다. 국회가 특검법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례적, 한시적 예외로서만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만들고 연장하고 다시 만들고 법을 고쳐 또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해산 후의 소추 조직까지 설계하는 690일의 관행은 예외의 반복이 아니라 권한의 이전입니다.

국회 다수파가 소추 권력을 상시 보유하는 체제,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국가 구조의 변경을 법률 개정의 형식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삼권분립 정신의 파괴이며 자유공화주의 정신의 파괴인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평등원칙 앞에서 개별 사건 법률의 허용 조건을 상실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관문 중 셋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적법절차가 금지하는 책임 없는 소추의 주체를 창설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금하는 불리한 사후 변경을 감행했습니다. 권력분립이 그은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개의 잣대에서 다섯 번 모두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 저는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위헌성은 의심 차원이 아니라 명명백백합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해서 헌법의 심사를 면제받은 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는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헌성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 수사 그 자체입니다. 위헌 시비를 안은 채 연장된 기간의 수집된 증거, 책임체계 없는 공소유지자가 수행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이 절차의 흠을 다툴 것입니다. 그 다툼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헌법을 어긴 수사는 죄 지은 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하려는 의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누르려는 찬성의 버튼은 여러분이 원하는 단죄의 무기가 아니라 그 단죄를 무너뜨릴 구멍이 될 것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국회 안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사설 등을 통해서 수사 기간의 반복적인 연장, 수사 대상 인력 확대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의 사설은 각 언론사의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수사 기간 30일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꺼번에 확대하는 법안인 만큼 언론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2026년 7월 6일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차 특검의 시한 연장과 공소변호사 요구, 거부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취지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또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차 특검은 이미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총 150일간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파견 검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경찰 등 파견 공무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미 드러난 종합특검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검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위배될뿐더러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16조의 검사의 기소·공소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도 위헌 소지도 있다.

재정신청 재판에서 법관이 검사 역할을 맡기는 지정변호사와도 차원이 다르다. 무리한 법 적용과 무분별한 수사 확대로 내란특검과도 충돌하고 새로 입건된 내란 재판 증인들

이 수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증언 거부 등으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저의가 아닌지도 의심된다.

수사 기간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그런데 3개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고 현재 2차 특검, 관봉권띠지 특검 등 5개에 파견된 검사가 64명이다.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에도 15명 안팎이 파견됐다. 선관위 특검, 조사기소특검도 예고됐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도 그 둘을 합친 특검을 계속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을 넘어 국민과 법치를 우롱하는 형태로 비쳐질 것이다.

서울신문 7월 6일 사설입니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제목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 150일을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또 건너뛰어서, 내란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2차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 명인 데다 선관위특검·조작기소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도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라는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설 둘을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지역에서 들은 말씀 하나를 전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 사람들이 맨날 누구 잡아넣는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뭘 팔아서 뭘 먹고사나 그 걱정뿐이라고, 정치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울 걸 갖고 싸우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법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말 여야가 제대로 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싸워 봅

시다. 이런 누가 다 먹고 버린 콜라병 따위와 싸우지 말고 물가를 놓고 집값을 놓고 일자리를 놓고 또 아이 키우는 문제를 놓고 청년들의 미래를 놓고 여야가 마주 앉아 밤새 싸우는 국회 그것이 국민이 세비를 주며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특검 연장이 아니라 민생이 본회의장의 첫 번째 안건이 되는 국회로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이 정한 기간을 다 쓴 특검에게 법을 고쳐서 다시 기간을 더 주자는 법안입니다. 예외로 태어난 기구를 상설 권력으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별건수사를 법으로 승인하며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고 검증 없는 예산을 얹어 주자는 법안입니다. 특검 제도의 원조인 미국이 20년 만에 스스로 폐지한 바로 그 길로 우리는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법안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이 법안이 또 민주당 의원분들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표결의 결과를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남게 됩니다. 2026년 7월 대한민국 국회가 수사기구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전에 법을 고쳐 늘렸다는 그 기록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그다음 날까지 그것이 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몇 시간에 걸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힌 목소리가 있었다는 그 기록, 훗날 이 관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오늘의 이 기록이 그 악순환을 끊는 논거로 이용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은 이기는 쪽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는 한 번 허물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비극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국민은 너무나도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결코 정파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는 그 울타리 앞에 서서 이것을 허물지 말자, 여야가 함께 발전시키자라는 말씀으로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부결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만적인 수사 정치가 끝나고 민생 정치의 계절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정치권이, 여야 모두 힘을 합치고 국민과 함께 뛰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긴 시간 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남인순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한규)

(17시09분)

○부의장 남인순 다음은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인순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합특검이 현재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 주자라는 점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한 분 와 주셔서 그러면 찬성토론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입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막아서기는커녕 이에 순응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것도 우리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한 청년 해병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은폐에 책임이 있는 33명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내란 가담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의 노력이 이제야 비로소 법원의 판결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이곳 국회의 일이라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사법절차는 그렇게 한 걸음씩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지금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계엄의 실행에 가담했던 것은 아닌지 그 최고 지휘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계엄의 밤 검찰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가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영장기각은 가두지 말고 수사하라는 뜻이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피고인 박성재는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장기각이 수사를 멈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계엄 이후에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보다는 나 자신도 내 사안을 챙기기도 어렵다, 그것만으로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실제 내란에 관여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법조인인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까지 관여됐을까?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밝혀진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내란에 아주 깊게 관여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참모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통한 지시로 검찰에서도 여러 사람이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필요했던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론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사안, 아직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최소한 지금 드러난 혐의라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만이 아닙니다. 종합특검은 그간 3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살펴보지 못했던 갈래들도 새로 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처음으로 수사 선상에 올려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의 불법 전용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을 보지 못한 수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앞선 특검이 핵심 관계자 대면조사를 마친 채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엄 사전 모의의 단서인 노상원 수첩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체포 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내놓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슈로 만들어서 주장했을 뿐이지 그 당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이거나 공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당연한 결과로 지난 9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도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마무리하고 특검이 정리하고 가야지 특검이 중단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시 국수본으로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게 됩니다.

굳이 3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라, 신속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종합특검 30일의 수사를 더하는 것마저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관저 수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 수사 의혹이 줄지어 남아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물증인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휴대전화는 수사 시한을 9일 남겨 둔 지난 7월 15일에야 확보되었습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짧은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사 종결이라는 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이제 곧 닫힙니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7월 24일에 멈춥니다. 수사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다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남아 있는데 법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가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례, 윤상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지속된 특검, 상설 특검처럼 이번 특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원안대로 30일에 한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은 이미 검찰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의 공석이 있는데 아직 법무부는 희망하는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파견 검사를 추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파견 검사가 없다고 재판을 그대로 공전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검사를 대신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수사기록을 공유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수사기관 간에는 사건을 공유하고 수사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진행했던 수사 내용과 그리고 기존 수사인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특검 간 수사의 정합성을 갖춰 재판에서 흔들림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종합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실체 규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확하게 검찰의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추가적인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660일이나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합니다. 그 660일이 무엇을 수사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냥 교통사고 사건, 간단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수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여러 명의 국무위원, 군과 검찰의 수뇌부가 연루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무거운 사건이고 쉽게 수사할 수 없는 중대한 권력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방점은 빨리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마무리하게 수사해야 추가적인 수사의 요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국민들도 권력범죄라서 봐줬다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특검이 만약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에서 검찰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내란행위에 관여됐다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수사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국수본은 기소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

수본은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가 해야 됩니다. 국수본과 검사가, 검찰이 함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에 맡기는 게 과연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수사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는 게 검찰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든 아니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든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재판부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박성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심우정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관련 기관 소관 부서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금 있는 특검에 30일의 시간을 더 주고 그 안에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저희가 발의한 법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님의 지적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은 최소한 시행 과정에서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개정 할 때는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들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대표로 각 당에 한 분씩 주요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24시간이 지나서 토론종결 신청을 할 뿐이지 만약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무제한적으로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에는 단 네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이 더 오고 계시니 다섯 분이 되는데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터 필리버스터는 당번을 정해서 일부의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그마저 자당의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자리를 좀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휴게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각 당에서 큰 언쟁으로 싸움이 나서 뭔가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때, 그럴 때를 위한 대비조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종합특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만약 상임위원장 배분 자체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국회 나머지 상임위는 보이콧하더라도 법사위에는 들어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만 거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목숨을 걸고 이 민주당의 법안을 막겠다라고 하신 의원들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분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좌석이 텅 비어 있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이 자리를 지킨다면 저희 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당연히 다수의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을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이 국회의 관행으로 남지 않도록 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면 정말 국회의원 다수가 모여서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그 대상이 되었을 가운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 표를 던진 백구십 분의 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은 여야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30일 정도 특검을, 종합특검을 더 연장하자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무제한토론까지 하면서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에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주자는 것, 이것이 이 법의 요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많은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찬성 주장의 구체적인 논거를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 왔던 범죄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우리가 놀랐던, 정말 충격적이었던……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 같이 의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나머지 관련자들의 내란 관여 행위와 다른 불법적인 권력형 비리가 별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내란에 관여된 아주 실무자급의 행위라도 수사기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수사를 했을 만한 중대범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란의 구체적인 사실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종합특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에 지시한 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종합특검에서 국회에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소개해 드리면 실제 종합특검이 어떠한 이유로 실무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특검법은 다른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특검법은 제2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1호부터 18호까지 구체적인 범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권한을 벗어나는 사건까지 수사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영장 발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동안 수사하던 사항 관련해서 조금 더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할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2호의 경우는 현행법은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청탁이 모두 김건희 씨를 통해서 제기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청탁이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종합특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현행법에는 김건희 씨가 청탁을 받은 경우로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관련된 국가계약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축소 해석하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관저 이전 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범죄에 관련된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종합특검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으로 사건 범위를 확대해서 김건희 씨가 관련된 권력형 개입 사건은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이 아니라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만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만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계약에 대한 청탁을 한 경우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종합특검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사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은 일부 복귀하신 분이 있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 종합특검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종합특검 원래 정수도 15명으로 내란특검 등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피의자 조사를 통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특검의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130명의 파견 공무원 상한을 1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니 늘려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검사법의 제정 목적에 충실하게 공소유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공소유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함해서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 특별검사법의 제정 취지가 공판 절차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동안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하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일부를 수사의 연결인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수사관은 수사관이라고 용어가 돼 있지만 법조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중견 법조인들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동일하게 법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 공소유지하는 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1·2차 수사기간 만료 및 3차 수사기간 진행 중에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 반면 윤석열 및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특검의 법 개정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30일의 추가적인 수사기간을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 동안 충분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법만이 아니라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상설화돼서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검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게 정치권의 관행이 되어 버린다면 정상적인 수사가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 생각과 같은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그리고 전 영부인이 국정에 관여한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이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듣기로는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도 수사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기소를 할 수가 없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실제로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듣고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명품백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건들 이러한 부분들의 사실관계들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부에서 수사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용기 있는 검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말고 선배 검사 출신인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수사인데 어떻게 소환을 제대로 할 것이며 어떻게 다른 피의자처럼 압박 수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공개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과거처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피의사실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조성할 것이며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지레 포기한 검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 검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권력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은 그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종합특검에서 계속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검사가 어떻게 국수본과 함께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검사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혹시 그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 역할을 하는 검사들을 위해서도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전 검찰총장, 검사 출신 전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사에게 영장에 관한 청구권 그리고 공소유지를 그대로 맡기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특검의 남용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부당한 특검이 잘못 활용되고 있는 사안들을 설명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초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권력기관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보다는 일단 수사와 국정조사, 윤상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

다.

그런데 하지만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정치권이 관여되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는 이번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분의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의혹은 풀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종합특검도 그러한 기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30일의 수사기간 연장 정도는 동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0일의 연장이 되지 않아, 그리고 사건 자체가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국수본이 수사를 했는데 검사 출신 전직 검찰총장 또는 지금 퇴직한 검사들이 박성재 판결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검찰 선배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혹시라도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사의 수사 관여도 믿지 못하겠다, 다시 특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특검이 아닌 검사가 관여된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국민의 재특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듣다 보면 다시 한번 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종합특검이 저는 30일 내에 어떤 결론이든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30일의 기간이라면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발언을 끝낼 때까지 아주 명쾌한 발음으로 힘 있게 말씀하셔서 3시간 정도는 쉬운 줄 알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많이 힘든데요.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하신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열심히 얘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고생하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을 내고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준비하시기 편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김대식 의원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들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나서는 내란이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관여됐던 다른 분들 사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는 초기에 수사 돼서 수사 대상으로 중형이 선고되고 누구는 뒤늦게 수사를 하게 되니 이제 되었다라는 정도로 운 좋게 피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기소가 이루

어지고 재판부에서 유무죄와 양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그대로 전부 다 읽을 것은 아니고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사항 중에 그 이후 종합특검에서 수사하기에 관련된 내용들, 박성재 그리고 합참 관련자들 그리고 검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검과 달리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사건 또 그 과정에서 부수된 사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와 함께 부정하게 업무에 관여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재판 설명자료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부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가끔 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우리 사회가 이른바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정보사령부 요원 등을 활용해 부정선거 조사·수사 등을 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정예요원 등을 추천받게 하는 등 부정선거 조사·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사실관계 배경을 먼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2월 3일 국회에 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합니다.

저도 이 재판 판결문을 보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던 사실들, 제가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동료 의원들과 빨리 계엄해제 표결을 하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국회가 문제였다면 국민의힘 당사에도 군이 투입됐어야 되는데 오직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전사 1공수여단 소속 5명은 23시 30분경 편의대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도착하였고 00시 56분경 1공수여단 소속 약 114명이 당사로 출동하였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는 합계 119명의 군인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에 더불어민주당 투입을 지시했고 무려 119명이, 그것도 특전사 1공수여단 정예군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출동하였던 상황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가끔 당시의 일들을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얘기하실 때 정말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희가 의연하게 그날을 견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 1분의 시간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국회의장님을 상대로 빨리 계엄해제 표결을 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는 몰랐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뒤에서 준비되고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에 같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정도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군도 국회에 출동한 군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군인들이 내란에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아니, 우리가 계엄해제를 하고서라도 이 국회를 벗어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잡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연하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12·3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주장을 통해서 종합특검 연장에 반대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동료 의원으로서 또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해제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두려워했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하다라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의 설명자료 중에 사실인정, 그중에 윤석열이 직접 관여하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랑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할 결심을 하게 된 경위.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차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수방사 병력은 일단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음.

당시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국회 경내로 들어간 병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었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 아래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 부여 사실에 대해 몰랐고 자신이 12월 3일 밤에도 곽종근, 이진우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12월 3일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군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일임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의 임무 부여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임박해지자 직접 곽종근, 이진우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을 한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입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의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음.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는 명시적으로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이미 출동한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구금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잡으라는 취지, 즉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여인형은 이미 이에 관해 증언하기도 하였고, 김대우의 진술 등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 조지호 역시 여인형으로부터 14명의 이름을 듣고 메모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방첩사 체포조는 5명씩 출동하면서 각 조별로 체포 대상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여받기까지 하였음.

피고인 김용현 역시 이름을 불러 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체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의미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쌍방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해당 당사자를 체포하는 내용으로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을 서로 인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피고인 윤석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일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점, 포고령 자체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무력화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이러한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7개 조가 출동한 이후인 00시 41분경 이들의 단체대화방에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메시지의 내용, 여인형이 위와 같은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국회로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엄선포문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고,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 정치활동을 금지, 이를 어길 시 처벌 등의 표현이 있는바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함. 특전사 병력들이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국회의사당 봉쇄, 안에 있는 사람 내보내고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수방사 병력들이 부여받은 임무 역시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의사당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었고 특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직접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게 의결을 못 하도록 하라,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하였음.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이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결

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철수 및 국회의 활동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재 종합특검에서 수사하는, 새롭게 수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세 가지 특검에서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특검에서 합참의장 그리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이 구속돼 기소됐습니다.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돼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식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되어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실제 군인들이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을 통해서 검찰에 다양한 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인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종합특검이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이 법원에서 인정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형법 제91조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문에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며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됨.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고 있음.

군대를 보내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도 조정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그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의 행위는 모두 폭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설령 개별적 폭동행위 중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의해 처벌함이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양형의 이유까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침. 형법은 내란죄가 위험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

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형법이 결과범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높은 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이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하여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었고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신뢰를 훼손한 것은 군인과 경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의 신뢰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내란으로 같이 처벌받은 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속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특검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놔두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은 관여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3일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온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셨다는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못 들어온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건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이건 여하튼 의원총회 장소를 혼동스럽게 공지를 해서 많은 의원들이 갈팡질팡하셨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정문 통제로 인해서 넘어오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는 넘어지면서 다치고 긁히고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 해제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적인 신체 안위는 고려하지 않고 담장을 넘으셨습니다.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누가 당사로 가게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그리고 당시에 수반된 여러 권력범죄에 대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존 법에 대해서 설사 반대했을지라도 30일 동안 마무리하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원내대표가 내란행위에 동조하기 위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오게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소개해 드렸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은 24시간 동안 다 읽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특검이 앞으로 진행할 수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국한돼서 말씀드렸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판결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검사가 됐다라는 전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현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내란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진실된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서 후에 그렇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내 코가 석 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 '아이고, 과장됐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비호하는 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챙기겠다'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판결문을 보니 정말 본인 코가 석 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내란 관련 사건들이 원체 많다 보니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건은 언론에서도 거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을 제외한 다른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도 제대로 언론에서 소개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는지 징역 25년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실을 명확하게 철저하게 밝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 분들이 사소한 면에서라도 불법적인 일에 같이 관여하게 되면 결국은 다 밝혀진다,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밝혀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 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실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조인의 정점이라는 법무부장관, 현직 법무부장관이 내란을 전후 해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법원 판결문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출입국 규제, 수용자의 수용 관리, 검찰 행정, 검찰 예산의 편성 등

에 관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다.

윤석열 등은 피고인 박성재에게 출국금지 조치,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와 같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 여러 장을, 이상민에게 국회, 언론사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 여러 장을 건네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소관 부처의 지시사항을,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성재는 위와 같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체포·구금이 예정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일 23시 3분경 출입국 규제 업무 등 출입국관리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전화해서 '계엄 발생한 것 알고 있느냐', '오고 있느냐', '빨리 오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배상업, 김정도, 이기흠, 이상배를 비롯한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은 그 무렵부터 12월 4일 01시경까지 각자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계엄사령부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오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더라도 법률상 출국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은 그에 응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여 대기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 박성재는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을 법무부 청사로 출근시켜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 체포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게끔 함으로써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행위에 있어 주요한 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부분이, 제가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들었을 때 법률가라면 너무나 간단하게 법을 찾고 헌법을 찾아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본인이 막지 않고 법무부 실무자들을 법무부로 다 오게 하고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 준비를 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실명의 법무부 직원들은 실제로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실무자가 가담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란에 관여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같이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단순히 출국금지 요청만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을 텐데 한 가지 더, 수용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위와 같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구금이 예정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한 뒤 구금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수용 공간으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일 23시 04분경 수용자의 수용관리 등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상황에서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여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서울구치소 현 수용률 155.9%, 추가 수용 가능 인원수 70명, 안양교도소 현 수용률 130.8%, 추가 수용 가능 인원수 320명 등 수도권에서 총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정본부장 부속실 교감 이서현에게 전달했고 신용해는 2024년 12월 4일 01시 4분경 그 보고서를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박성재는 그 무렵 이를 확인하였다.

신용해는 이와 같이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를 계속하여 주재하는 동안 이서현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문건을 건네 받아 이를 검토하였고 앞서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지시를 받은 취지대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용해는 같은 회의 석상에 있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장 양원동에게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을 정해 주면서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수도권 지역 최대 수용 여력 확보의 이유가 있음을 주지시켰고 양원동은 이승용, 장성일에게 신용해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신용해는 앞서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에 참석해 있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수용 여력 확보를 위하여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민열은 분류수사과 소속 가석방 업무 담당 서기관 박경식, 교감 박형배에게 그 지시를 순차 전달하였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시 저희와 같은 정치인·법조인을 수감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에 저희가 들어갈 수감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무려 3600명이 수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부족했는지 다시 실무자에게 긴급 가석방,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 정치인을 가두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조기에 풀어 주려고 했던 게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그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저희가 제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고 국회를 나가 수감되었을 때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본부 직원들은 저희가 수감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무가 없는 행위였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한 뒤 법무부에 구금장소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법률상 체포·구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용자 증가를 전제로 수용한 공간 확보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용해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은 이에 대비해서 수용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박성재는 신용해 등에게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한 뒤 수용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확인과 그 확보를 지시함으로써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신용해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제 코가 석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 고발이 잇따랐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촉구 및 하야 요구 등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 여부가 주목되었다.

한덕수는 12월 4일 11시 2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섬기겠다, 내각은 이 시간 이후에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에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하여 내각이 총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박성재는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정국 대응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되어 같은 날 14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여당, 국민의힘이지요, 정부, 대통령실을 말합니다—당정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모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경호,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김기현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정진석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폭거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회의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주장을 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정진석은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박성재는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지한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저는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당정대에서 논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회의가 있었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나경원·김기현 등의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당시 당정대는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다 책임을 지우려고 당정대에서 논의를 했다고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하야해도 안 되고 탄핵소추 당해서도 안 되고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당시 논의했고 이것을 박성재가 수첩에 주요 내용을 기재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정대에서 함께 이 사건 수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문을 상세히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과 실상은 전혀 달랐구나, 그래서 박성재가 제 코가 석 자다, 그런 논의에 함께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박성재는 단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과 다른 후속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검찰부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구상해서 2024년 12월 4일 자정 무렵에 있을 윤석열에 대한 보고 전까지 준비하려는 의도로 당정대 회의가 끝난 직후에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전화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선포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고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근거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포 사유로 지목한 입법독재, 탄핵소추, 야당의 예산 삭감 조치 등을 포함시킬 것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시절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 목록과 야당의 탄핵소추 대상자 목록을 첨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임세진은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 안홍균에게 비상계엄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그 뒤에 이 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다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범죄 혐의 수사에 대비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의논하고 향후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임세진으로부터 문건을 전송받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2024년 12월 4일 19시경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법률비서관 한정화와 회동하였다. 하지만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들은 이러한 비상계엄의 정당한 논리를 검토할,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법원이 판단하고 뒤에서 이러한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에게, 검찰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명의 현직 공무원과 검사의 이름들이 나옵니까? 수사 대상자였지만 기소되지

않은 검사들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아니 법무부장관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의무 없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명확하게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거부하고, 국회에 대한 군지휘부의 강력한 진압 작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던 군인들과 비교해 보면 계엄이 이미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불법적인 계엄의 정당화 논리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과연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범죄행위에 관여하게 만든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의 고위공직자가 과연 법조인으로서 국민 앞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분들이 과연 과거에는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는지,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라고 하면 무비판적으로 이제까지 정치적인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닌지…… 당시 실무자로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여럿 사표를 내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은 실무자들이 여전히 법무부에 검찰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과연 앞으로 공익의 대변자로 공소청에서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종합특검은 당시 모든 관련 검사를 수사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사의 최종적인 지휘감독을 책임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성재에 대해서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이 일으킨 이와 같은 폭동에 있어 피고인 박성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에 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범죄자집단이자 반국가세력인 국회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정당한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성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뉴스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헌법을 찾아보고 계엄법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의 요건이라는 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평소에 계엄 행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법을 보면 1분도 걸리지 않고 당시 윤석열이 선

포한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십 년 동안 검사와 법조인으로 근무했던 법무부장관이 당시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평소와 달리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보자고 건의하자 이를 거부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감찰관 류혁이 이 회의가 비상계엄 관련 회의면 사직하겠다고 항의하자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며 사직을 승낙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인권국장 승재현이 포고령 제1항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77조제6항에 위반될 염려가 있으니 법무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이를 묵살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으로부터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기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 이유를 묻거나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부에서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법무실장 구상엽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그리고 군인의 물리적인 동원력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01시 47분경 그리고 02시 08분경 각각 김주현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구상엽 등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더라도 이것을 따르지 않을 생각으로 법조인들을 활용해서 거부의 법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변필건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필건은 피고인 박성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류길섭의 계엄상황실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현직 검사인데 검사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성재는 또 다른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서 결국 검사를 계엄상황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겁니다.

당시에 똑같은 검사 출신의 현직 검사인 법무부 직원들 중에도 누구는 비상계엄의 사후적 합리적 사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이게 사장된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일단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한규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가면 곽규택 의원님이 오래 해야 됩니다. 경청하다가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5년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놀라는 기사가 많았고 국회 내에서도 어떻게 군인을 동원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징역 25년을 선고받느냐 놀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불린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3 내란’이라고 부르는 표현, ‘친위쿠데타’라고 부르는 표현 모두 법원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12·3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잠정적 계엄·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월 3일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 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는데 이는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다.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내란 준비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은 노상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노상원의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다. 김용현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는 여인형에게도 지시했는데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다.

윤석열과 추종세력은 노상원의 수첩이나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혹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을지연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실행해 보기도 하였는바 이는 내란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12·3 내란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박성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화와 만나 논의하였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2·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이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가벼이 여긴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앞으로 쉽사리 봉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및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이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 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박성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 박성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박성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피고인 박성재가 12월 3일 내란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박성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김주현에게 그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윤석열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박성재의 판결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성재는 단지 내란을 막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내란 이후에 총리 공관에서 이루어진 당정대의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럿 참여한 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김용현을 포함한 경찰·검사 출신들이 수사를 받게 하여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논의를 했고 그러한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법무부 직원에게 시켰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 판결문 자체는 당시에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논의를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 당정대의 회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논의를 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이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소개해 드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판결문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 판결문을 보고 나서 박성재의 관여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 추가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관여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께서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앉아 있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도 윤상현 의원님 발언하시는 것 세 시간 동안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이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고요.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예정대로 8시까지는 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온 국무위원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그들 중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노상원 수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일까.

내란특검 수사와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통해 12·3 내란의 전모는 거의 드러났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해답이 나와 있다. 재판부는 군검찰, 검찰 및 특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들의 내밀한 발언과 행적을 자세히 서술했다. 일부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요지가 밝혀지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도된 바가 없다. 내란의 이면을 재구성해서 공개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12월 3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총리 한덕수,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및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 여섯 명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지시사항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국무회의를 개최해 절차적 외관을 갖추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최상목 등 일부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다.

박성재는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윤석열은 이날 19시 41분 박성재에게 전화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성재는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중인 19시 49분과 8시 5분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에게 전화했다. 20시 16분 대통령 집무실에 연결된 대접견실에 도착해 대기하던 박성재는 20시 27분 윤석열과 김용현이 함께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로부터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출국금지 조치 등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 여러 장의 문건을 받았다.

박성재는 21시 9분 한덕수, 이상민, 조태열, 김영호, 조태용 등과 함께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거기서 조태열이 조태용에게 알고 있었느냐, 비상계엄 관련 구체적인 정보 보고라도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조태용은 말 없이 고개를 젓는 것을 지켜봤다. 이상민은 21시 13분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해 비상계엄 시 언론에 대한 특별조치를 언급한 제77조 3항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 5호 규정을 찾아 박성재, 한덕수 등과 논의하고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당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단 여섯 명의 국무위원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중의 일부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부른 겁니다.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일 먼저 대통령실에 갔던 이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몸으로 막았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2년 동안 혼란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행위를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사로 30년 이상 재직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21시 52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이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묻자 김용현은 윤석열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 주면 좋겠다고 답했고 이에 조태열이 다시 그러면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아니, 언론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말한 게 뭐가 대수입니까? 군인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김용현이 그런 궤변을 냈다고 하더라도 박성재 장관이 언론보도는 취소하면 되고 군은 돌려보내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미 언론에 이야기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에 넘어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성재는 그 상황에서 22시 4분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국무위원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박성재는 22시 18분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자 양복 안주머니의 문건을 꺼내 참석자 명단을 적어 둡니다. 그리고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불러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 보라고 말했습니

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법무 참모로서 한 일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야 되니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야 될 사람이, 30년 넘게 법조 경력이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기껏 한 게 국무위원 숫자들 서명받는 걸, 국무위원 숫자를 챙겨야 되고 서명받는 걸 놓치지 말라라고 지시한 게 전부입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처음에 여섯 명이 모였을 때 그 다음 추가적으로 국무위원 숫자가 모여서 정말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했을 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 비상계엄 안 된다, 불법적이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설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구속이라도 했겠습니까? 기껏 해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장관이 뭐길래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지 못하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저 대세에 따르고 판결문에서 얘기하듯이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관련된 후속조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될 일들이 남은 겁니다. 당시에 김용현은 박성재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핵심 국무위원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에 관한 문건을 미리 작성해 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는 긴급성·보안성을 고려해 담화 시각을 기준으로 두세 시간 전에 계엄하고 관련된 핵심 국무위원부터 먼저 소집해서 토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논의가 끝날 때쯤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해 정족수가 채워지면 바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은 김용현의 진술입니다. 봉투를 들고 대통령집무실로 들어간 것 같다. 봉투에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줄 지시사항과 참고 자료도 있었을 것이다. 12월 2일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윤석열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엄과 관련돼 장관들과 협조할 일이 있다고 말씀했더니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드리라고 해서 내가 정리했다. 내가 대통령집무실에서 건넨 문서에는 아마 협조사항이 적혀 있고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 미리 읽어 보라고 준 것으로 기억한다. 각 국무위원에게 필요한 협조 내용일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박성재는 변명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고 법무부장관실로 돌아와 이를 파쇄했으며 나머지 문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포고령이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아니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은 CCTV하고 배치됩니다. 대접견실에서 나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사등분 한 크기로 접은 문건을 꺼내 펼쳐 읽고 다시 넣는 CCTV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김용현이 박성재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박성재가 법무부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정대회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12월 4일 01시 0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로 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회동하였다. 이어 01시 51분 대통령집무실로 돌아와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김주현은 박성재에게 전화해 의견을 묻고 02시 09분 법률비서관 한정화에게 전화해 출근을 지시했다. 김주현과 한정화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담화문 작성 실무를 담당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은 비상계엄 선포 후 김주현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다. 김주현은 12월 4일 08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는데 문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김용현이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으로서 부서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문을 만들어냈다.

12월 4일 12시에서 15시 30분까지 서울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회의가 열린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와 박성재,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김주현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나경원·김기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용현과 군 인사, 경찰에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윤석열은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하야, 탄핵 등 중도 임기 중단은 안 된다. 윤석열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성재는 당정대회의를 마칠 무렵 12월 4일 15시 28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과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을 반영해 국회의 권한남용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과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늘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당정대회의를 가고 예전에 당정청이라고 부르는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과 정부가 법안 처리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국회가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국회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행정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조율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된 부분들은 김용현과 군 인사, 경찰에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윤석열은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망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범인 도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라고 하는 것은 당정대가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법을 얘기하신 겁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당이 무너질지 여부를 당정대에

서 논의할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의 하야, 탄핵 등 중도 임기 중단은 안 된다. 다행히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님들이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서 탄핵까지 됐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당정대 논의가 확고하게 계속됐다면 윤석열의 하야, 탄핵 등 중도 임기 중단을 막으려는 당정대의 시도가 계속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검찰이지 현직 검찰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결문에 나오는 법무부 간부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라 현역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 검사 그리고 나머지 법무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슈된 것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자체가 관여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종합특검법 연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는 수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입니다. 물론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합참에 대한 수사에서 참모총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실무진에 대한 중간 간부급 수사도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오후 11시께 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기각으로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특검이 밝혀야 될 과제는 더 분명해졌다.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고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참여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으며 심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그 실마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박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중앙지법 형사 33부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선고와 동시에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두 차례 영장기각과 1심 징역 25년, 이 간극은 영장심사와 본안재판이 다른 절차라는 점을 보여 준다. 구속영장 심사는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본안재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형사책임을 판단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박성재 1심 재판부, 왜 심우정을 언급했나'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성재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단순한 비상대비 업무로 보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후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와 검찰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들이 서로 떨어진 행위가 아니

라고 봤다. 정치적 반대세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출국을 막고 체포한 사람을 수용하며 합동수사본부에 수사인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연속된 강제력 체계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께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다.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총장 심우정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문 내용입니다.

또다시 판결문 인용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심우정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관련 기관의 소관 부서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이 기사는 이 대목이 바로 심우정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에서 심 전 총장으로 지시가 전달됐고 심 전 총장에서 대검 소관 부서로 이어졌으며 대검과 관련 기관 사이에 실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 수사부서, 관련 기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실행 구조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은 박성재, 심우정 통화 이후이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 통화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결국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은 통화 이후 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다. 구체적으로 심 전 총장이 지시를 누구에게 했는지, 대검의 어떤 부서가 움직였고 파견 인력 명단이 검토됐는지, 계엄사령부·국방부·법무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간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특검은 재판부가 '심우정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심 전 총장의 실제 행위와 연결해야 한다. 이미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첫 번째 통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판단했다.

'피고인 박성재와 심우정의 첫 통화는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음'.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두 사람의 통화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일반적인 상황 공유를 넘어선다. 윤석열의 지시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였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지시하고 그 사안을 재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즉 재판부도 대통령, 박성재, 검찰총장, 대검을 통한 라인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박성재에 대한 판결이었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우정의 관여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심 전 총장은 기소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에게서 지시를 받을 당시 그 출발점이 윤석열 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합동수사본부가 누구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되는지, 검찰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시의 경로와 심 전 총장의 인식 정도가 단순한 인사 협조였는지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특검이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 관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 측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원론적 법률 검토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건 제목이 아니라 작성 배경과 용도다. 누가 작성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은 언제 보고받았으며 전무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포고령 위반자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누가 수사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지까지 검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물론 심 전 총장 측이 내세울 가장 강한 반론은 검사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무산됐고 검사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실제 파견되지 않았으니 실행된 범죄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성재 사건 1심 재판부는 실제 파견 여부만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출국금지, 수용시설 확보, 검사 파견 협조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따졌다.

'피고인 박성재의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인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하면 박성재 전 장관도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본안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우정 영장 기각 역시 사건의 결론일 수 없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성재 1심 재판부가 남긴 질문은 아직 기각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박성재 사건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불법적인 지시,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수감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출국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계획 그리고 관련 부처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지시 이런 부분이 보고서 작성하고 계획 수립까지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험범은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라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대검에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대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만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긴장했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실제로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하고 헌법을 검토하면 불법계엄

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30년 이상 검사를 수행한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법조인으로, 검사로서 일했기 때문에, 특히 사무실에서 참모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처럼 30년 정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3년, 아니 법대에서, 아니 법학개론에서, 아니 헌법을 읽을 수 있는 누구라도 당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고 하급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지속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로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새롭게 특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동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종합특검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특검의 연장도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정은 알지만 30일 정도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그래도 달리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특검이 무한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종합특검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완전히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종합특검의 권한 밖입니다. 그거는 안타깝더라도 그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30일 동안 새로운 사건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동안 수사한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수본으로 가면 국수본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다시 부를 겁니다. 직접적인 심증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국수본은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검들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 수사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중요 인물을 찾아내서 구속하고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 검사들은 거의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수많은 법무부 파견검사들, 대검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국수본으로 사건이 이 상태로 이송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공수처와 함께 새롭게 판을 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건을 이관받도록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의 국력은, 특검을 1년, 2년 계속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30

일 동안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사를 연장하자는 것은 동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법사위에서 아니면 당내에서 '더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 나중에 또 30일 수사할지도 모르니까 반복하여 연장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법안 소위 위원들은 '그렇게 되면 이번에 30일 연장하려는 명분 자체도 사라진다.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이번 특검의 연장은 딱 30일로만 하자'라고 하는 데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인순 부의장, 박덕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특검이 해야 될 중요 수사는 딱 2개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아까 윤상현 의원님이 설명할 때는 다른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일리 있는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셨고 특검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병폐, 잘못된 사례들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특검이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해야겠다. 선관위 특검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을 여야 합의해서 하고 그 이상의 특검은 상설특검이든 어떤 특검이든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특검의 두 가지 수사 대상이 뭔지를 들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해하는지, 왜 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 대한 수사입니다. 중요 사건 중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수사고 두 번째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방해한 그 삼십 분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두 가지 수사를 하겠다는데 방해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특검 연장 반대 1호 토론자로 나와서 특검을 반대하자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주요하게 수사를 받고 소환 통보를 받은 딱 세 분 아닙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특검을 반대하자고 하면 이건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이 하는 얘긴데 그러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특검 연장을 반대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삼십 분의 분들이 정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온몸으로, 육탄으로 막으면서까지 수사 방해를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로 그 정도, 삼십 분 정도가 나와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관리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분들하고는 혐의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안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가시는 것도 피의자로서 변호의 기법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분들 유죄로 선고하는 거, 저희한테 전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로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막은 적이 있고 고발도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걸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특검이 아니었으

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특검이 마지막으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이게 막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국민의힘에서 막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검사 실무자들이 몇몇 더 관여됐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 검사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걸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두 가지 사건, 전 검찰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 주요 사건이 남은 종합특검에 대해서 굳이 30일의 수사기간도 더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께서 '내가 막고 이렇게 목 놓아 외쳐 봤자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통과시킬 겁니다. 저처럼 찬성하는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 표시를 하더라도 저희는 통과시킬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이 필리버스터 반대, 24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중단하는 표결할 때 참여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안 하셨지요. 그리고 법안을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면, 저희는 단독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처리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진지하게 배려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특검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저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일부가 특검이 연장되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데 같이 관여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내란은 종식됐고 특검이 할 만큼 했다, 종합특검으로 30일까지 연장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특검은 없다,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여당으로서 이것을 도와줄 거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지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특검으로 계속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은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고 저희에게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합특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장 특검에 찬성해 주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30명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받게 됐는데 그 수사하라고 이 종합특검을 연장하는 것을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합특검이 30일 동안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

원들 삼십 분에 대해서 다 기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두려우시군요?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실제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범하신 게 있습니까?

(「특검에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기소하는 모양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할 때는 중간에 끼지는 않았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민주당 의원님이?」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의원이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특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민주당에 따로 보고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특검, 특검보, 파견 수사관들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실은 알려질 겁니다. 비밀은 영원히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할지 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수사기간 동안, 이 30일 동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30일 내에 마무리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수본으로 가고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국수본의 수사, 영장 청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3대 특검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종합특검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잔여 수사를 계속해 왔고 이제 그 수사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입니다. 단 30일, 30일의 기간만 추가적으로 주어 주신다면 특검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특검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시 수사되는 이런 수사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종합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덕흠 김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부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처음 의장석에 올라왔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첫 사회를 보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지금 제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렇게 강행 추진되었습니다. 야당 소속 부의장으로서 작금의 상황 속에 무제한토론 사회

를 맡는 것에 대해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험난한 대립 속에서도 하루 속히 국회의 문은 열어야만 하고 부의장으로서 의장단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지난 부의장 선출 당시 이 자리에서 강조했듯이 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에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배려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양당 원내지도부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원 구성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무제한토론 역시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경청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 국민께서 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품격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20시11분)

○부의장 박덕흠 곽규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덕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또 통상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법사위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사위 소관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제한토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법사위 소관 법률, 이런 특검인 거지요, 특검법.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난 정권의 인사들 보복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발의해 왔던, 그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로서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것 참 힘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30일 정도 더 하는 것,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특검법의 역사를 벌써 다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국회에서 통과시킨 첫 법이 이른바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 3대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실적도 없는 수사를 하면서 굉장한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3대 특검의 개별 법들에 규정된 수사기한은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연장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판단을 해서 3대 특검을 더 하고 싶었는데,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때까지 법을 바꿔 가지고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적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3대 특검에서 온갖 잡음이 있었지요.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 또 채상병 사건 수사했던 특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바꿔 가지고 수사기간 연장하려고 하니까 낯이 간지러웠겠지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생판 들어 보지도 못한 특검을 하면서 그 3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었던 모든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했는데, 이제 7월 24일로 원래 마무리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영장기각률 67%, 3분의 2가 기각된 것입니다.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고 특검이나 특검보나 설화에 휩싸이고 그렇게 됐는데 한 달 더 연장해 달라, 특검법에는 자체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썼어요. 120일 수사기간 다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30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을 바꿔서 30일 또 연장하는 것을 해 주면 이번 사건은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이제 이게 시작된다고 봅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아마 그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또 추진하겠지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명분을 찾는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특검 연장, 특검 연장.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가동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 가면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4년 내내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재판받아야 할 때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를 판매한 것이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29억 원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겠지요? 채무자는 집을 사는 사람인데……

제가 검사 생활도 15년 했고 변호사 생활도 10년 했지만 이런 식의 거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아, 이게 집을 판 게 아닌가 보다, 그냥 근저당 설정해 놨다가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시 그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명의를 돌려받으려고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해설을 해 놨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단지에 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자 고시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시행자 고시가 되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입주권을 사고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물딱지라고 한답니다, 물딱지. 물딱지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스스로 지금 대출 규제, 부동산 사고파는데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대통령 스스로가 시범적으로 보여 준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언론에 제기가 됐습니다. 29억이니까 2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2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는 쪽에서 지금 당장 그 돈을 낼 수가 없다, 매수대금 낼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그 대출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집을 파는 대통령께서 근저당을 친절하게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남이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를 썼다면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마귀지요, 마귀. 그런데 내가 하면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 준 겁니다. 그 밑에 관련 댓글이 있습디다, '더불어근저당'.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마디로 표현된 댓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게 정말 민주당이 자랑하는 내로남불의 DNA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왜 못 믿느냐?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검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은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검찰제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정말 집중하고, 모든 부처에서 수사관까지 충원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특검법을.

아니 다른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는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민주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은 남용이 안 되는 구조입니까?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3대 특검이 여실히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당장 강제수사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됐지요. 돈을 줬다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같은 시기에 나온 증거가 있었는데 민중기 특검, 그것을 묻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이어받은 합수본에서 공소시효 도과됐다. 그 사람이 지금 부산광역시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가 내로남불입니까?

그래서 이번 특검 30일만 더 주면 깔끔하게 이제 더 이상 특검 안 하겠다고요? 국민보고 그걸 믿으라 이겁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한 것 당장 취소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거 30일 연장하는 것,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다 설득해 가지고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의원님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소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개별 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법부터 각 특검법들의 주요 내용이나 수사 과정과 또 수사 성과에서 확인된 심각한 문제도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

정안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존 개별 특검팀의 결정까지 협의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정권의 반대 세력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야말로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정치보복법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또한 수사라는 사법행정이 상시적으로 입법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거대 여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헌법적 가치와 대원칙을 기준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밀실에서 헌법원칙과 특검의 본질을 무시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만들고 군사작전하듯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일방적으로 넘어서더니 결국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례이자 협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

다.

그러던 협치의 관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깨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핑계 대며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같은 특별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인된 정규 국가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가 상설화되는 순간 국가의 상설 사법시스템은 마비되고 불신받기 마련입니다. 헌법이 설계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사법의 영역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독립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매번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사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세력이 판을 짜고, 그 세력이 추천한 인물이 수사와 기소권을 쥐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 선동용입니다. 한시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을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1차로 진행된 3대 개별 특검의 수사기간이 합해서 5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또 120일이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600일이 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서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예외적인 특검의 모습입니까? 2년 가까이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탈탈 털어서 수사하는 기구가 어떻게 한시적 기구입니까?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아니라 정권과 여당의 입맛에 맞춰서 표적을 정해 끝날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정치적 먼지털기식 수사일 뿐입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검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며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들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지각을 가진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보복을 위한 상설기구화, 사법제도의 사유화이자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개별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대 개별 특검에서 많은 압수수색과 조사, 관련자 소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실은 드러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잇따라 기소를 포기하거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수사 범위만 한없이 넓혀가면서 용두사미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간을 또 연장하겠

다는 것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언론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혈세를 펑펑 쓰며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예외적 기구인 특검을 상설화하여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보복의 흉기로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의 이런 뼈아픈 지적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 특검 연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번 추가 연장 30일을 합하면 전체 특검 기간은 약 700일에 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특정 정치적 사건을 규명하겠다며 단일 특검 수사를 2년 가까이 끌고 갑니까? 끝도 없이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이 무한 연장 특검법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법을 바꿔 가며 기간을 늘리는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폭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종합특검 연장법은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 민주당의 공천 장사, 즉 공천 뇌물 카르텔로 불리는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오염시키고 종교단체와의 불법적 유착을 통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 심각한 헌정 문란 범죄 의혹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금품과 명품시계가 오갔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엄연한 의혹들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어 내서 600일이 넘는 특검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썩은 부위는 가리기 급급한 이 기가 막힌 내로남불,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의 특검론은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일 뿐이며, 자신들의 부패를 덮기 위한 방탄용 연막술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것은 대한민국 정교유착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시계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정교유착의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 과정 어떠했습니까?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들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지역구 사무실의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초기화하는 등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만들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정권에 아부하는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결론을 어느 국민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스스로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했습니다. 정작 온갖 억지 의혹에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자당 의원의 명백한 금품수수와 증거인멸 사건에는 입을 싹 닫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봐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중진 의원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공천 뇌물 카르텔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갔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돈을 바치면 단수 공천을 받는 그런 공천 과정이 마치 거래의 대상으로 타락했다는 정황이 녹취록과 탄원서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비리와 범죄의 정황을 담은 고발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의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아무런 징계나 조사 없이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의 수뇌부가 이 부패 카르텔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공당 전체가 공천 뇌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 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서울시민 65% 이상이 당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찬성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찰 수사로는 권력의 압박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펄쩍 뛰고 야당의 정당한 특검 요구를 대통령을 엮기 위한 선 넘은 정치공세라며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공천 부패 의혹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비겁하게 숨으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특검 폭탄을 던져 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민들께서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철벽 방탄을 치면서 오직 정쟁용 특검법 개정안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이라는 헌법적 예외 제도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사유화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동시에 실시해야 공평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는 권력분립

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과 기관들을 특검 수사라는 위협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재판 과정을 통제하고 전임 특검팀이 내린 판단과 무혐의 결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악법입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도 정권과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들춰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팀을 바꾸고 기간을 늘리고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법살인을 국회가 합법화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지금부터는 특검의 본질 또 3대 개별 특검과 종합특검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종합특검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검찰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상설적인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최후의 예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사 범위와 조직,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반 검찰과 유사한 상설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제한 특별검사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언제나 예외성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시돼 왔던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된 1차 3대 특검. 2025년 6월 18일 그리고 같은 해 7월 2일부터 약 51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특검 종료 이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2026년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출범했습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 마감시한인 2026년 7월 24일을 앞두고 있고 그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입니다.

1차 3대 특검에서 내란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초에 특별검사 1명 아래 무려 6명의 특별검사보를 두었고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60명 이내의 파견검사, 10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다며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파견검사를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무려 140명 이내로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수사기간도 당초에는 준비기간 20일과 기본 수사기간 90일, 대통령 국회 보고를 거친 1차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을 요구하는 2차 연장 30일, 합해서 최장 17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승인 연장 한도를 2회 늘려서 수사기간을 최장 200일로 확대했습니다. 7월 2일 개시한 수사는 법정기한을 끝까지 채우며 결국 12월 14일에야 끝이 났습니

다. 엄청난 예산과 역대급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초라한 수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의 경우에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같은 해 7월 2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라는 대규모로 출발했고 특검법 개정 시행을 거치며 특별수사관은 50명 이내,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비대해졌습니다. 당초 기본 수사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연장되어 최장 140일, 다시 연장되어 170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28일에서야 겨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방부와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음에도 사법적으로 유의미한 혐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는 호된 비판만 떠안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2025년 6월 12일 임명되고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초기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였지만 법 개정으로 특검보는 6명까지, 파견검사는 70명, 파견공무원은 140명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또 연장, 연장해서 원래 170일이었던 수사기간이 20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8일에서야 만료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논란만 일으켰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와 불법적이고 도덕적인 논란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거대한 3대 특검의 무리한 확장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존 수사의 미진했던 부분을 파헤치겠다며 네 번째 특검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을 올해 2월 재차 출범시켰습니다.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2월 25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권창영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이후 1차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에 대통령의 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아 내면서 오는 7월 24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소진할 상황입니다.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수사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수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꺼내 드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법적 제도를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고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정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를 개조해서 끊임없이 내란 이슈의 불씨를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당리당략이 목적인 것입니다. 경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룰을 매번 바꾸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뜯어고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극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이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4개의 특검에 동원된 검사 또 검찰수사관, 파견공무원 이런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2025년도 작년에

검찰의 장기미제사건이 2024년에 비해서 약 50%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3만 7000건에 달하는 장기미제가 쌓였다. 결국 한 사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7만 건, 7만 명 정도의 사건 관계인이 이 특검 때문에 결국 자기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난 3대 특검,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이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검 개인의 과거 비도덕적인 행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또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 과거 법관 시절에 주식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그래서 본인만 상폐 전에 얼른 팔고 나온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건 수사한다고, 그걸 목적으로 정해 놨으니까, 그걸 수사 범위로 정해 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정말 공무원 1명이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의 유서와 노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관은 나를 조사실 밖 구석진 복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김선교가 시킨 거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는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공무원직도 유지하게 해 주겠다'.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자 수사관의 태도는 돌변했다. 반말로 '이 새끼 안 되겠네. 정신 못 차렸네'라며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나는 그 좁은 방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 죽어 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수사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피의자의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인격을 말살하고 협박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골방에 가둬 놓고 허위 진술을 압박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발족시킨 특별검사, 그 안에 포함된 수사관의 행태였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행정가로서의 양심, 거대한 특검의 폭력 사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이 비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중기 특검팀과 그 시작을 맡긴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잔인했던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해서 수사 과정의 참혹한 실태를 밝혀냈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반말과 협박을 일삼은 파견 경찰관과 수사관 4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여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 행태입니다.

또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한 것 중에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단서를 잡겠다면서 김 서기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정치적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수년 전 개인적인 업무관계를 털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지한 다음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래의 특검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명백한 표적형 별건수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서기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부여한 특정 수사 범위 내에서만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수사 권한 밖의 별건을 인지하여 기소한 것은 영장주의를 우회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기소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민주당 의원님들 늘 말하지요, 검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수사 권한 밖의 별건을 인지해서 영장주의를 우회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말씀하시지요. 특검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가장 심각했던 것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과정이었지요.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요 또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참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지요. 조은석 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위반과 주한미군 공식 항의 사태, 이것은 수사 성과에만 매몰된 채 한미동맹 등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등과 관련해서 드론작전사령부가 방공관제사령부에 보낸 협조 공문 등 대한민국 군 내부의 기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5년 7월 21일 경기 평택의 오산공군기지 내 한국공군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소는 한미 연합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 내에 위치해 있으며 오산공군기지 자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주둔하는 합동기지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약 석 달이 지난 2025년 10월 초에 주한미군 측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미군 측은 특검팀이 주한미군 측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미군 기지 내 핵심 시설에 진입한 것은 한미 SOFA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자료와 장소가 한국군 소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접근하고 기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군 관리구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미군과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내란특검팀은 한미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에 대한 미군 측의 공문 항의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외교가에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을 두고 향후 예정된 한미연합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됐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무리한, 적절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부담을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이른바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이명현 특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고 1명 구속영장 발부됐었지요. 결국 이명현 특검팀 수사는 겉으로는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권 정치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답정너식 표적 수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과잉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수십억 원의 혈세와 수사력을 쏟아부었지만 초라한 수사 성과와 심각한 사법 신뢰의 훼

손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10건 청구해 가지고 무려 9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었지요.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했겠습니까? 특검이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민주당에서 제기한 정치적 정황과 선동에만 기대어 무작정 사람을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특검은 직무 권한의 남용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이 확인됐었습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구명로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명분 아래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대형 종교단체,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 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3대 개별 특검의 폐단과 문제점들이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30일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민주당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특검을 어떤 의도로 민주당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연장하는 것, 30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지요. 8월 1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의 완성 뭐 이런 거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이라 하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터졌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논쟁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가 필요하다.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 이런 별도의 법안까지 냈지요.

원래 검찰의 보완수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 전 김민석 국무총리,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이슈를 없애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태도를 돌변했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층에서조차, 국민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아마 이 30일, 30일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30일, 2차 종합특검이 조금 더 수사를 해 주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 국회의원들 불러 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싶겠지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이 이슈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요, 30일 동안이라도.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30일을 연장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기소가, 수사가 독점되면 권한 남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특검법만은 30일을 연장해야겠다 하는 것, 민주당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본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권창영 특별검사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였지요.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철저한 내로남불입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증 그리고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논리도 근거도 필요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폭주를 보여 줬습니다.

당시에도 2차 종합특검이라는 대형 특검에 무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수사 인력의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자금을 한 순간에 잃어 버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마약범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 사건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먼저 지켜 달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그 흔한 예산 추계 내역서나 왜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고나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가의 핵심 수사 역량을 사당화하여 낭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은 외면한 채 오직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특검의 기간도 연장하고 특검의 덩치를 더 키워서 더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다수의 주요 언론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잉태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

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권과 그에 동조하는 우호 정당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낙점하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인 특검 임명부터 한쪽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아무리 법의 언어로 포장된들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편향성과 수사권의 사유화 문제는 법학계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한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님의 언론 칼럼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차례의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수많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번째 특검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특검은 한마디로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예외적인 조치여야 하는데 지난 3대 특검에 이어 이번 2차 종합특검 또한 시작부터 특검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검의 본질은 경찰이나 검찰보다 우수한 수사 능력이나 수사 성과가 아니다. 권력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앞선 3대 특검과 그 연장선인 2차 종합특검이 모두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변해 버린 특검.

수사 능력만으로 비교하자면 특검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조직과 인력도 그렇고 현장 감각의 측면에서도 특검이 열세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검경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특검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특검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특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그런데 3대 특검은 현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부터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역대급 규모와 기간을 사용한 특

검에 대한 성과는 미미했다.

더욱이 김건희 특검에서는 3대 특검의 공통분모인 과도한 영장 청구로 인한 문제들 외에도 강압수사로 인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극단적인 선택,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여야 의원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및 기소 등으로 특검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훼손한 바 있다.

이러한 3대 특검의 결과가 정부 여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 내용을 계속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다시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더욱 날카로웠다. 특검 종료 후에 같은 사항을 재수사하는 것이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2차 종합특검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마치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3차·4차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일까.

2차 종합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문제된 바 있다.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정당이 아닌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가 대통령에 의해 특검으로 임명되었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김치헌 특검보가 임명되었다. 당시 특검과 특검보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특검보들의 과거 경력 및 현재의 활동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화영 재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의 특검보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해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특검팀은 뒤늦게 대북송금 수사 담당자를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국민이 갖는 의혹이 사라지진 않는다. 권 특검보가 특검팀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당시 권영빈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수령에 대한 사실 왜곡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사건의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특검보로 있는 것 자체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김지미 특검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유튜브에 출연했던 것 자체가 특검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한데 김 특검보는 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피의자들이 국민이 원하시는 포토라인에 서서 소환조사를 받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다.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특검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특검보를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특검 내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 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 가치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특검팀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말한다. 예컨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도 그러한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 특검보의 변호인 경력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아니며 이에 준해 특검이나 특검보도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근거로 제척·기피를 배제하는 검사와 달리 특검과 특검보는 이런 형태의 이해충돌을 회피했어야 한다.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검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는 풀어야 한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제해야 할 것이고 제도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애초 특검법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고 특검보 인선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다.

특검은 수사의 성과,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갖춰져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검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 헌법학자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을 두고 출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결과로 안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그 기간 내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연장된 특검에서 30일 동안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2차 종합특검, 그나마 수사에서 성과라도 있었으면 이런 비난을 감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에 수사 준비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과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상 특검들은 법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고려해서 특검보 임명 및 인력과 사무실 확보, 자료 이첩 등 사전작업을 대부분 준비 기간 내에 마무리해 왔습니다. 반면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력 파견 및 특별수사관 채용도 계속되는 등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정식 수사 개시 이후 첫 강제수사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대대적으로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코앞에 둔 5월 20일까지도 피의자를 단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했지요.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사실상 수사 실적은 제로였습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일인 5월 24일이 임박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벼락치기 수사에 나

섰습니다. 수사 종료를 불과 닷새 앞둔 5월 1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지요.

특검과 특검보, 수십 명의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최대 25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수사 결과물이 참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애초에 그들이 좇던 범죄 혐의들이 실체가 없는 정치적 허상이었거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면서도 정작 이 수사의 시급성이나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던 도덕적 해이와 무능함입니다.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251명이라는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고도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수사팀이 당장 공중분해되고 지휘관은 엄중한 문책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런 무능력과 혈세 낭비 앞에서도 대국민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정의의 실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시한이 정해진 특검 수사에서는 초기 준비 및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종합특검팀은 이미 그 부분이 너무 늦어졌다. 이미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아직도 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수사였음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직후 기존 조은석 특검이 이미 치밀한 수사 끝에 무혐의와 불입건으로 종결했던 사안들을 무리하게 뒤집으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냉혹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46%, 민중기 특검팀이 31% 정도의 기각률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64%. 특히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13일부터 나흘 사이에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까지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다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청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앞으로 30일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대겠습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사유는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동원한 특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법리적 소명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법원의 잇단 기각은 성과 없는 수사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수사가 애초에 얼마나 안일하게 설계되고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통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까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별도의 감사방해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련 사건의 정의에도 손을 대서 지금까지는 범인은닉죄만 관련 사건으로 인정했던 것을 범인도피죄까지 넓혔습니다. 이를 추가한 배경을 짚어 보면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종합특검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이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7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특검이 이미 감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과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지,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특검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며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헌재 결정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그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한시적이고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런 예외적 제도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추가하려는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30일이 더 늘어난다 해도 법 공포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해 온 감사 방해 의혹 사건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대상을 그동안 수사해 온 것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하자를 스스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시인하고 바로잡기보다 뒤늦은 법 개정으로 근거를 소급해서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 봉합하려고 한다면 그 방식 자체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도 함께 짚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차관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법 개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조차 수사 종료를 보름 앞두고 수사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아마 종합특검에서는 이미 감사 방해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손을 댔고 그 수사가 애초에 법이 정한 권한 밖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위법한 수사였다는 시비에 걸려서 그동안 쌓아 온 수사 결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국회의 법을 고쳐 자신들의 수사 범위를 소급해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 실패를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를 관련 사건에 추가하는 조항 역시 실무상 범인은닉으로 송치된 사건이 실질적으로 범인도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적 하자를 없애 버리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법적 정당성을 뒤늦게 부여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재량이라는 명분 뒤에 이미 시작된 위법한 수사에 적법하다는 옷을 뒤늦게 입히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검 기간 동안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과는 없이 잡음만 쌓이고 있는 것이 지금 종합특검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번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 안에서 내실 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자체 경고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인력과 대상을 계속 넓히는 쪽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또한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공소유지변호사 신설과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조항도 지금까지 짚어 온 문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별수사관 가운데 1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서 검사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파견군검사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법정에 없어도 혼자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아닌 인력에게 검사와 동등한 재판정 권한을 주고 국방부에서 새로 파견받을 군검사에게도 단독으로 재판을 이끌 권한을 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은 현행법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8조에서는 특별수사관이 수사 대상 사건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이지 법정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 이유가 없는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조차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이 조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유지변호사 지정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설령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특별검사 본인이나 특별검사보, 다른 파견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변호사를 따로 지정할 현실적 필요성 자체가 적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 또는 다른 특검법의 전례에서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도 불분명하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이 애초에 충분한 파견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는 없는 권한을 법으로 새로 만들어 메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참고인 또는 혐의없음 각하로 정리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개의 특검이 피의자의 입건 범위를 놓고 서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2개의 특검이 수사 대상자의 범위마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건에서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가

명확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가 법조문이 아니라 특검들끼리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의 잣대가 법과 원칙이 아닌 특검 기관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힘겨루기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까지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에 제출된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 특칙은 단순히 특검의 권한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특검의 독립성과 사법부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합특검이 요청하더라도 3대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이 요청만 하면 3대 특검이 자신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자료를 의무적으로 넘겨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존 3대 특검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과 양립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 하나 안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을 동시에 담으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특칙은 종합특검을 기존 3대 특검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상왕 특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합특검이 재판장에게 재판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했을 때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칙도 문제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업 비밀, 군사 기밀, 국가 기밀처럼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제삼자에게 공개되면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 절차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제삼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는 재판 기록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원 사건에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그저 제삼자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특검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명백한 정치 특검이자 하명 수사기관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대 진영을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별건수사의 남용 또한 특검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감사 방해 혐의나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사건에 끼워 넣어서 이미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에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소급하여 덧씌우려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 본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 파헤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관련 사건 조항은 과거 수사기관의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종합특검의 참담한 수사 실적 그리고 수사 원칙을 짓밟는 언론 플레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특검의 도덕적인 해이, 수사 인력 차출이 부른 민생 수사 공백과 검찰 인력난, 사법부 권한 침해와 초법적인 옥상옥으로의 변질, 이런 문제들은 2차 종합특검이 갖는 특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본질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특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상규명이 목적입니까, 보복 정치가 목적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생기면 특검, 결과가 성에 안 차면 또 특검, 그마저 부족하면 법을 고쳐서 연장하는 특검,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특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민주당만의 상설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성입니다. 검찰이 과거 무리한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밀

어붙인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아닙니까? 검찰의 칼은 위험하다며 빼앗아 놓고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칼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구여야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한정 늘어나는 상설 권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보복이며 국민의 혈세를 정쟁의 땔감으로 태우는 국가적 낭비이자 사법 정의의 이름을 빌린 사법 폭력입니다.

부디 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생적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진정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국회,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덕흠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동아)

(22시15분)

○부의장 박덕흠 다음은 김동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저는 오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찬성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쫓아 2차 종합특검이 지난 다섯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방국의 계엄은 정당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여섯 차례나 퍼트리게 한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원하고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마저 묵살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재투입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른바 2차 계엄 시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준비한 수백 명의 안보 위협 세력 블랙리스트, 증거 서류 조작까지 확인된 대통령 관저 감사, 계엄 현장에 검사를 파견했다는 검찰 수뇌부의 내란 동조 의혹까지 군과 정보기관,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뻗어 있는 내란의 뿌리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사법부가 우리 국회와 특검에 남긴 진상을 마저 밝히라는 숙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수사가 불과 나흘 뒤 7월 24일이면 강제로 멈춰 설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특검에 단 30일의 시간을 더 주자는 것입니다. 이 30일은 단순히 특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의 밤이 오지 않도록 내란의 뿌리를 마지막 한 가닥까지 뽑아내기 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시간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보이콧하고 원구성 협상장마저 박차고 나갔으며 심지어 제헌 78주년 헌법의 생일마저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오늘 특검의 시계를 멈추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특검 수사가 그렇게 부실하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왜, 30일을 더 준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토록 필사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그 몸부림이야말로 국민께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바로 오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상현·권영진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이제는 국회 의사일정마저 가로막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6년 사형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의 내란수괴 전두환은 살아서, 살아서 교도소를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단 한마디의 진정 어린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더라면 제2의 내란세력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죄를 도중에 멈추면 내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계엄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오늘의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고 당당히 표결에 임해 주십시오. 본인들께서 직접 나서서 찬성 표결하는 그런 멋진 모습 한번 국민께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 없는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채 끝끝내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를 볼모로 잡는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회는 내란을 방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헌정 파괴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의 시계를 지켜 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 특검의 시계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의 밤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밤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직 형사적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의 비겁한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진실 공방입니다. 두 사람은 연일 그날 밤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계엄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절체절명의 시각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그 행위 자체가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대한 범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란을 멈추는, 멈추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왜 당사로 모였는가, 누가 그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2차 특검이 필요한, 2차 특검을 연장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의원들을 당사로 부른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되는가? 그날 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정무수석, 국무총리와 연달아 통화하며 윤석열이 계엄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22분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직접 통화합니다. 특검은 바로 이 2분 5초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사실은 바로 윤석열이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라고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집권 여당 원내대표에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동참해 달라고 직접 청탁한 것입니다. 나아가 범죄를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통화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당사로 달려오시던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당사가 아닌 국회로 달려오던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 국회 앞에 서성이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 끝내 이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급박한 시간에 과연 어디 있을까? 그분들은 당사에서 TV로 계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해야 될 행위입니까?

윤석열과 추경호의 통화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거듭 반복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벽 0시 38분 1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직접 통보했음에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표결장이 아닌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지 왜 국회에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신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새벽 1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 재적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렇게 추경호와 윤석열의 통화 이후 의원들의 집결 장소가 바뀌는 이 흐름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요청을 받은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동선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는 것입니

다. 그러니 누가 당사로 불렀느냐는 질문은 사소한 기억의 다툼이 아니라 이 범죄의 최초 지시자를 가리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들고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진실 공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발을 당사에 묶어 내란세력의 표결방해 범죄에 동조한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인가?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이 범죄 혐의를 두고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자서전에 '나는 처음부터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소집해 메시지가 충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에는 본인이 당사로 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추경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까지 한 뒤 위증의 죄를 범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찰 봉쇄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추경호 대표가 아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는 그다음이었다'.

여태까지 한동훈 의원은 자서전, SNS, 방송, 인터뷰 어디에 가서도 본인은 당사로 모여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법정에 나가 선서까지 하고 당사로 모여라 지시한 자는 바로 한동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의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통해 그 답을 내릴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을 두고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마당에 이제 그만 특검을 종료하자는 국민의힘 억지 주장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다 수사에 협조하시고 과연 누가 당사로 처음 집결하도록 지시했는가 한 분 한 분 사실 사실을 진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수차례 소환되고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문부재,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 소환장조차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열심히 책을 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SNS를 하고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고 기자회견하고 모임 하고 국회에서 사람들 모아 놓고 행사 하고 그럴 시간이 있는데 엄숙한 내란 재판에는 단 한 번도 증인으로 나가 출석하지 않고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인사가 이렇게 법의 심판을 요리조리 비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핸드폰 그 20자리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았던 자가 무슨 낯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철수·한동훈 두 의원들의 이런 논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 당일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침묵했던 의원님들에 대해 누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성할 것이 내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연일 판결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흘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조 윤핵관,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오늘 의원직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이 본회의장에서 밝혀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의 실체는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통일교는 김건희 측에 청탁하며 샤넬 가방 2개와…… 그렇게 샤넬 가방이 좋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뇌물을 받으며 그 명품 샤넬 가방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 김건희가 샤넬 가방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참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샤넬 가방 2개만 받았습니까? 6000만 원대에 이르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라프라는 것이, 그런 상표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대통령이라는 5년의 그 임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김건희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김건희는 이 금품수수를 포함한 범죄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서로 이용하는 정교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가 선언한 정교분리 원칙이 대통령 부부의 손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실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을 행사하고 권성동이 아직까지 수사와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다선 의원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합니다.

돈과 선물뿐만이 아닙니다. 당원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약 11만 명을 특정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침투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개입하고 국민의힘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경남 지역 등에서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검은 이것이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조직 동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만 60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만희 총장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집단 입당을 요청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신천지 세력이 많이 기웃거리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지난 대선에서 신천지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받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제보가 있자마자 그자에 대한 제명과 임명장 수여를 철회하는 식의 그런 행보를 바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런 제의가 왔을 때 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종교와 유착했습니다. 종교는 정치에 돈과 신도들을 갖다 대고 정치는 종교의 비호 세력으로서 그들의 돈벌이와 사업을 위한 든든한 뒷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

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만이 이 정교유착에 대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과 30일입니다. 단 30일만 주어집니다. 이 3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엄의 날 그날로 후퇴할 것이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의 여당, 현재 제1야당의 당원 명부에 전당대회 투표함에 사이비 종교 세력의 조직표가 십수만 단위로 스며들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의 선택이었는지 교주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교주에게 청탁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그것부터 수사로 제대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교단인지 모를 지경이 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이 특검의 연장마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관저를 이동했을 당시 쏟아진 그 많은 관저의 의혹 또 어떻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무면허 업체 21그램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종합특검의 첫 강제수사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앞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모자라 범죄 혐의를 매듭짓지 못한 사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무제한토론에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경원·김기현·권영진 의원님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던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서 눈을 맞아 가며 그 추운 겨울에 밤을 새워 가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던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윤석열에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밤을 새워 가며 눈을 맞아 가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막아선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차벽을 치고 인간벽을 세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경찰과 수사관들을 향해 총을 쏘아라까지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 스크럼을 짜고 함께 길을 막았습니다.

이 행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한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장을 막아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방해를 지시한 자도, 몸으로 실행한 자도 법원은 모두 범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달려가 함께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범죄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경호처 직원은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지만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제 발로 달려가 가세한 의원들의 책임은 지시를 받은 사람보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아니면 추경호가 계엄 날 윤석열로부터 계엄 해제를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체포를 막아 달라는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같은 현장 같은 행위인데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법 앞의 불평등입니다. 특권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합특검이 채증 영상을 분석해 앞선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4명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이유이며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체포 방해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내용 2차 종합특검에 가서 진실되게 진술하시고 진실되게 수사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은 지극히 적법했으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실력 행사로 가로막은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확정한 수사를 두고 아직도 위법이라고 우기며 소환을 거부하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진짜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그렇게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발부한 영장을 그렇게 막아 낸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그 한 명을 법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내란당, 범죄자 비호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낼 의지가 과연 조금이라도 있기는 합니까? 아직도 억울한 오명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내란 가담자를 과감히 도려내어 단죄하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우리 민주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스스로 개혁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내란에 동조한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정당 내에서의 합당한 민주적인 장치가 작동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7개월 동안 그 당연한 책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소

환에 불응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기어코 시간을 끌어 놓고서는 이제 와 법정 시한이 다 되었으니 특검의 문을 닫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추악한 진실을 영원히 덮어 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당당히 법정에 출석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응당한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란의 오명에서 해방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길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을 다시 한번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국민의힘도 환골탈태하고 우리 민주당과 함께 정책 경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파로 한편으로는 좌쪽으로 서로 간에 건전한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상임위로 돌아와서 함께 민생을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특검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 다시는 이 땅에 군홧발이 헌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시민들 위에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날 밤 국회를 지켜 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행되었던 3대 특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 특검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성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훌륭한 성과를 통해서 이 종합특검법 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의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3대 특검이 법정 수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3대 특검은 150일에서 180일 수사 기간 동안 총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람 수를 단순히 합산하면 김건희 특검은 66명, 내란 특검은 27명, 순직해병 특검은 33명으로 총 126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복된 5명을 빼면 최종 재판행 인원은 121명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국가 최고 권력과 그 주변부를 둘러싼 대형 의혹들이 수사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 단계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은 총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미처리 34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으로 총 세 차례 기소됐습니다.

한덕수, 조태용,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정부 관계자 8명……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왜 읽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김주현, 박종준, 김성훈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특검법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인계와 공소유지를 수행하며 1심 중계라는 새로운 선례도 남겼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작·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금품수수·매관매직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중심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5년 8월 6일 김건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소환과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수사 무마 일부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순직해병특검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총 3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 해병 순직 책임자 5명이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총 두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3대 특검 종료 직후 기준으로 구속기소 피고인은 24명이었고 윤석열은 총 8개 재판, 김건희는 총 3개 재판을 받는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0일 기준 윤석열은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후에도 남은 형사재판 7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역시 3개 재판 중 2개 1심이 마무리되었고 1개 1심이 남아 있습니다. 3대 특검은 단지 의혹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판 국면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여기서 수사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었지만 미흡한 성과였고 아직 더 밝혀야 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의미 있는 수사에서는 늘 다음 단계로 새로운 과제가 생겨납니다. 더 깊이 확인해야 할 사안, 새롭게 드러난 혐의, 기존 의혹과 연결되는 주변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3대 특검의 성과는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입니다.

더구나 종합특검 제정안의 최초 제안이유는 3대 특검의 한계를 솔직히 적시합니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착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대 특검의 한계는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대 특검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2차 종합특검이고 그 종합특검이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장치가 바로 오늘의 개정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3대 특검은 진실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정의 문까지 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문을 더 깊게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개정안은 그 문이 중간에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기간은 7월 24일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까지 확인되는 2차 종합특검의 가시적 기소 성과는 총 8명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내란동조 혐의 군 수뇌부 4명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4명입니다. 전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고 후자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기소,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불구속기소입니다. 즉 숫자는 아직 크지 않지만 사건의 성격은 군 수뇌부와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겨냥한 고난도 수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첫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월 21일 김건희 조사 예정이고 7월 23일 원희룡 조사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 영장심사 예정 등 핵심 수사가 종료 직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8명의 기소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성과는 단순 누계 숫자보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재판 단계로 넘어갔는지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내란동조 군 수뇌부 사건과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사가 복합적이고 고난도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외환 의혹, 국정농단 의혹, 관저 이전, 감사 방해, 선거 개입, 관련자 은닉·도피 가능성, 기존 특검 수사와 연결된 사실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서는 기록 분석, 기관 간 자료 대조, 진술 충돌 검토, 영장 판단과 보강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수사와 공판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8명이 기소되었다면 이제 특검은 단순히 수사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사와 동시에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하고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도 체계적으로 공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소유지 변호사제도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 연계가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미진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록 제공과 열람·복사 구조가 충분히 매끄럽지 않다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결론은 수사 중단이 아니라 제도 보완이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17건 청구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과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비판 자체를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찬성토론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해석은, 핵심은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고난이도이며 핵심 수사가 막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인력과 인프라 보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고 김건희도 구속되고 징역, 무기징역과 수년에 달하는 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란범죄가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몇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내란의 잔존세력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종합특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를 정점으로 한 우리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핵심 수사가 남아 있고 이미 8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기록 연계 필요성이 분명하고 공판 체계의 보완도 필요한데 지금 아무런 입법 보완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회의 태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조사와 영장, 새로 드러난 혐의의 관련 사건, 이미 기소된 8명 사건의 공소유지, 3대 특검 기록과의 연속성 확보,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추가 30일, 인력 20

명 증원, 기록 제공 의무화, 관련 사건 명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바로 이 정도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박덕흠 부의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의장단 고생 많으십니다.

박덕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쟁의 확대가 아니라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필수 입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법 연장안을 두고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이나 정치 보복으로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국내의 정쟁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이 내란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외신의 평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대한민국 계엄 사태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특검 과정을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와 공적 신뢰 회복의 거대한 투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태의 출발점인 계엄과 탄핵에 대한 주요 외신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하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을 통해 민주제도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이 사태를 실패로 끝난 계엄 선포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NPR은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사회에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 폭력 공포를 다시 환기시켰다고 짚었습니다.

종합하면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의 폭거이자 헌법 파괴 행위로 확정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국가 폭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그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내란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범, 사형 선고를 구형한 내란범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위헌적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던 3대 특검에 대한,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AP통신은 3대 특검의 출범 배경에 대해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불충분했고 권력의 비협조로 제약받았다고 명확히 짚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제도의 당위성을 국제 언론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이를 약 600여 명이 투입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3대 특검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사들이 피상적이고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3대 특검의 진짜 목표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실제로 동시에 진행된 3개의 특검이 정치권과 군 수뇌부 전반에 걸쳐 120명 넘게 기소했다며 수사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외신이 바라본 3대 특검은 보복의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대체하고 헌정질서

를 복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필수적인 국가 정상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종합 특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를 다루며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에게 특별검사가 수사 범죄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외신의 시선에서 이 사건은 탄핵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크고 깊은 진상 규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하는 진행형 구조임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핵심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개하며 이 사건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라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형량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는 사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왜 우리가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지를 웅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신의 평가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프고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한 명을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대 특검은 국가 폭력과 권력 사유화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그 빙산의 수면 아래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 미해결된 17개의 핵심 의혹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들이 덮으려 했고 시간의 제약으로 3대 특검이 미처 다 파헤치지 못해 남겨진 진실들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거대한 국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사법 정의를 어떻게 끝까지 관철해 내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이 계엄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배신, 3대 특검을 국가기관 신뢰 회복의 필수 장치로 그리고 지금의 종합특검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는 진행형 수사로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거대하다고 해서 혹은 피의자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를 중간에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은 그 배신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철저하게 추적되고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며 오늘 우리가 이 종합특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역사적 당위입니다.

종합특검의 제정 이유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 제안이유,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발하였습니다.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의 수사에 소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행위 등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 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규정된 내용이 참 담백합니다. 30일을 연장하고 필요한 수사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조금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의 내란에 개입했는지, 법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 방해는 어땠는지,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진실게임의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겠다는데 상임위는 안 열고 상임위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민생은 외면하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이 특검법 연장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고 있는지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생법안은 단 1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민생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민생법안에, 민생국회로 돌아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는데 제대

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감사를 방해했더라면 그 과정에 있었던 자들 당연히 수사받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부의 군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이 여러 수사기관의 찢어진 수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검찰들이 협박하듯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수만, 수십 건의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고 8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진행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고 또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검사로서 공소유지, 변호사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3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한 달만 지나면 종합특검의 완전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검찰 수사에 결백하다면, 수사에 두려운 것이 없다면 이 30일을 연장하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수사를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범죄가 혹시 국민의힘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합특검에 동의하십시오. 결백하다면 종합특검 연장안에 동의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무혐의, 무죄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엄청난 수사기록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특검이라면 다 종합적으로 열람·등사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점을 밝히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종합특검이 밝혀낸 관저 이전 관련된 위법한 사항에 대해 공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착수 배경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대상지 선정과 건축 과정 등이 정교하게 기획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1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전되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자격 업체가 불법 공사, 과다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의혹 해소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며 부실·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특별검사를 선정하여 관저 관련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국민의 그와 같은 준엄한 요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직후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증거물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수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애초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보다 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무자격 업체에 의해 증대된 관저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감추고자 증대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애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일축하였는데 사실은 그 예산 초과와 불법 공사 사실을 감추고자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 위한 예산 남용의 범죄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 2026년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총무비서관 윤재순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이미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1차 특검에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관리비서관 김오진,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1차 특검에서 구속기소된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위 4명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견적금액 41억 상당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22년 5월~7월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 합계 20억 9000만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예산 남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한 전 기재부 간부 등을 위 예산 남용에 가담한 공범인 피의자로 수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 소속 직업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도 대통령실에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각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형식적 적법의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마치 적법하게 편성된 예비비 내에서 충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공표하며 국민과 언론 및 국회까지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이 과정에 직업적 양심을 걸고 후배 공무원들을 사지에 내몰 수 없다는 신념하에 대통령실의 지시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승진 누락 및 원거리 전보 이동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불법적 행태입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를 엄벌하면서도 국민 하나하나의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입니다. 추가 수사 필요성입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불법 전용 승인 형태로 가담한 기획재정부 등 추가 공모 관계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저 이전 관련하여 최초 국민감사청구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감사원 감사 무마 또는 위법사항 은폐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기·윤재순·김오진·이상민에 대한 범죄사실입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어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피고인 김대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22년 4월 중순경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고 취임한 당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재수는 1997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후부터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인연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구성된 인사검증팀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4월 중순경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되었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행정 등 대통령실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김오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구성된 청와대 이전 TF에서 제1분과장을 맡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업무, 청와대 개방 업무, 용산공원 개방 업무 등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2022년 5월 10일 같은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신설된 한시조직인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민은 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 모 씨는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예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3월 중순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TF에 파견되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 조율 그리고 관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고 2022년 4월 중순경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된 피고인 김대기에게 발탁되어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김대기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김 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 대표로 과거 김건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가 개최한 다수의 전시회에서 전시장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등의 인연으로 김건희와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경과입니다.

청와대 이전 추진 및 관저 이전 계획 수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이른바 청와대 이전을 공약하였고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청와대 이전 공약을 추진하

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청와대 이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2022년 3월경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역시 이에 대응하여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한시적 조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에 필요한 예비비를 배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편성받아 위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부청사 노후시설 정비예산에 배정한 후 이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국무회의는 2022년 4월 6일, 같은 달 26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예비비 총 496억 원을 의결하였고 그중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은 약 25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관저 시설 보수공사비로 편성된 금액은 1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대상지 및 공사업체 변경 과정입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 대상지로 결정하고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은민에스엔디, 설계업체로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설계 및 공사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경 대통령 관저 이전에 김건희와 주식회사 21그램 대표 김 모 씨가 관여하면서 이 무렵 대통령 관저 대상지가 기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됐고 대신 주식회사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등록한 업체로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같은 구조 보강, 전기, 통신, 소방 등 복합 공종이 수반되는 종합적인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관저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갑작스럽게 연이어 변경되면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사 절차가 중단되었고 새롭게 관저 공사를 담당하게 된 주식회사 21그램에 의한 공사 절차도 지연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경까지 관저 공사는 착수조차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조성 추진

대통령 관저와 행정안전부의 관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경 당시 아직 대통령비서실이 출범하지 않았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행정안전부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후 이를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는 본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관리하는 국가시설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정부청사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무엇보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1급 보안시설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관리 및 경호 대상 시설이었기 때문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통령 관저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관저 공사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관저

사용 주체로서 설계도서 작성, 설계 변경, 내역 조성 등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계약 및 집행 등 행정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들은 대통령비서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 관련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행정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 관저 공사현장에 대한 접근조차 제한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관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가계약 및 정부 예산 관련 규정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만연하게 부당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목적, 금액, 이행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행에 착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된다.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장하고 각 기관에 부여된 예산 편성·집행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항 및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기관 간 또는 장·관·항 간에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부족,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 환율·유가 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재해대책 등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국회에서 사전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예산의 적법한 편성·집행 방식

위와 같이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비서실이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이고 대통령비서실이 관저 사용의 주체로서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 변경, 내역 조정 등 공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대통령 관저 공사에 필요한 비용 역시 대통령비서실이 관리·사용하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아직 대통령비서실이 출범하지 않았던 관계로 행정안전부 앞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관저 공사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 무렵까지 대통령 관저 공사는 계약 및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관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하거나 대통령비서실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했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정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기관 간 예산 이동인 이용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하고 이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였다.

주식회사 21그램의 일방적 공사비 요구에도 검토조치 없이 공사 강행

주식회사 21그램은 2022년 5월 12일경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공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비로 약 41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금액은 당시 관저 시설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14억 4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오진 등은 위 견적금액의 적정성이나 산출 근거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22년 5월 13일경 계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21그램으로 하여금 관저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21그램은 2022년 5월 13일경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비롯하여 2022년 5월 15일경부터 관저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2022년 5월 16일경 대통령비서실과 주식회사 21그램 사이의 회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21그램은 관저 공사 관련 예비비가 약 14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추가 공사비 지급 문제로 약 일주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오진은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 규모 및 견적금액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우선 공사를 계속 진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21그램은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다.

(「김동아 의원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한편 피고인 김오진은 2022년 5월 중하순경 피고인 김대기에게 예산보다 관저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재순 역시 그 무렵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당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한 예산 마련 지시 범행

1. 주식회사 21그램의 요구를 수용한 채 정부청사관리본부 기정예산 투입 결정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피고인 윤재순은 2022년 5월경부터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가 당초 관저 공사 명목으로 배정된 예비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공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피고인 윤재순은 대통령비서실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피고인 김대기는 2022년 6월 20일경 피고인 김오진, 피고인 윤재순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치적·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예산 사용 방안을 배제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피고인 윤재순은 대통령비서실 예산 대신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대통령 관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2022년 6월 말경 피고인 김오진은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황 모 씨를 통해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에 추가 공사비를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예산 목적 외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시

그러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부담할 법령상 의무가 없는 기관으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대통령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국회 결산 및 감사원 감사 등 대응 부담, 국민적 비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투입 방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6월 말경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등을 설득하기 위해 추가 대통령실 예비비 편성, 대통령경호처 예산 활용,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3.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주식회사 21그램 요구 공사비 부담 지시

피고인 김오진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 마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직후인 2022년 7월 1일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조 모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저 추가 공사비 약 28억 원 확보 방안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김대기는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장실에서 조 모 씨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관저 추가 공사비 부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모 씨는 위 회의에서 피고인 김오진에게 추가 예비비 편성, 대통령경호처 예산 활용,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대통령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이라는 법률 위반 문제, 국회 결산 및 감사 과정에서 책임 문제, 국민적 비판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대기에게도 위와 같은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재차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대기와 피고인 김오진은 위와 같은 대안들을 채택할 경우 받게 될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조 모 씨에게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으로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부속실 소속 행정관이던 정 모 씨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실무자들에게 '실무자가 까라면 까야지, 무슨 말이 많냐.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출범 초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를 것을 사실상 강요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비용 부담 절충안 제시

피고인 이상민은 2022년 7월 4일 조 모 씨로부터 피고인 김오진 등 관리비서관실 회의 및 피고인 김대기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등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저 공사비 약 28억 원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 모 씨에게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등의 강압적인 지시와 이에 협조하라는 피고인 이상민의 지시로 인해 당초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7월 6일경 황 모 씨로부터 예산 투입 금액을 20억

9000만 원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대통령 관저 공사가 대통령비서실 사업임에도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만으로 주식회사 21그램이 예비비 범위를 넘어서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부담할 경우 향후 법적·정치적 책임이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소한 대통령비서실 역시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에 2022년 7월 7일경 회의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자체 예산으로 약 15억 9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5억 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의 기존 의사 번복 및 전액 부담 강요

피고인 김오진은 2022년 7월 8일경 위와 같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제시한 대통령비서실이 약 5억 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피고인 김대기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한 끝에 피고인 김대기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추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안전부장관인 피고인 이상민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약 20억 9000만 원 전액을 마련하여 부담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조 모 씨는 같은 날 피고인 이상민에게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약 15억 9000만 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김대기로부터 전액 부담 요구를 받은 상태였던 피고인 이상민은 조 모 씨에게 대통령비서실의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오진은 같은 날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추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시행하였고 이후 2022년 7월 12일경 다시 조 모 씨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김대기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피고인 윤재순 등은 이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련을 지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추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언론 등을 상대로 2022년 7월경까지도 예비비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공표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내부 반발과 위법성 우려 속에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피고인 김대기 등 대통령비서실의 반복된 지시에 따라 추가 계약 및 예산 집행 절차를 수행하게 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과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특히 계약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총괄과는 2022년 7월 11일경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추가 계약 관련 검토 의견 공유 문서를 등록하면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대통령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문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위반 문제 및 향후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남겨 두기도 하였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곧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모 씨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2년 7월 13일경 정부청사 시설관리 사업비 가운데 미발주 사업 예산을 조성하고 낙

찰차액 및 집행차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약 20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이상민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이상민은 '특수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도 협조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까지 동참시켜 우리 부가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와 같은 위법한 예산 마련 방안을 승인하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결재를 상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장에 나온 내용인데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민이 다 지시해 놓고 본인에게는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법비 같은, 법꾸라지 같은 이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이었습니다. 밑에 공무원들한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 놓고 자기한테는 결재를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진짜.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미발주 사업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과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부정적 의견이 계속되자 2022년 7월 20일경 기존 방안을 수정하여 기존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삼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출예산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이상민은 2022년 7월 21일 오전경 조 모 씨로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 반발과 기획재정부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 위와 같은 예산 마련 방안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조 모 씨에게 '준비한 대로 대통령비서실과 잘 협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7월20일 24시 경과)

그러나 위 방식 역시 예산 확보 없이 선행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통령 관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청사관리본부 기정예산을 전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윤재순과 피고인 김오진은 2022년 7월 21일 오후경 조 모 씨와 회의하여 위와 같은 관저 추가 공사비 마련 및 재원 계획에 동의하였고 조 모 씨는 기존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법령상 요건 미구비 등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요청만으로는 예산 전용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시하여 예산 전용 승인이 통과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재순은 '기획재정부 전용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의 반대와 우려에 다시 한번 동원 예산 규모의 축소·조정을 시도하던 조 모 씨에게 '대통령비서실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조 모 씨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통령과 이상민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할 수 있을까,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비서실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조폭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면 볼수록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한편 조 모 씨는 같은 날 피고인 김대기에게도 직접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청사관

리본부 예산 투입을 직접 결정한 당사자로서 조 모 씨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김대기는 '본 건과 관련하여 보고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직접적인 책임 부담과 개입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기 위해 조 모 씨와의 만남을 회피하였다.

이상민도 다 업무 지시해 놓고 결재라인에 자기를 빼달라고 하고 김대기 역시 자기가 다 지시하고 위법한 지시를 했으면서 고군분투하며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고군분투하고 방안을 찾고…… 이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면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런데 본인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다 내려 놓고서 이 공무원을 결국 만나 주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 피고인들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 전용 승인 지시 범행

기획재정부도 전용 반대 의사 표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7월 초순경부터 기획재정부와 관저 공사비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 방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는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이미 편성 및 배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한 후 사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 전용에 반대하였고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초 적법하게 배정된 예비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2. 기획재정부에 대한 전용 승인 지시

이에 피고인 김대기, 피고인 김오진, 피고인 윤재순은 2022년 7월 21일경 조 모 씨에게 기획재정부 예산 전용 승인 관련 협조를 받아주겠다고 한 이후 2022년 7월 21일경부터 2022년 7월 26일경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부속실 정 모 씨, 관리비서관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의 예산 전용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정 모 씨는 2022년 7월 21일경부터 7월 22일경 사이에 위 행정예산과 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급하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 '관저 완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 전용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예산과 실무자, 정 모 씨에게 '이 문제는 국회나 언론에서 분명 문제 될 것이다, 기존에 496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해 놓고 왜 갑자기 20억 원이 추가되느냐, 만약 진행하게 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 전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후 행정예산과 실무자는 위 정 모 씨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으며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기존의 반대 입장을 변경하였고 2022년 7월 26일경 기획재정부 상급자 보고 및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 모 씨에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전용 승인 입장을 전달하였고 정 모 씨는 이를 피고인 윤재순 등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보고·공유하였다.

피고인 윤재순은 같은 날 16시 42분경 조 모 씨에게 '기재부 정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협의가 정리되었으니 예산 전용 절차

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출예산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 후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

그 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7월 27일경 집행 완료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예산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2022년 세출예산 전용 신청 및 낙찰차액 사용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 공문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송부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다음 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에 발송하였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는 장기간 반대 의견을 유지하였음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예정한 시점에 맞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토를 진행한 후 2022년 7월 29일경 위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요청을 승인하였다.

다번,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기정예산 전용 및 공사비 집행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7월 29일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출예산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예산을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에 재배정하였고 2022년 8월 10일경 조달청에 추가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였다.

조달청은 2022년 8월 16일경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21그램에 종합건설 면허 및 상호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원담종합건설과 계약금액 약 16억 4000만 원 상당의 업무동 노후시설 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2년 8월 17일경에는 주식회사 경일이앤지와 계약금액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업무동 노후시설 개선사업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계약 및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고 2022년 8월 30일경 관저 공사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년 9월 2일경 주식회사 원담종합건설에 약 16억 1800만 원, 주식회사 경일이앤지에 약 3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

한편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의 문제 제기는 위와 같은 계약 및 집행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계약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총괄과 계약팀은 대통령비서실과 시설총괄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향후 책임이 계약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2022년 8월 16일경에는 '대통령 관저 업무동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계약팀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이 관리총괄과에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며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계약팀장 및 계약담당자들 스스로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참 처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나아가 피고인 이상민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 20억 9000만 원 상당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최종 투입된 이후인 2022년 9월 하순경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인사기획관으로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장 박 모 씨가 부이사관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모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며 박 모 씨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여 박 모 씨는 부이사관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2022년 12월 하순경 행정안전부 내부의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박 모 씨를 멀리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실제 박 모 씨는 통상적으로 저연차 서기관들이 가는 직위인 정부청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장으로 보임되었다.

소결입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모 씨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통령비서실 소관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위하여 법령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예산 전용 및 공사비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독립적이고 적법한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및 이에 기초한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3항입니다.

피고인 김오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입니다.

피고인 김오진은 2022년 7월경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업무동·주거동으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동 공사 역시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음에도 기존에 배정된 예비비 예산만으로는 주식회사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려워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이 발생하자 추가 예산 확보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김오진은 2022년 7월 8일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이전 마무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예비비로 진행 중인 공사 외 업무동 리모델링 추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한 후 해당 공문을 전결로 처리하여 시행하였고 그 무렵 수신처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업무동·주거동 공사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하나의 공사로 진행되고 있었고 업무동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으며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추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오진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대통령실 이전 마무리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상 관저 이전 관련 공소장에 나타난 대통령실과 행안부 이상민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대기 실장 등의 범죄사실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과 여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위법하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절박한 호소와 절절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그 전용한 예산을 특정 공사업체, 김건희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한 21그램에 주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2차 특검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했던 감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해서 이 관저 이전 과정에 발생했던 수많은 비리와 수많은 위법·불법을 발견했더라면, 그것을 감사원이 지적했더라면 과연 윤석열이 저렇게 기고만

장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군홧발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더라면 김건희가 저렇게 떵떵거리며 뇌물을 받고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고 샤넬백을 받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을 수 있을까요?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누구도 권력을 감시해야 될 기관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온 속보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 바로 그 타이거파 유병호가 구속되었다는 속보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위법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타이거파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병호가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아직까지 감사원에 남아 있는 감사원 감사위원입니다. 현직 감사위원입니다.

윤석열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시키고 감사원장을 아마 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견제, 우리 민주당의 견제가 두려워서 감사위원으로 알박기 인사를 해서 아직까지 감사위원직에 있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 봐주기 감사를 한 자가 권력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아직까지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당장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2년부터 2024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부실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련 관계자를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되었으며 사후에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했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연장돼서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오늘 속보로 밝혀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행 특검법은 불과 나흘 후 종료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특검이 연장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3차 특검, 종합특검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만간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윤석열만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특검의 매서운 칼날 같은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십시오.

윤석열에 대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이고 그 죄가 1심에서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을 전쟁통으로 만들려고 했던 미치광이 전쟁범죄자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을 비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아직도 국회의원으로서 잔존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5선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직업이 서울시장입니다. 조만간 선고가 남았는데 빨리 선고를 제대로 받으시고 서울시장직에서 이만 물러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외치던 신속한 재판 꼭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많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소돼야 될 범죄가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은 지지난 대선에서 김건희가 주식에서 손실만 봤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바 없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명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범죄입니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짜를 참 좋아하나 봅니다, 주가조작 해서 돈 벌고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받고 6000만 원 그라프 목걸이 받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아니,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금거북이를 받고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배용 씨로부터 금거북이 받고 그런 중차대한 직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집단 입당 관련해서 1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관저 이전 의혹,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받고 엄정한 형을 선고받아서 집행받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범죄입니다.

김용현.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잘되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때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싸우던, 자신이 마치 승리한 장군

같이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던 김용현,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30년 받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입니다. 내란죄·외환죄 공범입니다. 대한민국을 전쟁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미치광이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미치광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도합 60년.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떨어지고 미군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참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혹한 전쟁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금쪽같이 모시던 윤석열으로부터 일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정보사 명단 누설 1심 징역 3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1심 징역 3년. 도합 66년입니다, 66년. 절대 사면은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통령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한덕수. 쌍권, 권영세·권성동. 그 찬란한 권력을 행사하던 쌍권이 밀었던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로서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에 바빴던 그 한덕수.

미꾸라지처럼 내란죄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조만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미임명하면서 윤석열을 비호하려 했던 바로 그 한덕수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이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루한지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사위에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탄핵까지 당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했던 박성재.

탄핵되고 나서 복귀하자마자 한 일이 검찰청 내 알 박기 인사, 지금 감찰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어떠한 검찰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법정에서 펑펑 울던 박성재 모습이 기억납니다. 본인이 그 징역 좀 받는다고 그렇게 우십니까? 본인들의 그 내란과 계엄과 불법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이 입은 그 상처와 피눈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이 내란을 같이 꿈꿨으면 성공한 내란이 됐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 꿈을 안고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박성재, 법원에서 그 본인의 죄를 받는 게 그렇게 슬펐습니까?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 이상민. 이태원참사도 빠져나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꽃다운 청춘들이 죽어났음에도 본인은 아무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던 이상민. 내란에 적극 가담했으면서도 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가담한 바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고 우기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그 전에는 판사였습니다, 판사. 판사 출신 참 대단합니다.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습니다.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1심 징역 1년 6개월 인정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아마 더 많은 범죄들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상목,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노상원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18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부

정선거 수사단 구성한 혐의 대법원 징역 2년 선고됐습니다.—확정됐습니다, 이건—선고됐고.

부정선거 수사단, 참 우습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제대한 민간인이 무속인한테 항상 상담하면서 장관들 인사기록 보내고…… 아마 대통령하고 궁합을 봤을 겁니다. 이런 비선이 윤석열 뒤에 존재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체포조 만들고 연평도에 보내서 고기 밥 만들라 하고…… 이런 사람이 윤석열 뒤에 있으니 끼리끼리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좋아하는 소맥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소맥을? 정상적인 사고가 되겠습니까? 오후부터 술 먹고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렇게 얼굴이 퉁퉁 붓고…… 대통령비서실이 아침에는 윤석열한테 업무보고 하기 싫었답니다, 무조건 짜증을 내니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 왜 늦게 출근하냐고 사람들이 맨날 지적하니까 가짜 출근차량도 보내고. 아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1호 당원으로 배출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린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진실규명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상원 같은 해괴망측한 인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인형, 여인형도 국방부 국조 과정에서 정말 뻔뻔하게 질의응답하던 그 모습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내란과 계엄을 일으킬 목적으로 '국회의원들 총알 한 방이면 날아간다. 어디 연평도에 가둬 놓으면 아무 소리도 못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보고 사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제압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께 싸우고 큰소리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중요임무 종사는 1심 진행 중이고,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15년 선고되었습니다. 이진우,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진행 중입니다. 문상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진행 중이고 정보사 명단 유출로 1심 징역 2년 선고되었습니다.

경찰 조지호, 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지호 1심 징역 12년 선고받았고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 왔을 때, 저도 국회에 비상계엄이 터져 왔을 때 마주한 첫 모습은 경찰이 국회 담장을 둘러싼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지시했으면 국민의 경찰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국회를, 국회 담장을 둘러싼, 그렇게 둘러싸도록 지시한 경찰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박종준. 김성훈 징역 5년, 박종준 징역 4년. 함께 스크럼을 짜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년을 선고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완규,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완규는 잘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법꾸라지’답습니다. 하지만 2차 특검의 수사에는…… 수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함께 있습니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진행 중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당사 소집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른데 둘 다 법정 나가서 자기들 주장하시고 한 분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이달 22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조희대가 선거법 사건은 빠르게 진행하라고 누차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빨리 오세훈에 대한 판결 선고하시고 대법원에서도 빠르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혐의로 1심 진행 중이고 임종득 의원님, 안보실 인사비리 관련해서 1심 선고 예정되었습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피의자 입건되었고 체포방해 조사 불출석했습니다.

1시가 다 되어 가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찬성자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좇아 2차 종합특검이 달려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의원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은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자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다라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선서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자서전도 쓰고 SNS도 하고 TV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하면서 본인은 당사로 소집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렇게 방송 나가고 SNS 하고 지지자들하고 이 국회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 중요한 내란재판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말과 손과 글로는 그렇게 본인이 내란을 막아 내고 계엄을 막았다고 자랑, 자랑을 하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에는 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증언이 진실일 것으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기술자, 바로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차 종합특검은 밝혀낼 것이 더 있습니다.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등이, 그 눈 내리던 겨울밤, 윤석열의 체포를 바라던 시민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순간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호처와…… 당시 체포 방해에 앞장섰던 경호처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 확정판결 아니고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성훈 1심 징역 5년, 박종준 징역 4년.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뜬,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선고가 오늘 속보로 떴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으면 1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기간이 불과 4일 앞으로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이 유병호에 대한, 유병호 한 사람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 4일간의 기간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만약에 4일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병호가 석방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춰 보더라도 2차 종합특검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30일간 추가적인 수사를 하면서 이미 밝혀낸 많은 의혹들과 지금 구속된 유병호 등에 대한 이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특검 수사 연장안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결백하다고 외치던 권성동 의원 한번 보십시오.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실실 웃으면서 본인 동의해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실실 웃던 그 표정 아직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통일교로부터 돈 받아먹은 범죄가 인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실실 웃어 보십시오, 권성동처럼.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연장안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미진했던 특검 수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핵심 권력 김건희는 구속되었지만 아직 이들에게 동조했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권력 곳곳에,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을 위해서라면 2차 종합특검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불과 30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 의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인순 김동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진숙)

(00시59분)

○부의장 남인순 다음은 이진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개딸 정권입니다.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웠지만 국민은 뒷전에 있습니다. 개딸이, 개딸들이 이 정권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송4법을 고치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 것은 개딸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특검, 보충특검, 보완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개딸 정권 내내 소위 내란 특검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넣은 사람들도 모자라서 특검의 특검 또 특검의 특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이재명 개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주역 중의 주역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보은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민노총 출신이 떡하니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민노총 출신 장관을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자리 잡게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국무위원은 현재 20명입니다.

민노총이 어떤 집단입니까?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맹세문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기조차 역겹지만 참고 읽어 보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십시오.

2018년 12월 9일 자 맹세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온 겨레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 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우리 사상과 사회주의 위업을 이루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충성맹세문을 쓴 이 사람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 그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까? 김정은입니까?

2020년 9월 30일 자 충성맹세문입니다.

지사와 남조선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임무를 경애하는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관철 하는 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당 창건 75돐에 모두 다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 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 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이런 사람을 간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 민노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이 민노총 출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버젓이 20명 대한민국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의 정멤버,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발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충성맹세문을 북한 정권에 바치는 조직원을 둔 민노총,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 한가운데로 입장했습니다.

민노총 간부 석 모 씨는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에 충성을 맹세하고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간부들이 있는 민노총, 이 민노총 출신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자유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진숙은 이재명 정권을 민노총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되고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 대통령실의 수석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은 장관급이지요. 정말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입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후보 추천을 야당에게 달라고 하고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특검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2024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탈 사태 관련 특검, 민주당은 야당에게, 야당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박균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의원 말씀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정확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된 것은 명백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정권 침탈 사건과 관련한 특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라고 박균택 의원은 이야기하셨지요?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번 참정권 침탈 사건, 민주주의 침탈 사건에서 만약 특검 지명권을 국민의힘에게 주

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국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3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의석 가운데 3분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190석을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헌 의석에만 조금 못 미칠 뿐입니다. 사실상 일당독재처럼 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국민들의 대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개딸들의 전당, 이재명의 전당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의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민주당 개딸 정권의 폭정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개딸 민주당은 일당독재처럼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이재명 정권은 왕정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3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이 정권이 잡아넣은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성동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입니다.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2024년 8월 2일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12·3 계엄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통합 정신도 퇴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딸을 백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회, 이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국무회의는 3특검을 의결했지요. 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내내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취임식이 있었던 2025년 6월 4일 하루뿐이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등 인원은 75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좌파 정권의 문재인·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

고 인도를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왜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타고 갑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언제나 대통령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김정숙 씨는 관광지 타지마할에 가서 독사진을 찍었고 이 독사진만 기억에 남는 이 사건,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수많은 의상 비용을 특활비로 냈다는 의혹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고 하지요.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와 공무원 등이 759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나마 희대의 살인마 장윤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딸들은 왜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왜 보완수사권 없애라고 압박을 넣는지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보완수사권이 가장 필요한 곳은 형사사건 아닙니까?

열일곱 살 여고생을 강간살인한 장윤기의 뒤에는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찰이었고 경찰이 희대의 살인마 배후에서 범죄를 축소하려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가 없었다면 열일곱 살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은 그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마 장윤기에게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은 위선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민생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에게 진짜 민생이 관심사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딸에게 이채원 양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도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까?

참정권 침탈 사태는 개딸 민주당의 위선을 더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민주권정부라고 스스로를 이름 붙였지요. 좋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그런데 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국민들의 주권이 침탈당했습니다. 투표할 권리만큼 큰 주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였습니다. 투표용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소에 온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이나 기다려서 겨우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입니까?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입니까?

게다가 저녁 6시에는 출구조사까지 발표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입니까?

올림픽공원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침탈됐다고 50일 가까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침탈 관련 특검을 여당이나 대통령이 아닌 제삼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또는 법률에서 정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입니까 아니면 개딸주권정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재명주권정부입니까?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위선 정당, 위선 정권입니다. 통상 인권위원이나 방통위원회 등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합의해 놓고 그 합의를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작년 8월 국민의힘은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에 각 당의 추천 몫을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도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을 경험한,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국회는 통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존중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이 관행을 깼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관행이란 지킬 필요가 없는 전통인 모양입니다. 압도적 다수는 불법적인 일을 해도 합법적인 일이 되는 세상이 대한민국국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에서도 민주당의 오만함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영식 후보를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여야 협의, 합의, 관행, 전통은 개딸 민주당에서는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이 가고 나니 조정식 의장이 들어섰습니다, 씩씩한 국회. 저는 그래도 조정식 의장이 들어서면 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 민주당 1당 국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 상임위원회를 골라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방위를 신청했지만 조정식 의장은 저를 재경위에 배치했습니다. 민주당 일당독재 국회, 여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입니까?

개딸 민주당에 민주는 없습니다. 민주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개딸 이재명 정권도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였지요. 그런데 개딸 이재명 정권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직 개딸이 중심이 되고 개딸이 아닌 국민은 뒤로 밀리는 정권이 이 개딸 이재명 정권입니다.

반헌법적인 작태의 정점은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공소취소 특검. 이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7대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들어 있는 모든 형사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사건, 참 사건에 많이도 연루가 되어 있네요.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일부러 죄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죄목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역대 이런 정당도 없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니까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국회가 개딸의, 개딸에 의한, 개

딸을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 개딸 정권은 사실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이재명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을 왕정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셔야, 함께 행동해 주셔야 이재명 개딸 왕정국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발언 마치고 제가 겪은 반헌법적인 사건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개딸 민주당은 영화에서 들었던 한 대목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개딸 민주당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지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안형환 위원이 임기가 다 되어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배지를 달아서 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당시 기준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안형환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개딸 민주당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국회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당이 추천하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민희 후보도 본회의 표결을 거쳤지요. 민주당에게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150석이 훨씬 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최민희 후보의 경우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을 지닌 이력 때문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에 최민희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의뢰해서 결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민희 후보를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는 2023년 11월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2인 체제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털어놨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국회로 돌아온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를 만나서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 타협하지 말라고 한 내용은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말라는 거지요. 최민희의 말 이어 갑니다. '이동관은 탄핵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후보를 그만뒀다. 당시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동관 탄핵을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만둔 거다'.

그러니까 벌써 2023년 11월에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기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까지 소위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바로 개딸 민주당이었지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위협에 스스로 물러났고 후임이었던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 위협을 받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법을 바꿔서 탄핵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이 민주당은 모든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합법, 참 쉽지요. 거대 의석을 가진, 거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국회 운영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법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마도 이번 종합특검을 마칠 즈음해서 추가 특검, 보완 특검,

보충 특검, 재보충 특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를 소위 5인 체제로, 5인 완전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의 사보타주였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개딸 민주당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 두 자리를 희생시키고도 개딸 민주당은 방통위원회를 2인 체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도 그들은 불법 2인 체제라고 불렀지요. 2인 체제를 만들고 또 유지해야 계속 개딸 민주당은 2인 체제는 불법이다, 2인 체제가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딸 민주당이 성공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저 이진숙을 탄핵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저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청문회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보통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저 이진숙에 대한 청문회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총리 청문회 이틀입니다, 이틀. 도대체 왜 민주당은 저 이진숙에 대해서 무려 사흘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을까요? 제가 앞서 민노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민노총의 타깃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저는 MBC에서 홍보국장 또 기획홍보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MBC 사상, 아마 언론사 기록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장 170일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파업을 대응하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MBC 사상 최장 파업, 170일간의 파업은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마 MBC 사상 경영진의 승리로 끝난 파업은 이 파업이 유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노조의 압박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노조의 조건을 들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는 했지요. 2012년 파업은 경영진의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중의 한 명이었던 저는 그 순간 민노총의 제거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는 언론특보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해촉됐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가 부적격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이었지요.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가 저에게 조금 민감한 시기이니까 자진 사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 그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 민노총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권력은 듣는구나, 그리고 이진숙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사퇴는 못 하겠다, 자진 사퇴는 못 한다, 민노총에 굴복 못 한다, 차라리 저를 해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촉됐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기 전에, 방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청문회를 준비하던 방통위 간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청문회장 바깥에서 민노총 간부들이 와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조금 뒤에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

습니다. 제가 아마 좀 웃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피케팅, 피켓 시위를 뚫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자’ 그렇게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뒤져 보시면, 찾아보시면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고함을 치며 이진숙 물러나라라고 외치는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이런 시위를 벌였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인사청문회장 바깥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MBC 이야기를 하면서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 몸이 아닌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고함치며 인사청문회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는 기관장 후보를 이렇게 막아서는 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 안에 이들의 동조자, 협조자가 있었다면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개딸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노조 탄압, 세월호 오보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노조 탄압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2012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장 170일 파업이 있었던 시기지요. 공교롭게도 2012년에는 4월에 총선 그리고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민노총 노조가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 주다시피 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2012년 170일 최장 파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게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 됐겠지요.

그 전해인 2011년 말부터 슬슬 군불을 때기 시작하더니 2012년 1월 기자회 제작 거부를 시작으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업의 명분,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공정방송 그리고 공정방송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장 퇴진을 내걸고 파업을 하지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공정방송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상파방송이나 종편방송을 보면 방송편성 책임이 있고 또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사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노총 노조는 자기들이, 자기네들이, 일선 제작 담당자들이 공정방송의 최종 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장이 또 보도국장이, 제작국장이 공정방송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파업을 하고 제작 거부를 하지요.

여러분, 저도 친정 MBC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지금 MBC 보도를 보면 공정방송 하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방송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공정방송입니까?

이렇게 공정방송 운운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고 펜과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벗어난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징계를 한 것이 노조 탄압입니까? 일을 내팽개치고 나간 바람에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은 5분짜리로 줄어들고 시청률은 추락하고 MBC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광고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한 게 노조 탄압

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오보, 제가 보도본부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노총과 민주당은 같은 오보를 한 다른 방송사들은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제가 보도책임자로 있었던 MBC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실 저는 주식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을 그렇게 경험해 보고도, 개딸 민노총을 그렇게 경험해 보고도 제가 어리석게도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등은 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소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또 개딸 이재명 정권에 충성한다고 억지로 기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와 이재명·김혜경 부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민주당은 제가 퇴임하기 전에 법인카드로 제과류를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하는 분들한테 선물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법인카드는 직원들 격려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김혜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업무용 카드로 제사상 차린 것, 초밥을 집으로 배달해서 사 먹은 것, 일제 샴푸 구입한 것, 이게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다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혜경의 경우에는 남편이 도지사 시절에 관용차를 자기 집 부근에 대기시켜 놓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개딸 여러분!

개딸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에게 업무카드 유용 어쩌고 하면서 왜 이재명·김혜경한테는 여러분들 침묵을 지키십니까? 업무카드로 제과류, 빵 사 준 거를 가지고 저를 빵숙이 만든 개딸 여러분, 이재명·김혜경은 초밥명입니까? 샴푸재명입니까? 제사상혜경입니까? 여러분은 왜 침묵하세요? 이재명은 왕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진숙은 개딸이 아니니까 정당한 사용인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민노총에게 이진숙은 철천지원수였습니다. 사실상 한 몸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민노총 노조의 주문을 받은 것인지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를 삼았지요.

이제 인사청문회 그리고 제가 출석했던 상임위원회의 몇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오디오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 사실 기관장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매우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증인으로 선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짓 발언을 하게 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긴장해서 발언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증의 처벌은 굉장히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몰아붙였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단통법 관련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저도 한번 나가려고 계획은 했었지만 담당 간부들에게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에 시장상황을 점검해 보라고

하고 간부들에게 나가라고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 의원은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으면서 왜 현장에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다그쳤던 겁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때 딴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밝히지만 거짓말하는 것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그런가?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거짓말 관련. 거짓말 관련 영상 다시 한번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경설명을 하지 않고 보여 드려서……

결국 속기록까지 가져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임위원장은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문제를 더 삼을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막말을 한 것인지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동물농장이었습니다. 흔히 과방위, 법사위가 가장 잔혹한 동물농장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과방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다가 법사위를 한두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통위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갔었다고. 과방위가 그만큼 지독한 개딸들의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물농장에 들어왔다고 해야 하나…… 더 평등한 동물과 덜 평등한 동물들이 있는 이 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덜 평등한 동물들이 앉아 있는 저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저 더 평등한 동물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더 평등한 동물이 됐을까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실까요.

참, 동영상을 틀 때 오디오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들이니까 오디오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저도 장관급 기관장,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평등한 동물은 기관장들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말을 막고 고함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쿠팡의 임원들에게도 벌어졌지요. 제가 기억하기에 쿠팡의 문을 닫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몽둥이질을 당해야 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도대체 대한민국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만 더 보여 주실까요. 진행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고……

여러분, 정말 선진 외국에서 대한민국국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 봅니다.

다음 영상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단답형으로 하라', '예스, 노로 하라', '하나 둘 셋, 답변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말 이게 뭡니까? 개딸 국민 여러분!

다음 영상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배경설명을 해 드리고 다시 한번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당한 것은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이 저를 탄핵을 시켜서,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켜서 제가 업무에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사무실조차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업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탄핵당해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월급 중의 대부분은 탄핵소송이나 그 밖의 다른 온갖 소송, 온갖 고소·고발을 해서 법률비로 들어갔지만 어떻든 탄핵 중에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본인은 매우 많은 준비를 하고 왔어요. 최저시급이 얼마냐, 무노무임 대전MBC 있을 때 적용했나…… 그러니까 왜 일을 안 하는데 이진숙은 탄핵 중에 월급을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지요. 제가 뛰쳐나왔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서 제가 업무를 못 본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정말 참 아픈 기억이 많았던 국회였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정말 참, 다시 돌려 보면서도 아픈 동물농장의 추억입니다.

영상이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 영상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개딸 여러분, 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 경내에서 하도록 한 사람의 뇌 구조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 보게 돼요. 그리고 양자역학 공부한다면서 자녀 결혼식이 국회에서 있는 건 몰랐다? 그 뇌 구조는 어떤 뇌 구조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도 모자라서 사실상 인사청문회성 청문회를 또 하루 더 열었어요. 민주당과 민노총의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민석이 총리후보자가 되자 단 이틀 청문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급이라고 할까요, 총리보다 높은지 몰랐다니까요. 총리가 이틀 청문회 하는데 저는 삼 플러스 원, 삼 플러스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4일이나 인사청문회성 청문회를 했거든요.

김민석 총리후보자,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지요. 저 이진숙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한답시고 직원에게 사 준 빵까지 거론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몇억 원씩이나 정체 모를 돈이 드러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성숙 총리 역시 단 이틀간 청문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의혹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프리패스했지요. 지금 총리입니다. 개딸 민주당 여러분, 참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국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4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하고 취임했는데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탄핵을 한 이유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MBC 이사회는 임기를 12일 정도 남겨 두고 있었고요 KBS는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임 이사진을 선임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개딸 민주당은 2인 체제로는 이사들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

습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그 불법을 만든 건 개딸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저를 탄핵시켰지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만약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두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저 이진숙뿐 아니라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했어야 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지요.

제가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진숙·김태규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한다, 그런데 김태규는 그대로 둔다, 이게 논리에 맞는 말입니까?

개딸 민주당에게는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대로 둬도 되겠지요. 한 명만 있으면 방통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요.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두 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에 대한 탄핵은 174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통상 탄핵결정은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저에 대한 탄핵결정은 6일 빠진 6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딸 민주당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를 두 사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걸 불법으로 몰아붙이자……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런 배경을 알고도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2인 체제로 방통위라는 기관을 마비시켜 놓고 업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민주당,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라면서 국회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끝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방통위라는 기관의 마비가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지요. 최민희 당시 후보가 2023년 11월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 놓고 물러났던 것이라고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딸 민주당은 다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통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무려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 발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 개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끝장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일사천리로 개딸 법들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는 이를 의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특검 정국을 지금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을 또 방송을 개딸 민노총에게 갖다 바치는 방송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개딸 민노총이 좌지우지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노총

개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대한민국을 뒤덮으려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개딸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특검으로 넘어가 봅시다.

특검, 특별검사, 개딸 민주당은 특별한 걸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특별검사, 특별법, 개딸들의 특별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내란 특검, 본 이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규명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지요. 중립적으로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12·3 계엄 진상규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소위 내란 재판도 1심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사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범 아닙니까? 더 확실한 선거법 위반범 아닙니까? 내란·외환이라고 해 놓고 이걸 규명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원래 이름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특검, 원래 이름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이 역시 수사 방해·사건 은폐라고 규정해 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딸 민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국민 여러분을 세뇌시킵니다. 이미 내란이라고 정해 놓고 특검수사를 시키니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을까요? 이미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정해 놓고 수사를 시키니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을까요? 수사 방해·사건 은폐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 그 이름에 짜맞추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딸 민주당 이전의 특검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살펴봤습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여기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수사 방해니 내란·외환이니 이미 사건을 규정해 놓고 특검수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역시 '의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이번 3대 특검, 개딸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란·외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확정적인 단어만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 더 매운맛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개딸 이재명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개딸 정권은 5년 내내 이 3대 특검으로 정권을 채울 생각입니까? 이 집단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면 법을 바꿔 버립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합법으로 만듭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개딸 민주당은 합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제가 겪은 개딸의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지금부터 고발하겠습니다,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

2025년 1월 23일 저는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미 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퇴 압박이 더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압박에 굴복해서 사퇴했다면 민주당은 더 쉽게 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개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에게는 일이 꼬이게 됐지요. 방통위원장이 남아 있으면 개딸 민주당의 대통령 임명 몫이 1명으로 줄어들지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의힘 몫인 이진숙이었겠지요. 그리고 상임위원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해서 방통위원회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됐던 겁니다. 이진숙이 대통령 몫 위원장이니까 그래야 이재명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2명, 2명을 민주당, 국민의힘, 2명씩 나누어서 하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해서 3 대 2 구조, 민주당이 우세인 방통위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물러나면 안 되는 거지요.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고 개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재명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그는 저에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민희 당시 과방위원장이 저에게 물었듯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면서 지금 농림부장관으로 있는 그 사람처럼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행동했다면 저는 아직까지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제 임기가 2026년 8월, 다음 달까지였거든요. 민주당이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저를 잘라 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하니까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입틀막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방송3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발언을 하니까,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비공개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정치 하느라고 바깥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저를 다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 못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격노라는 것을 그때 처음 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격노, 아마 그 무시무시한 표정과 그 거센 말은 형수한테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수모를 당한 이후에 저에 대한 사퇴 압박, 더더욱 거세졌습니다. 물론 국

무회의에 다시 오지 마라 이런 통보를 받았고요. 또 옆에서 총리라는 사람은 역시 제가 말을 이어 가려고 하니까 '그만두세요!'라고 하면서 거들더라고요.

휴가 시즌이 됐습니다. 이재명 개딸 정권이 6월 4일에 취임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휴가 시즌이 됐지요. 방통위 사무처장이 저한테 위원장은 언제 휴가를 갈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휴가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휴가 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제서야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원장이 휴가계획을 세워야 다른 간부들도, 다른 직원들도 휴가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7월 며칟날로 하자라고 해서 휴가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일주일 전에 대통령실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보고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어느 날 K 모 신문에서 아침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신청' 이렇게 기사가 잠깐 나더니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가 언론 브리핑까지 하고 언론에 통지까지 했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재난 시기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고. 참, 휴가 간 것도 아니고 휴가 신청한 것 가지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방통위 사무처장한테 '만약에 내가 휴가를 가더라도 방통위, 과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일이 있으면 금방 나오겠다'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해서 휴가 신청한 게 이렇게 사퇴 압박 도구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요.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 저한테 지방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우상호 정무수석의 예언대로 제가 지방선거에 나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를 잘라 내지 않았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임기는 다음 달까지입니다.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우상호 정무수석 본인이 지방선거 나갈 계획이 있었나 봐요. 지금 강원도지사가 됐지요. 본인이 그때 사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임기 채우게 해 달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재명 정권 5년까지 임기를 맞추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었으니까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사퇴해야 됐던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전방위로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데도 저는 사퇴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퇴를 안 하니까 민주당이 참 기발하더라고요. 정말 개딸들은 창의적입니다. 결국 법을 바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름을 바꿔서 '미디어'라는 글자를 하나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 여러분,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런데 그 기능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과기부에서 40명 정도 전근 오는 정도고 거의 그 기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자동 승계되도록 했어요. 단 부칙에서 예외가 있었지요, 정무직은 제외한다. 정무직은 누구? 이진숙 한 명입니다, 한 명.

얼마나 기발합니까? 이진숙 아무리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라는 세 글자 집어넣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 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래서 개딸 민주당이 하는 건 다 합법적이에요. 왜? 그들이 원하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개딸 민주당이 원하면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개딸 이재명 정권에서 법치의 의미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구나, 개딸들에게 법치는 법을 지배하는 것이구나,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되는구나 이런 기적을 개딸 민주당은 실현시켜 줬어요. 기가 막힌 개딸 정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진 이 국회였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대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선출하고자 하던 나경원 간사를 민주당이 투표로 저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요. 왜? 개딸 민주당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300석 중에서 200석에 가까운 170석, 180석, 190석에 이르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국민의힘 간사도 민주당이 투표로 부결시키면 국민의힘 간사 못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개딸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1당 독재 국회, 민주당 독재 국회 바로 이곳입니다. 개딸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은 사실상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별 기업에서 벌인 홍보 행사가 어떻게 5·18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스타벅스에서 행한, 스타벅스에서 기획한 홍보 행사가 이재명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하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는 곧바로 5·18을 모욕하는 그런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 가면서 5·18 관련 교육을 시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이 응원가를, 응원가에 이 문구를 사용한 죄로 5·18 모욕범이 돼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비난했다고 바로 스타벅스 자체가 금기어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단톡방에 '스타벅스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5·18 모욕범이 됩니까?

이재명 개딸 정권은 더 많은 성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딸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예, 5·18은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대요. 5·18이 성역이라면 5·18 유공자 명단 가운데서 그들의 공적·치적을 한번 알아봅시다.

누가 어떤 거룩한 업적을 행했는지 왜 안 알려 주시는 거지요? 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돼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18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적을 세워서 유공자가 됐는지 알려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후세, 후손들이 그 거룩한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5·18 희생자·피해자를 모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광주에 친구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심지어 개딸 여러분, 5·18이 성역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타벅스 가야지가 5·18 모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허구입니다. 그건 존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딸 여러분, 스타벅스 가야지가 왜 5·18 모욕인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야구소프트볼위원회는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6개월

출전 정지를 미리 때려 버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재명이 스타벅스를 비난, 비판했던 것이 바로 5·18 모욕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고 사전에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조치를 먼저 취한 것입니다. 이건 학생들의 생각을 예단하고 내린 조치 아닙니까? '너네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얘기한 건 5·18 모욕하려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한테 6개월 출전 정지를 해야 되겠어', 이건 생각에다가 수갑을 채운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5·18 모욕이라고 결정하고 출전 정지를 내렸습니까? 야구소프트볼위원회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마 민주당 주도로, 개딸 민주당 주도로 스타벅스 가야지는 5·18 모욕이다 이런 법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단톡방에 '스타벅스 갑시다' 이 말 또 못 하게 되겠네요. 왜? 개딸 민주당 정권은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만드니까요.

아까 어떤 분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고 처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재수 부산시장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까르띠에 시계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재수의 까르띠에 시계는 민중기 특검이 몇 달 묵혀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개딸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것 문제를 안 삼으시지요?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는 몇 달 묵혀도 여러분들은 조용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삼네요. 제가 권성동 의원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딸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광주에, 호남에 친구가 있고 또 호남 출신의 조배숙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재명 개딸 정권은 참으로 터무니없이 그들의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전남에, 서남지역이라고 서남부권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톱다운 방식.

실제로 미국에서 반도체법 칩스(CHIPS)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든 제3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든 정책을 먼저 발표를 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또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서 꼼꼼하게 어떤 자격에 부합하는지 조건이 맞는지 인력은 있는지 인재는 있는지 용수는 충분한지 전력은 충분히 공급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MAGA,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슬로건대로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던데 개딸 이재명 정권은 왜 국내 기업들의 총수를 끌어다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이재명 개딸 정권도 해외 기업들 해외 회장들 대한민국에 좀 데려다가 투자 발표하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내걸더니 이재명 개딸 정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기업 회장들 데려다가 대한민국에 투자 발표 못 합니까? 이재명은 한다면서요. 기껏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 팔 비틀어서 유도했다, 유인했다, 팔 비틀어서.

개딸들 지지 세력이 많은 광주·전남 지역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겁니까? 저는

광주·전남 지역이 발전하는 것,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주·전남 통합됐습니다. 1년에 5조 원씩, 1년에 5조씩 4년에, 5×4=20, 20조 투입이 되지요.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됐습니까? 이견이 있다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지요. 이것 차별적인 정책 아닙니까? 광주·전남은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되는 것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1년에 5조 원씩 4년에 20조 원도 이번에 제2 호남 반도체, 제2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보니까 그것도 참 정말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더라고요. 무려 800조 원. 절 한 번 하는데, 90도짜리 절 한 번 하는데 400조 원씩 무려 800조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제발 해외 기업 총수들 데려다가 90도 절하고 800조, 1600조 투자 좀 유치해 보세요. 저도 그러면 '대통령님' 하고 존경할 것 같습니다. 왜 국내 기업들 총수만 그렇게 압박하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개딸 정권이 민노총에 좌지우지되는 정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민노총 간첩 사건에서 드러났던 민노총 간부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 서약 추가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자 충성맹세문입니다.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 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휴의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 조선, 백두산 민족의 기백으로 선군의 총열에 붉은 기 묶고 앞세워 억척같이 어깨에 걸고 한 발 한 발 진군 또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4일 자 충성맹세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당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사상에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우리 당 제8차 당대회 기치 높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으로 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따라 투쟁 앞으로.

이미 이들은 통일된 그들의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세력들입니다.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한 가운데에 민노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 그리고 사회수석은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늘리고 늘리고 또 늘려서 내란몰이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문화일보 사설에 인용된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말입니다.

종합특검의 원천적 문제와 연장의 부당성.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서 이미 3대 특검이 구성돼서 각 180일, 180일, 150일간 연 510일 수사했음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이 구성돼서 지난 2월부터 오는 24일까지 150일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다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에게 공

소유지 권한을 주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부당하다.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있는 임시 수사기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특정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구성되는 임시 수사기관이다. 상시 특검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특검은 후보 추천을 여당과 조국혁신당만 하도록 설계돼서 편향성 우려가 큰 상황이며 수사 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의혹만 키우는 일이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의 부재.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105일이었습니다. 이 특검을 제외한 모든 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가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도 70일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을 비교하더라도 종합특검이 이미 부여받은 150일을 초과해서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종전 3대 특검과 거의 중복된다. 종전 특검이 혐의가 없어 불입건·불기소했던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기소하면서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법원 역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명이나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및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당론인 수사·기소 분리와의 모순. 특검은 범죄 인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는 야당이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논거로 주장해 온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전혀 맞지 않고 모순된다.

위헌 소지가 있는 권한. 헌법은 공소유지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인 영장 청구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특별수사권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률상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

‘신뢰 잃는 특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사저널에 실은 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네 번째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특검은 본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수사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2차 종합특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 시작부터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에 희화화되는 특검.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3차, 4차 특검을 계속 이어 가는 태도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충돌 당사자가 수사. 2차 종합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추천권을 부여해 인적 구성의 편향성 논란을 자처했다. 특히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전력이 있어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논란이 커지자 수사 담당자를 교체했으나 권 특검보가 특검팀에 잔류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 모순을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검법 위반하는 내부자들. 김지미 특검보는 편향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주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소환 조사를 받는 장면들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특검이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표적수사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행태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특검보를 고발까지 한 상태다.

특검의 본질 회피. 특검은 수사의 성과나 기소가 아니라 예단 없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갖춰져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가능하므로 예단 수사는 절대 금물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까지 고쳐서 이재명 사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공소 유지 변호사 지위 부여를 하고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사위가 의결한 위원장 대안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서 공소 수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수행까지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소취소로 나아가기 위한 공소권 확대 첫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위선적인 반헌법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과 함께 제 발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 개딸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 특검 180일, 김건희 특검 180일, 채 상병 특검 150일을 꽉 채워서 수사했습니다. 이전 특검의 수사기간과 비교할 때 두세 배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미제사건은 2만 건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국 평검사 10명 중 1명이 특검에 동원됐으니 일반 국민들이 관여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소위 종합특검이 실시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무능 탓인지 무리한 탓인지 무려 영장기각률이 65%에 달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김종욱 전 해경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조관, 이은우 전 KTV 원장, 김오진 전 국토부1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감사원 간부 손 모 씨 등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무리한 것입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려 한 것입니까? 마구잡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 부족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특검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시도입니다.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을 특검 공화국, 개딸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만으로는 이런 시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의석 가운데 겨우 10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석 가운데 109석입니다. 개딸 민주당은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의 일당 노동당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돼야 세상이 변합니다. 개딸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이 개딸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을 막아 낼 수 있습니다. 행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진숙이었습니다.

○부의장 남인순 이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전은수)

(03시16분)

○부의장 남인순 다음은 전은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덕흠·남인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내란정당, 내란동조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강하자는 내용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을 막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내란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정당이 취할 태도입니까?

입으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여전히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내란정당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로 남을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존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이미 수사는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란 은폐와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비롯해 그동

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1시간 반 정도 전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병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병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유병호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이라는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요. 유병호는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자제하라, 그런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는데요. 특검팀은 유병호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유병호는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었는데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지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병호가 피감사자인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작입니

다. 반면 유병호는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기사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병호는 특검팀 출범 후에 일곱 번째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접어든 이달 들어서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만으로도, 이 기사만으로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이 연장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부 기사가 나와서, 이런 근거가 돼서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만으로는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방대한 압수물을 원활하게 넘겨받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구도라는 건데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수사 이후 재판과 공소유지까지 책임 있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려 방대한 수사기록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맞춰 형식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사실관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무제한토론을 또 신청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보강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란의 완전한 종결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내란세력과의 절연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내란세력과의 절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제인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3주기였습니다. 국가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목숨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사 외

압의 실체와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죽음의 진실마저 제때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고인과 유가족께 참으로 송구할 따름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지금도 수많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청춘을 군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리한 명령이 우선되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린 책임자를 구명하기 위해 권력을 가진 어른들이 뒤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마주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와 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명령에 따라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한 명령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고가 발생하면 진실을 숨기지 않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오늘까지 모두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80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렇게 큰 의지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영상으로만 이 광경을 보다가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세 번째 찬성 주자로 서게 되면서 사실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루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 이곳 텅 빈 본회의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과연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직자 한 사람의 1시간은 국민 전체의 1시간과 같다는 취지로 공직자들의 책임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과 정당에 투표한 수만, 수백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시간은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국회의원의 1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부여받은 시간입니다. 국회의원의 1시간은 개인의 1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에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까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바지에 달해 있는 종합특검의 연장 기한에 관한 법안, 여기에까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를 단죄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사할 것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밝힐 것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오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충분한 시간과 인력,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의혹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 총 열네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2호, 외환입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인 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 확성기, 전단 살포 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3호,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4호, 내란 동조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 문건 계획 혐의 사건,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 내 계엄 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듣기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호,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입니다.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및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6호, 내란동조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7호, 내란동조 사건입니다.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김용현·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해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8호, 불법 선거캠프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입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9호, 불법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10호, 관저 이전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11호,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사건입니다.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12호,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13호,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14호, 비화폰 이용 및 국공유재산 유용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공무원 직권남용입니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이 범죄혐의의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무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

다.

2차 종합특검법 제1조 1항 8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단순히 한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의 원칙과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조사 문항과 조사 방식, 표본과 수치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민간 정치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 측에 사전에 제공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를 토대로 선거 전략과 캠프 인선, 경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직접 요청하고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의혹, 선거 판세와 경쟁 후보의 지지율을 수시로 점검하며 조사 방향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지요. 단순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받아 본 수준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앞서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는 녹취 내용과 실제 조사 표본이나 수치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여론조사는 민심을 측정하는 수단이지 민심을 조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수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선거 전략과 여론 형성에 활용했다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제삼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았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겠지요. 특정 후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된 여론조사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 대가로 공천이나 공직, 국책사업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가 결합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혹은 대통령선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경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공천까지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요. 특정 후보의 출마 지역을 변경하거나 공천 방향을 조율하고 캠프 인사와 당내 주요 인물의 배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기관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도 아닙니다.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집권 여당의 공천과 선거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천은 정당의 사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적인 과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인이 밀실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와 공천 여부를 정했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사전에 왜곡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같은 국책사업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관련

한 비공개 정보가 민간인에게 사전에 전달되고 그 주변 인물이나 가족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정보가 사적 관계를 통해 유출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각각의 사건을 서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왜 반복적으로 제공됐는지, 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상 이익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대통령 부부가 어느 단계까지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사적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이권 개입으로 이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누가 비용을 냈는지, 결과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운동과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하나하나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국민께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인이 공식 조직 밖에서 선거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론조사와 공천, 국책사업이 사적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됐는지를 밝히는 수사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천과 이권을 주고받는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행위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적 권력 네트워크가 국정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면 그 전모 역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의 역할이고 국회가 특검에 충분한 수사 범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공천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최고 권력과 관련된 의혹일수록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그 여론조사는 누구 요청으로 실시됐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그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사적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2차 종합특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선거 과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과 관저는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 시설입니다. 그 이전과 공사는 보안과 안전, 공정한 계약 절차가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심에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있습니다.

21그램의 대표는 김건희와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부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첫 전시회 인테리어 등에 참여했고 21그램 설립 이후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인테리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에도 참여했습니다. 2022년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21그램 대표의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었는지 아니면 국가계약 수주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특수관계였는지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 절차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의 증축과 구조보강,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총괄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말 21그램을 시공업체로 선정했고 윤석열의 임기가 시작된 뒤 5월 12일 견적서가 제출됐고 5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절차는 그보다 열흘 뒤인 5월 25일에야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미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까지 시작된 뒤에 입찰공고가 게시됐다면 그 입찰은 경쟁을 통한 공정한 업체 선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업체에 형식을 갖춰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그런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입찰공고가 오전 10시 11분에 게시되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1시에 개찰과 낙찰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계약은 절차가 곧 공정성입니다.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자격과 기술, 가격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업체가 정식 계약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의 입찰은 이미 시작된 공사의 외형을 갖추는 절차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가계약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공사 수행 과정에도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21그램이 계약한 하도급 업체 18곳 가운데 15곳이 관련 허가를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준공검사를 생략하고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남인순 부의장, 박덕흠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담당하고 준공검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 대통령 경호, 시설 안전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시공업체의 선정 과정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의사나 지시가 전달됐는지, 공사의 범위와 비용 결정에 관여했는지, 계약 전 공사 착수를 누가 승인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관계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압도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21그램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희림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여러 차례 후원한 업체입니다. 희림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

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연이어 포함돼 해외순방에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복지재단에도 약 1억 원을 출연한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희림은 2022년 용산 대통령집무실 설계·감리 계약과 2024년 관저 2차 증축 설계를 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공사 수주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4개월 동안 희림이 수주한 정부 공사 규모는 약 18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이전 약 3년 3개월간 수주한 약 6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입니다.

물론 수주액이 증가했다 그런 사실만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와 오랜 후원 관계에 있던 업체가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공사를 맡고 정권 출범 이후 정부계약 수주가 급증했다면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희림이 각각의 사업을 어떠한 절차와 평가를 통해 수주했는지, 경쟁 업체와 비교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지는 않았는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측의 추천과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서도 희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희림 대표를 함께 만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관계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단순한 사업상 접촉인지, 대통령 배우자를 통한 ODA 사업 청탁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ODA 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와 민간업체, 대통령 배우자 주변 인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는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시설 공사를 둘러싼 현대건설의 공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스크린골프장과 초소 등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았고 하도급 업체의 비용 일부를 다른 현장의 일감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스크린골프장 공사 견적은 약 3억 원이었지만 경호처와 현대건설 사이의 계약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이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와 계약금액 사이의 차액을 현대건설이 부담했다면 그 이유와 대가를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비를 민간기업이 대신 부담했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상 편의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까지 열어 놓고 수사해야 합니다. 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비를 부담했는지, 이후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수주 과정에서 어떠한 편의나 특혜를 기대하거나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 부부, 현대건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들은 각각 분리된 개별 계약 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형성된 사적 인연이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공사 수주로 이어지고 건진법사와 종교단체, 민간업체가 국책사업과 ODA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대기업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대가로 국가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하나의 구조적 의혹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공사 시행, 대금 지급, 준공검사, 후속 정부사업 수주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종합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업체를 누구에게 추천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안부·경호처 관계자들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정상적인 계약 절차가 왜 무너졌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업체들의 후원과 협찬, 공사비 부담이 국가계약 수주나 국책사업 참여의 대가였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은 권력자의 지인에게 나눠 주는 일감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을 사용해 국가의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가 국가 핵심시설 공사를 맡거나 민간기업이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다른 사업을 얻었다면 국가권력이 사적으로 거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닙니다.

국가계약 업체를 추진하거나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없습니다. 정부사업의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국가기관의 계약과 국책사업에 개입했다면 이는 법적 권한 없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전형적인 비선 개입이자 국정농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됐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배경이 무엇인지, 민간기업이 관저 공사비를 대신 부담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마무리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이 수사의 마무리를 그만하자는 것입니까? 수사를 가로막는다고 의혹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국민께서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알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런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계약서와 심사 자료, 공사비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국가계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인맥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행사했다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국가사업이 권력 주변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느냐, 누가 계약 전 공사를 지시했는가,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을 누가 묵인했는가, 대통령 배우자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가, 기업의 후원과 비용 부담에는 어떠한 대가가 있었는가, 그 대가가 정부 공사와 국책사업의 특혜로 돌아갔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인연과 이권을 위해 사용됐다는 의혹을 남겨 둔 채 사건조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모든 계약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수사를 해 왔고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위법한 지시와 특혜가 확

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권력자의 사적 관계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사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명로비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 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가 특정 인사를 위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젊은 해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에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 친분을 맺은 민간인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제한된 기간과 인력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와 안전조치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사실을 확인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내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 했다는 의혹, 해병대 수사단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검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왜 갑자기 뒤집혀졌는지, 누가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시키고 사건을 회수하도록 했는지, 정당한 수사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에게 왜 항명이라는 굴레를 씌웠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까? 대통령이 격노하고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움직이며 정당하게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고 수사단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려 할 정도로 무리한 외압을 행사하려 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전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압을 누가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어떤 경로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에 전달됐는지, 그 대가로 어떤 인사상·정책상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밝혀야 비로소 진실의 몸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서 김장환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교계 로비의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김건희로 이어지는 관계와 연락 정황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을 매개로 한 구명로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명로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통화와 만남, 인적 관계와 전달 경로의 단서가 확인됐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그 부탁이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명로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제한된 활동 기간 안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로비의 특성과 복잡한 인적 관계를 모두 추적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로비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임성근을 빼 달라는 명시적인 지시서가 작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분이 있는 민간인을 통해 전화와 만남으로 부탁이 전달되고 권력 핵심부가 이를 받아 공식적인 지휘와 명령의 형태로 실행하는 것이 로비 사건의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따라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과 비화폰 기록, 메신저 대화, 방문기록, 만남 전후의 인사조치와 수사 지시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받쳐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정밀하게 종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성근 전 단장의 구명을 처음 요청했는지, 이종호와 건진법사, 김장환 목사 등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들의 요청이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대상자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에서 축적한 단서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최종 수혜자와 청탁자, 전달자와 실행자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혔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을 밝힐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특검이 확인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를 디딤돌로 삼아 한 단계 더 깊은 수사와 이 수사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외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되지 못한 점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원, 사건 회수와 재검토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시를 수행한 간부들, 보복성 인사와 조직 축소를 계획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중간 간부의 행위만 처벌하고 그 지시를 내린 최종 책임자를 밝히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특검은 수사 외압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 있는 구명로비의 실체, 최종 책임자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끝까지 들어가 진실의 전모를 밝히는 길입니다. 오히려 기존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구명로비의 연결고리와 최종 지시자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일에 시효를 정하듯 수사 종료일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수사 종료일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맞춘 형식적인 수사 종료가 아닙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고초를 겪은 박정훈 대령과 수사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는 권력자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의 생명을 지키고 잘못된 명령에 책임을 지며 진실 앞에서 처벌을 피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물러설 때는 죄를 피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책임 있는 사람은 권력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명로비의 청탁자와 전달자, 실행자와 최종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들은 이미 모두 규명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입니다.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와 공천,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의혹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가 개인의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 기소까지 이르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묵인했는지, 지원했는지, 나아가 함께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특검이 제한된 수사기간 안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제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기간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도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뇌물수수 혐의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와 관저 이전,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 역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가운데 일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 지연과 은폐, 비호, 증거인멸 및 그 교사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과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한 행위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서로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당시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던 윤석열과 대통령실,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과 관계부처의 핵심 책임자들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몇 시간 전 발부가 되었지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지요.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긴 했지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만으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데 이견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단순히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은 아닙니다.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범죄의 배후와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지요.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출장조사만 실시했습니다.

국민께서 이를 정상적인 수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나온 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진실에 다가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사건이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지휘부와 수사 대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 상황이 공유됐는지,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정 처분을 유도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김건희 씨,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박 전 장관이 관여했다라고 하지요.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팀 인사를 통해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마무리되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교체됐는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범죄를 가능하게 한 대통령의 권력과 이를 비호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법무부와 감사원, 권력기관이 한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동원됐다면 이는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국가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자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결국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시자와 공모자를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수사의 목적은 단순히 몇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히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며 법정에서 그 책임을 온전하게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핵심 증거가 종합되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또다시 불완전한 진실과 미완의 단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과거는 어떠한 미래를 마주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대로 수사인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확보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온전히 넘겨받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도 기존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특검을 끝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계엄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는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일이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행위입니다. 오히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오히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사기간 종료라는 행정적 결론이 아닙니다. 누가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누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감췄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 진실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내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책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자고 오히려 종합특검을 주장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을 남겨 둔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의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책임을 규명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와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충분한 수사 없이 충분한 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재판 없이 온전한 책임자

처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책임자 처벌 없이 완전한 내란 종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완의 수사를 완결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에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3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안 제6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해 왔던 그런 방대한 부분들을 종합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3대 특검이 출범하고 다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게 된 근원적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에 있습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고 인정을 받았지요. 무인기 평양 침투작전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서 국가의 안보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북한이 무인기 작전을 계기로 방공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당시 보도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병력의 국회 진입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서 병력을 국회로 보낸 작전부대 중 한 곳이 바로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수사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적으로 기간을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과 수사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우리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들이 수반되어서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의 문을 열었던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충분한 수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2·3 비상계엄, 탄핵·파면을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저희가 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어떠한 사법적 평가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해서 통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직후 발령된 포고령 제10호, 비상계엄하 1980년 8월 4일 발령된 삼청교육대 관련 포고령 제13호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정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었습니다. 비상계엄 계엄 포고 1호의 내용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다.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계엄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하지요. 역사

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 등 긴급재정명령 등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해 왔는데요.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 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에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의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다.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계엄 선포의 본질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의 재현임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윤석열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충격 그리고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윤석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다.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평상시에 헌법질서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다.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윤석열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입니다. 그중 하나인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윤석열이 보인 태도 그리고 윤석열이 보인 주장, 그로 인해서 윤석열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파면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그리고 밝혀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특검을 통해 밝혀진 수사 내용입니다.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을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을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를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통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 7개의 출입문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김봉식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보고해 국회를 차단하기로 하고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경비안전계장이 국회의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 벽을 설치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봉쇄하라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합니까?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있습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침투조를 이끌고 국회 외벽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의 출입을 차단하고 707특수임무단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윤석열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홍장원은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며 체포를 지시받고 여인형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지요.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은 국회 본관의 조명차단기를 내려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이 9줄·10줄을 밝히는 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지시사항을 밝혀내려면 최종 책임자, 누가 이렇게 지시했는지, 누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결과까지 봉쇄하기에 이르렀는지, 전력을 차단했는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당시 체포 대상 명단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압수수색의 건도 있었지요.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곽종근에게 계엄선포 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확보하면 계엄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획처장 등은 실탄을 소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화선을 차단한 후 서버실과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거했습니다.

이 내용들 쉽게 밝혀질 수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그치지 않지요. 주요 설비의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실을 폐쇄하고 내부 조직들을 촬영해 문상호에게 전송해 체포 대상이 될 주요 직원 3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계엄군은 과천청사에 110명, 수원 연수원에 130명,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을 배치해 약 3시간 동안 해당 기관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문상호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포승줄 등을 사용해 다음 날 오전 출근하는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체포 대상인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그리고 실제 증거를 통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수사의 대상들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밝혀진 자료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활동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나락에 떨어졌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의한 내란 행위. 윤석열의 계엄선포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지위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됩니다.

윤석열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주요 시설을 촬영하고 관리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시키는 등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명령을 따라야 하는 여인형 이하 군인과 조지호 이하 경찰을 통제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기능을 장악하려고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병력과 경찰력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폭력 행위를 일으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이와 별도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장악하려고 했지요. 이러한 부분들의 시작으로 밝혀지는 진실들에 지금 특검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윤석열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사태가 있지 않음에도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했고 결국에는 탄핵되었고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수적인 밝혀지는 내용들에 있어서 아직 그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진실에 많이 다가섰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이 순간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외환 혐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을 도발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2024년 10월경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고 대북 비방 메시지를 담은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중대한 군사,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후 오물풍선을 대한민국에 수차례 보내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경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기획한 것이고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해서 큰 논란이 되었었고요. 2024년 12월 10일 민주당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보관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닌지 그런 질문을 해서 의혹이 더욱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무인기, 경기도 연천에 추락을 했었지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고, 드론에 대북전단을 장착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는 군 내부 증언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를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왔고 결과를 만들어 냈지요.

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이고 여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에서의 외국은 적국이나 준적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의 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외국이나 적국 또는 준적국에 해당해야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보면서 대법원은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는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이 부분은 헌재에서 설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여야 하고,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과 합세하여야 하는데 윤석열의 무인기를 발견한 북한의 태도가 환영하거나 반기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국과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쉽지는 않았겠지요. 다만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군사상 이익이란 군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형·무형 일체의 이익을 말하고 침해 공여 행위는 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고 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빌미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도발하려던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이 아니라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밝혀내야 할 것이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2차 종합특검의 기한이 반드시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특검법은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지금까지 특검 정말 수사 제대로 해 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족한 수사인력 보강해야 하고 수사기간 연장해서 제대로 종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의 진상 밝혀야 합니다.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 필요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 세력, 함께한 세력,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을 막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 했는데 단순하게 수사기간이 끝났다라고 해서 수사를 그만해야 된다. 맞습니까?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정당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이 방대한 양의 수사…… 사실은 여기에 있는 수사 대상의 하나하나, 각 호의 한 문구를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릴 일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해 왔고 제대로 수사를 해 왔기에 여기까지의 진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기존의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내란과 외환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지금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의 실체도 조금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3대 특검이 지금까지 확보했었던 수사기록과 방대한 압수물, 제대로 이어받고 넘겨받아서 제2차 종합특검 수사 연장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법 통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제도적 공백을 위한 부분은 저희가 여야 막론하고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입니다.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려서 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압수물 분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련자 조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통과 꼭 밀어주십시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특정한 날짜에 맞춰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사실관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고 밝히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건들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내란, 외환 그리고 이런 사건 은폐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다들 부인하고 있던 과정,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수사를 하는 과정, 결코 쉽지 않음에도 진실에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야 막론하고 2차 종합특검 반드시 진행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수사 방해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내란세력과의 절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해병대원 순직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사항,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고,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명령에 따라서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한 명령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검 수사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시간이 넘는, 22대 국회 들어서 삼십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어떠한 다른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진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음에도,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단죄를 하는 것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에도, 이미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처리 지연에 소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사할 것은 철저히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힐 것은 끝까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기한, 활동을 연장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우리 내란에 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특검에서 밝힌 겁니다. 특검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특검의 내용들이 끝까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이것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끔찍합니다.

대북 심리전의 방법을 이용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전쟁 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무력 충돌 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밝히는 것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까지나 밝혀냈습니다. 많이 밝혀냈습니다.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라면, 이게 바로…… 외환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 내란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면, 진정한 보수의 국민의힘이라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다 제쳐 두고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 그에 관계된 그런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제대로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선언하고 제대로 이행하게 하고 먼저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일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이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어떻게 밝혀낼 것입니까? 정말 끈질기게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대로 수집해 왔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0일 동안 특검에서는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막아설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이버 사찰 및 여론 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혐의. 내란에 동조하였다, 이것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증언을 받아 내기 위해서 수사를 할 때도 하루, 이틀, 3일, 4일이 걸립

니다. 몇 차례가 걸릴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150일 동안 해 왔고 그리고 정말 잘 밝혀내 왔고 밝혀내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나서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밝혀 달라, 수사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긍하는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했다, 그러는 등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고 그리고 명태균, 전성배 등 이런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선거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을 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범죄 혐의 사건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개 사건 중에 겨우 한 가지일 뿐입니다. 겨우 한 가지인데도 너무너무 크고 거대하고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그 일가가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창원국가산단까지 나왔지요. 이게 불법 선거캠프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에 이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와도 이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기에 종합해서 필요한 특검이었고 그것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었다면 또는 종합특검이 아니었다면 밝혀지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의혹들이었지요. 김건희가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문건이 오가고 지시사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인테리어 업체, 김건희와 굉장히 친분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가 무면허 자격으로 이렇게 관저 이전, 집무실 만드는 데 개입을 했다. 입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김장환, 민간인을 매개로 채 해병에 대한 사건 구명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들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누가 그 지시 과정에서 관련자들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또 이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그것을 활보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까? 제대로 특검에서 수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사항을 박성재에게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서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그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쉽게 스스로 인정할 사건이 아닙니다. 특검만이 밝혀내 왔

고 밝혀낼 수 있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내란 동조 사건과도 이어지는 사건이기에 종합특검만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김건희가 비화폰 이용을 왜 했는지,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검찰에서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특검에서 해 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활동기간 연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말 한 14개 정도의 거대하고 대규모의 그런 사건,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수사를 고의적으로 비호했다, 그리고 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한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밝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포함되어 있도록 명시되어야지 깔끔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이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입니다. 그리고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그런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 그런 선거여야 합니다. 그 대통령선거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주권의 원칙과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민주주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었다. 조사 문항, 조사 방식, 표본과 수치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되었다, 조작되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밝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대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에서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 측에 사전에 제공하고—민간에서요—후보자와 배우자가 이를 토대로 선거 전략과 캠프 인선, 경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직접 요청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선거 판세와 경쟁 후보의 지지율을 점검하면서

조사 방향에까지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아 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앞서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있었다는 녹취 내용. 그리고 실제 조사 표본이나 수치가 부풀려졌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이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조작하는 도구입니까? 여론조사는 민심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범죄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 범죄 아닙니까? 이것을 수사하고 있고 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한을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 여야 막론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대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요. 여론조사 비용 제대로 지급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제삼자가 비용 대신 부담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 대가로 또 무엇을 요구했고 약속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검의 대상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대가가 창원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정보를 공유받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밝혀내야 할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종합특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가 결합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기한이 다됐다고 해서, 수치적으로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에 있어서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것만 보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에. 지금 민심을 받아 내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서 민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토론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용 아닙니까? 저라면,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힘 경선 불법적인 선거 정황, 비용 어떻게 됐는지,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그 과정에서 피해받은 당사자는 아닌지 오히려 밝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밝혀 달라고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특정 인사의 공천, 지역구 배치 관여했다는 정황도 제기돼 왔지요. 공천 방향을 조율하고 캠프 인사와 당내 주요 인물의 배치, 영향력을 행사했다. 거기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사 내용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 일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적인 과정이 바로 공천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인이 밀실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후보자의 지역구를 정하고 공천 여부를 정했다

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시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같은 국책사업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다 하면 국민들께서 앞으로 국책사업 지정할 때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운데 힘들어 죽어 나가는데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세밀한 정책에 대한 토론은 하지 못할망정 이런 내용을, 진실 규명하는 이런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국책사업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국정농단이 될 것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가 민간인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내용 그리고 그 주변 인물이나 가족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중요 정책 정보가 사적 관계를 통해 유출되는 게 마땅합니까?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 활동 기간, 수사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소유지 변호사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특검의 수사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사건들을 결코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무장 헬기가 북방한계선 위협비행 하게 하고 드론 등 평양 침투를 시키고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정보기관이 이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그러고도 불법 선거캠프 통해서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을 하면서 조작을 하고 민심을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친분이 강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관저 이전과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을 맡기는 그리고 각종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한 민간인들에게 각종 사업 특혜를 주고 국가산단 지정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의혹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정보가 다시는 사적 관계를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무면허, 자격 없는 자가 국가의 대소사에 무자격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밝혀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을 겁니다. 비공표 여론조사가 왜 반복적으로 제공됐겠습니까? 쉽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누가 스스로 자인하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사적 관계가 집권 이후에 국책사업과 이권 개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누가 스스로 자수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검만이 밝혀낼 수 있고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란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란세력과 제대로 절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제대로 마무리해 달라고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수사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영장 발부가 되어서 구속

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라는 데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일 때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유병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유병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좀 더 조사할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 오늘 저희 찬반토론은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께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은 좀 더 수사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더 할 필요성, 수사기간의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병호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특검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당선 후에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그리고 관저를 옛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지요. 이후에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이미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약 2년간 감사를 했고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서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 논란의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중요한데 공사업체 선정 경위가 담기지 않은 이 감사보고서,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일까요? 당연히 논란이 일었겠지요.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검팀에서는 여러 수사를 통해서 유병호가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용들이 밝혀지겠지요. 감사를 하면서 업체들과 대면조사를 하고 조사서류를 받았다면 하루빨리 공사업체 선정 경위들이 밝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유병호가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이런 여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공식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함에도—아마도 내용들이 이력이 남을까 봐 그랬을 것 같은데요—구두로 요청을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자제하라 그런 취지를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감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누가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아니면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할 필요성,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유병호의 영장 발부로 인해서 밝혀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유병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팀의 특별 연장 기한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은 이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공사 참여를 요청했고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즉 21그램은 종합건설면허가 없기에 공사 전반을 총괄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서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팀에서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김건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바로 특검팀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검팀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인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연대에서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 실제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팀은 이 내용들을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팀은 이 구속된 것을 시점으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는 22일에는 김건희에 대한 소

환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한 연장 무조건 필요합니다. 수치로 기한 연장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 진실,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이 진실을 무마하라는 것입니까?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이 이 내용들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검의 역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적 권력 네트워크가 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에까지 개입했다, 그 전모 역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밝히겠습니까? 바로 특검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권력자들, 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 쉽게 찾을 수 없는 부분들 많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많은 방대한 수사 자료들을 종합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연장되어야 합니다. 진실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의 역할이고 국회가 특검의 충분한 수사 범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공천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는 없고 수사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여론조사 개입 관련 내용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그 여론조사 누구의 요청으로 실시되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대통령 부부는 선거와 공천에 어디까지 개입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사적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대한 신뢰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국책사업과 사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참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산단의 지정이 이렇게 사적 개입으로 연결된다면 누가 이 국책사업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2차 종합특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답을 내려야 합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해 주십시오.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들, 범죄 혐의 사건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국가시설입니다. 대통령 경호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시설입니다. 그 이전과 공사, 국가의 안보와 연결된 사안입니다. 보안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계약 절차가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불법 개입의 정황이 있다, 특정 업체가 들어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가 들어갔다, 또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음에도, 인테리어업체에 불과함에도 건설 전반을 총괄했다,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사 기한을 문제삼아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중심에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있습니다. 21그램의 대표는 김건희와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부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첫 전시회 인테리어 등에 참여를 했고요. 21그램 설립 이후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인테리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그리고 시공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단순한 친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계약, 우리 국가안보와 특히나 직결된 대통령집무실과 관저의 이전,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국가 계약 수주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 특수 관계였을까요? 누가 밝힐 수 있습니까? 특검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하는 이 특검법안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의 증축과 구조 보강,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의혹이 있는 것은 선정 과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말 21그램을 시공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뒤인 5월 12일 견적서가 제출됐습니다. 5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절차는 그보다 열흘 뒤인 5월 25일에야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미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까지 시작된 뒤에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가 게시됐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입찰은 경쟁을 통한 공정한 업체 선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업체에 형식을 갖춰 주기 위한 요식 행위였다, 형식 행위였다. 이것 당연한 의혹 아닐까요? 당연한 의심 아닐까요?

입찰 공고가 오전 10시 12분에 게시되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1시에 개찰과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국가 계약의 절차에 공정성이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자격과 기술로 국가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업체가 선정돼야 됩니다. 가격과 안정성, 자격과 기술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누구와 친분이 있었는지,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국가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특검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업체가 정식 계약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이후에 입찰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공사의 외형을 갖추는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입찰이라고 한다면 국가 계약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공사 수행 과정에도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21그램이 계약한 하도급 업체 18곳 가운데 15곳이 관련 허가를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준공검사를 생략하고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말 그대로 관저, 개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증축과 구조 보강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담당한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준공검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단순한 행정절차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관저입니다.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 시설 안전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

다.

이런 과정을 어디서 밝혀 왔습니까? 바로 특검에서 밝혀 왔습니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모아 온 수사 자료와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될 조사 과정들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수사 기한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윗선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성 조치가 아닙니다. 당연히 밝혀야 할 국가안보상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 사항입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의 의사나 지시가 전달됐는지, 공사의 범위와 비용 결정에 관여가 됐는지, 계약 전에는 왜 공사 착수가 이루어졌는지, 입찰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들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사를 해 온 특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관계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위법하게 남용한 것은 아닌지, 압도한 것은 아닌지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희림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여러 차례 후원한 업체라고 합니다. 희림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연이어 포함돼 해외 순방에도 동행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 있어 보면서 해외 순방에 동행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방과 관련된 일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밝혀져야 되겠지요. 또한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복지재단에도 약 1억 원을 출연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배우자와 오랜 후원 관계에 있던 업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를 맡았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에 정부 계약 수주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기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수사 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덮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마하라고 그 특검법안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서도 희림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사업상 접촉인지 대통령 배우자를 통한 ODA 사업 청탁이나 이런 개입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ODA 사업입니다. 특정 종교단체, 민간업체, 대통령 배우자 주변 인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닌지, 만약에 이용됐다면 이는 중대한 국정농단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 규명되어야 됩니다. 진실 밝혀져야 됩니다.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법 통과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시설 공사를 둘러싼 현대건설의 공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스크린골프장과 초소 등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비용 일부를 다른 현장의 일감으

로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제시한 스크린골프장 공사 견적은 약 3억 원이었지만 경호처와 현대건설 사이의 계약금액은 약 1000만 원이었다는 의혹 그 이유와 대가를 밝혀야 합니다. 실제 공사비와 계약금액 사이의 차액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처벌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비를 민간기업이 대신 부담했다면 단순한 계약상 편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비를 부담했는지 이후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수주 과정에서 어떠한 편의나 특혜를 기대하거나 제공받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 부부, 현대건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들은 각각 분리된 개별 계약 비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비리가 아닙니다.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형성된 사적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이어졌고 관저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건진법사, 종교단체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국책사업과 ODA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지금 상황에서 덮을 수 있습니까?

기한 연장 꼭 필요합니다. 기한 연장해서 수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기한 주셔야 합니다.

업체들의 후원과 협찬, 공사비 부담이 국가계약의 수주나 국책사업 참여의 대가였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은 권력자의 지인에게 나눠 주는 일감이 아닙니다. 공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호도 잘 지키려 하고 법규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국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국가의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그런 공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지인에게 일감을 나눠 준다? 그런 부분들은 샅샅이 밝혀져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가, 그것도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가 국가핵심시설 공사 맡아서는 안 됩니다. 민간기업이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다른 사업을 얻었다면 국가권력이 사적으로 거래된 것입니다.

제대로 진실 밝혀야 됩니다. 규명해야 합니다.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하는 이 법안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 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정치적 보복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잇따라서 수주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이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가로막는다고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 국민들의 비난, 비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께서는 여기서 수사를 멈춘다면 오히려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멈추는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당한 개입이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면 됩니다. 계약서와 심사자료, 공사비 내역과 관계자 진술 통해서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특검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과 외환 그리고 선거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는 이 고리들, 관계자들 지시사항, 불법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밝혀내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는지, 계약 전 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절차를 만들었는지, 무자격 업체 불법 시공, 무자격이면서도 불법으로 시공한 이런, 누가 묵인했는지, 대통령 배우자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특별 기한 연장 특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이념과 이권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겨둔 채 수사기록을 덮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은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무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모든 계약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법한 지시와 특혜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권력자의 사적 관계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사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이 12호에서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 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그리고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젊은 해병,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는지, 대통령실이 움직였는지, 국방부가 움직였는지,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에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 친분을 맺은 민간인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입니다.

특정 인사를 위해 단순히 선처를 청탁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제한된 기간 중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와 안전 조치의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사적으로 묻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할 것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내서 성과로 이루어 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 체포하고 구속하려 했다는 의혹, 해병대수사단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검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제외하려 했는지, 민간인 통해서 구명 청탁한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움직이면서 정당하게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기까지 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수사단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려 할 정도로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전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외압을 누가 요청했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밝혀져야 다시는 이러한 국정 농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서 김장환 목사와 윤석열로 이어지는 교계 로비의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명 로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통화와 만남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인적 관계와 전달 경로의 단서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그 부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명 로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제한된 활동기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로비의 특성, 복잡한 인적 관계를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검 수사 연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 하지만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 막혀 있다라고 진실에 다가가기에 지금 조금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명 로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밝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특검이 확인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깊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외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되지 못한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간부의 행위만 처벌하고 그 지시를 내린 최종 책임자를 밝히지 못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자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기존 특검이 수사 외압이라는 그런 진실의 문을 열었다면 구명 로비의 실체 최종 책임자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수사를 덮는 일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진실의 전모를 밝혀내야 되는 일입니다. 기존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와 최종 지시자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일에 시효를 정하듯이 종료일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해진 날짜에 맞춘 형식적인 수사 종료입니까? 아닙니다. 실체를 밝히는 일입니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고초를 겪은 박정훈 대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다 고초를 겪은 수사관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법안 빠르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수사기간 연장되어야 됩니다.

군인의 명예가 권력자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잘못된 명령에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처벌을 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게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들은 이미 모두 규명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 퍼즐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내용들, 방대한 수사자료들을 모으고 종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밝혔습니다. 선거와 공천 혐의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는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묵인하거나 지원했는지, 나아가 함께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더 충분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인식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집무실 공사와 관저 이전,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 역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천 개입 의혹 가운데 일부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지금 멈추면 덮는 것입니다. 무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그리고 특검 수사 방해한 행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은 결코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은 단순히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은 아닙니다.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범죄의 배후와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나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로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꾸고 공문 요청을 자제하라는 그런 불법 감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의혹 제기받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특히나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 보도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수사 여기서 멈춘다면 무마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 끝나지도 않은 수사,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번 특별검사 연장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병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저 이전에 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밝힐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원까지 개입한 정황, 의혹으로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더 진행될 필요성 충분합니다. 이번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번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를 무마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국회에서 특검 통과로 수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고 특검의 성과들입니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요.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었지요.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한 차례도 못 했습니다. 단 한 차례 출장조사만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들은 그때 당시 정상적인 수사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 핵심부와 깊이 연결된 사건이었기에 이러한 수사, 이런 정당하지 않은 수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통화했다는 그런 내역까지 제기됐었습니다. 특검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지휘부와 수사 대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수사 상황이 공유됐다면요.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요. 특정 처분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특검으로 밝혀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그만해야 합니까? 특검 그만해야 됩니까?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수사팀 인사를 통해서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수사 사항을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교체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어떠한 방향으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기관,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이 수사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조작되고 개입했

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방대한 수사 자료를 종합해 온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움직임 어디서 밝힐 수 있습니까?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법무부와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이 한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동원됐다면 이는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엄청나고 무서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자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부실한 수사,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검사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수사 기록을 덮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무마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결국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충분한 증거를, 마무리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덮어 버린다면, 지시자와 공모자를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50일 동안 수사를 해 왔던 부분 마무리할 시간, 이 엄청나고 거대한 양의 자료들·사건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이 거대한 사건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줄 활동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의 목적은 단순히 몇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기관의 국가 비리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중간에서 중단이 된다면, 증거가 확보되고 종합적으로 마무리할 지금 단계에서 중단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불완전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미완의 단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간 연장하고 그런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대로 수사 인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특검법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란·외환, 내란 동조, 불법 선거캠프 통한 선거운동 개입, 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임성근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한 의혹, 비화폰 이용하고 국공유 재산 유용한 부분, 공무원 직권남용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 방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그 본범의 죄 그리고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대통령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멈출 것입니까? 멈춰서는 안 되는 수사가 바로 대통령선거에 불법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정치컨설턴트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내용 밝혀져야 합니다. 관여된 부분 밝혀야 됩니다.

특정 후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시행된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됐다면 이러한 부분들 밝혀지지 않고 수사 기록 덮어야 합니까? 이 국민의 비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 경선과…… 국민의힘 경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확실히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함께 회복하는 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정 후보의 출마 지역을 변경하거나 공천 방향 조율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러한 수사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활동, 인력 그리고 특별감사를 방해하지 않는 행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밀실에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도록.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게 국책사업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수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혐의, 1심의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시하고 명령을 하달받았던 그런 내용들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밝혀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합특검팀의 수사 자료, 그리고 수사 내용들을 이어받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결백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밝혀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이 공식조직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여론조사와 공천, 국책사업이 사적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거는 아닌지 당연히 밝혀야 될 일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주고받고 이권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상식인 사회는 더 이상 믿기 힘든 사회, 신뢰가 전혀 없는 사회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 전모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기록을 덮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특검법 통과를 시켜서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거와 공천에 어디까지 개입했었는지, 그 관계가 집권 이후에 국책사업과 사적으로 이어졌는지. 그러면 국책사업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2차 종합특검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필요성,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내용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1그램 인테리어 업체, 이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와 김건희와의 사적 친분 관계 그리고 무자격이면서 종합건설 면허가 없으면서도 대통령실 관저 집무실 공사를 총괄하였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수사의 필요성은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종합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검법 수사기한 연장, 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 제대로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들보다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6·3 보궐선거에 이제야 들어온 저는, 제가 처음 하는 필리버스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법안, 수사기한 연장…… 지금까지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 유병호 전 사무총장까지 구속이 되었던 이 마당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그런 법안을 반대한다, 막는다, 이게 정치의 보복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생만 생각해서 민생을 위한 정책들 세밀하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해 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 직원들께서 정말 힘들게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맞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박덕흠 부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 그리고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법안입니다. 그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 되어 가고 있는 이 수사 과정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과 제대로 절연해 주십시오. 이번 수사 과정 제대로 이어받아서 이 특검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헌법과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 내란세력에, 아니면 윤석열 내란동조세력 관계자들의 방패막이로 남을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의 수사를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았고 이 이어받은 종합특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수사기한 연장, 활동기한 연장에 관한 특검입니다. 이미 수사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을 또 은폐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권력

기관의 모습들이, 의혹의 실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김건희 개인의 비리 의혹이 아닙니다.

핵심 인물들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없는지,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불법감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법 개입 정황 제대로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의 실체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행법만으로는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기록과 방대한 압수물을 원활하게 넘겨받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공직자가 감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방해한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등이 수사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포함시켰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리는 것, 방대한 수사기록과 압수물을 분석하게 하는 것, 관련자 조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수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정한 날짜에 맞춰서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록을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멈춰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밝혀야 될 진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보강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 이 부분에서 꼭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를 단죄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내란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모습을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출발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이 충분한 시간과 인력,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였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고요. 그리고 관저를 옛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것도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이전할 때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공사비를 어떻게 했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국민감사가 청구되었고 감사가 진행되었는데도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을 전혀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거지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비용에 관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공사업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제야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은폐했다, 이것은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면조사하려고 했는데 대면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까지 송달을 해 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병호는 이를 철회시키고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저 이전이다 보니까 모든 자료들이 대통령실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할 때 당연히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함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역이 남지 않도록 구두로 요청한 것 같은데요. 또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함에도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팀은 유병호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그리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21그램이 밝혀지고 공사업체 선정, 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밝혀졌다면 어쩌면 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들이 너무너무 커졌고 관계자들의 정도 그리고 그런 사건의 규모 너무너무 커져 왔던 것입니다.

유병호는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원담종합에 공사 참여를 요청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 총괄을 맡았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없음에도 전반을 총괄한.

그래서 원담종합건설은 바지사장처럼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건물을 짓는다 해도 불법인데 대통령 관저 증축에 대한 그 부분, 대통령실·관저 부분까지 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해야 합니까? 그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했다' 이

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건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특검팀은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감사원의 개입, 조직적인 권력형 기관의 비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 수사기록 덮으면 되는 겁니까? 수사, 조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병호 혼자 결정할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병호 혼자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고 그런 내용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특검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이제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거고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조사의 필요성 또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특검에서 유병호에 대한 구속 수사, 아마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연장 법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러한 주장,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구속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특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긴 시간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특검은 정치보복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해진 수사 대상에 걸맞게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를 통해 수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늘어났지만 주어진 시간과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내란 종식의 출발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의 밑거름입니다.

둘째, 특검의 장기화가 문제라고 하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가 진척될수록 새로운 단서가 나왔고요. 규명해야 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사를 종료하라는 것은 절반쯤 밝혀진 진실만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반쯤 밝혀진 진실이 있는데 수사기록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지고 이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수사가 긴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사할 것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 문제입니까? 계

엄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는 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독 처리 문제라고 하시는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역시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져 왔을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하게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명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께서도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협조하길 바라며 특검 연장안의 가결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진성준 전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태규)

(07시17분)

○의장대리 진성준 다음은 김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에 우리 의원들이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 위에 뭐가 있냐 하면 과자를 잔뜩 모아 놓은, 스낵을 모아 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으로 과자 종합선물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저는 그런 그림만 봐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도 저런 종합선물세트 과자 들어 있는 것 생일 때 선물 한번 받아 봤으면, 부모님 저런 것 한번 사 주셨으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저는 평생 그런 것들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의원이 되고 의회에 와서, 국회에 와서 본회의장 앞에 가니 그 선물세트가 뒤늦게 잔뜩 차려져 있더군요. 방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거기서 맛있는 과자 몇 개 먹으면서 아침 요기 삼았습니다.

그렇게 '종합'이란 말은 따뜻하고 좋은 것으로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검제도에까지 붙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 예상치 못한 것, 상상치 못한 단어들 참 잘 만들어 내십니다. 어떻게 특검까지 종합을 만들어 내십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찾겠다고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궁극에서는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는 거지요. 사람 잡는 것을 종합으로 한다, 어찌 보면 좀 섬뜩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은 굉장히 절제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증거에 한정해서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증거, 굉장히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증거, 그러한 증거들만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합이 붙으니 이 모든 절차가 트릿해집니다. 그러면서 증거 법칙도 트릿해지고 그러면서 사람 잡아가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그 제도 자체가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필리버스터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참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데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열심히 잘 응하고 또 무제한토론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는 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의 마지막 저항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아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밝혀야지요.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무리해 가다 보면 결국 그 진실의 외향을 갖춘 거짓의 산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거 법칙이 무너지고 적법절차가 무너지는 그러한 형사사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형사사법 속에서 진실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거짓의 집합체, 거짓의 모음인 경우들이 우리 인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얘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산군, 단종이지요. 단종이 유배되고 암자에, 처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장면 중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강 건너 단종 거처를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소리…… 울부짖지요.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그리 생각을 할 겁니다. 단종에게 죄가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단종의 죄가 뭘까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서 저렇게 유배되고 저렇게 고통받고 결국에는 죽어 가겠구나 그리 생각할 겁니다.

단종의 유배뿐만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역사책 옛날에 공부할 때 항상 배우던 것 있습니다. 무오·갑자·기묘·을사, 사화입니다. 한 번씩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수십 명의 관료들이 죽어 나가지요. 그 집안은 몰락하지요. 그때마다 아마 그들은 정의를 외치고 법을 외쳤을 겁니다, 집권한 자들은요. 그런데 후대의 역사들은 그 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거짓의 산인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정치만 있었으니까요.

사화를 두고 법을 논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정치만 있었고 정치에서 밀린 자들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종합특검을 얘기하는데 이 특검을 두고 국민 일반이 저게 법치를 세우는 거구나,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구나, 적법절차가 지켜졌구나, 증거 법칙을 엄격히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있으시겠습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쟤들이 정권을 이뤘구나, 그래서 정권이 저렇게 피의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 대는구나. 국민들이 그것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십니다. 누가 봐도 그 정도는 읽습니다. 굳이 성인이 된 어른 유권자만을 국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한 중·고등학생도 조금 시사에 관심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 알면 그 정도 판단은 합니다. 여기에 대고 진실을 얘기한다고요? 아마 개중에는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옛날에도 사화가 벌어지면 척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항구히 공고화하는 방법만 고민하고 다시는 상대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짓밟는 방법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법치를 표명하고 적법절차를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현재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특검은 그들의 그러한 권력욕을 채우고 상대를 척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 볼까 고민도 한번 해 봤습니다. 12·3 사화라고 해 볼까? 아니면 올해가 병오년이니까 병오 사화라고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종합특검 사화? 딱히 좋은 명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고민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화의 목적은 분명 복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공고화에 있습니다.

이런 사화가요 그리 멀리 조선시대의 역사책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사화를 적폐청산 사화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좀 익숙하시지요? 지금은 내란 사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뭐 얘기만 나오면 내란, 내란 이럽니다. 아주 그냥 내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귀에 피가 날 정도입니다. 그것 대한민국 국민들 다 본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내용을? 아주 세뇌를 시키려고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적폐청산 사화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그리 멀지 않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저는 사법부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사로 있었습니다. 시골 판사였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없는. 평생을 법정에 서서 그냥 법정 안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재판을 주재하는 그 즐거움 하나가 제게서는 큰 사명감이라도 이룬 듯한 그러한 뿌듯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 잘나지 못한 사람이 판사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평생 시골에서 판사하는 걸로 내 인생을 종지부 지어도 하나 아쉬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판할 때도 누구보다 많이 사건 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건 하나하나 기록 살펴 가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어찌보면 재판과 관련해서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 '오타쿠' 이런 표현 있지요? 약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닌가, 그냥 세상 만사 잊고 오로지 재판이나 하면서 내 일신의 평온을 즐기는 그런 사람 아닐까 그리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그 적폐청산 사화에 끼어들었는지, 휘몰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끝까지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합디다, 사법부에서. 판사가 영장도 없이 다른 판사 컴퓨터를 보겠다는 겁니다. 영장주의는 현대 사법에서의, 근대 사법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판사라는 사람이 영장도 없이 동료 컴퓨터를 마음대로 보겠다. 안 보니 '그 판사 수사해라. 탄핵해라' 어째 판사들이 이 지경에까지 됐나.

그리고 법원 안에서 무리를 만듭디다. 자신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법원 안의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있더니 그게 이런저런 비판으로 없어지니까 그다음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걸 만듭디다. 그러더니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당시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디다. 정치를 하는 거지요, 판사들이. 세상 관심 없던 저도 그 지경은 못 보고 넘기겠습디다.

그래서 제가 외쳤지요. 그런데 제 외침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큰 힘은 그대로 가더군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들은 법원 안의 모든 요직들을 차지합디다. 그러면서 그나마 잘

나간다는 똑똑하다는 우수한 중견 법관들, 엘리트 법관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다 청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 사법부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정치했냐고요? 정치를 막자고 하려니 저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디다. 많이 개탄들 하십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판사들이 왜 정치를 하냐, 판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사법이 정치화됐으니 그렇게 됐지요, 적폐청산 하겠다고. 사법부 안에 깊숙이 주삿바늘 넣어서 정치를 주입을 했지요. 그러니 사법부 전체가 정치로 벌겋게 물이 들었지요. 그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적폐청산 사화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적폐청산 사화의 아쉬운 대목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방송은, 전파는 국민의 전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가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노조가 전파를 관리합니다. 방송을 노조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요 방송통신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노영방송, 노영방송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가서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인사권이라는 것은 누가 가집니까? 원래 기관장이 가지는 겁니다. 사장이 가지는 거지요. 아니면 경영 주체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송은 딱 보니까요 다른 분야는 사장이 가지는데 유독 보도 분야는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관여가 꼭 필요하도록 다 바꿔 놨습니다.

왜 보도 부분만 그래야 되지요? 왜 거기는 노조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 노조가 오로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 개선만을 위한 노조입니까? 아니지요. 철저하게 정치화된 노조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정치로 오염된 노조들이 방송 보도 분야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사화가 벌어졌을 때 좌파 진영에서 만들고 들어간 것들이 뭡니까? 진미위, 진실과 미래를 위한 위원회니, 과거청산 위원회니, 적폐청산 위원회니, 이게 방송국뿐만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요. 그람시의 진지전,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진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적폐청산 사화가 벌어지고 나라가 혼돈 속으로 그리고 국가시스템이 망가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리저리 알다 보니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진지전,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종합특검 역시도 이러한 일환의 하나입니다. 결국 정치적 숙청을 위한 특검입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실소를 보입니다. 법원이 그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웃지요. 그 법원이 그렇게 오염된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니까요. 그 오염된 법원이 한 판결, 그게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법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법의 실체가 뭔지를 고민해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체 안 듣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치화된 판사들이 한 그 판결에 빗대어서 정당성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지요. 이게 일상화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법원의 판결만 그러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

이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한 처분들을 보면 기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내란 내란 내란 내란……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멜로디로? 헌법재판소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러합니다.

예를 좀 들어 드릴까요? 재판에서 초시계 두고 재판하는 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분명히 명백하게 리서치는 안 해 봤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재판을 초시계를 두고 한다라는 것은 그 유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함할 노릇입니다. 초시계는요 국회 상임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하는 장소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장소니까 때로는 그것은 그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시계를 두면요 진실 발견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초시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증인을 불러서 당신에게 1시간의 시간을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질문에 잘 답변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1시간의 끝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회피하면서 시간 끌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증거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데리고 재판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판사가요 단독 재판장으로 판사, 그러니까 배석판사 기간을 끝내고 재판장이 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재판 진행하는 겁니다. 재판 진행하는 거라서 어찌 재판 진행해야 될지는 재판 몇 번만 해 보면 아, 이리 하는 거구나 다 압니다. 순서도 다 알고, 대충 서로 법정 안에서 소란스러워질 때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도 알고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헌법재판관쯤 되면 이미 판사 경력이 20년 이상씩 다 넘은 사람이니까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순간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장대행이라는 사람이 재판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그것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재판 진행은 생물입니다. 언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지, 그 답변에 대해서 증인이 어떤 식의 소란을 피울지 또 상대가 어떤 증인을 갑자기 신청할지 모든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거기 상황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재판 절차를, 재판 진행을 회의를 통해서 한답니다. 물론 중요하면 뒤에 가서 잠시 회의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전에 각본 짜 놓고, 시나리오 짜 놓고 하는 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짠다는 것 자체가 재판은 이미 형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시계를 두고 시나리오 써 가면서 무슨 영화 제작하듯이 해서 한 재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달 걸렸습니까? 채 몇 달 만에 끝장을 냈습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데 690일쯤 될 겁니다, 아마 특검이. 그런데도 아직 진실을 발견을 못 했네요. 그때는 그냥 무능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6개월이 안 돼서도 몰아낼 수 있고 시나리오 써 가면서, 영화 각본 쓰듯이 써 가면서 초시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몰아내면 되고 이 사건들은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꼭 특검이 하고 특검도 690일—720일 되

나요, 그러면?—을 들여서 해야 된답니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요 독일의 탄핵제도를 빌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87년도에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포커스가 있었으니까.

독일의 대통령은요 직선이 아닙니다. 독일의 대통령은 연방의원, 주의원들이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그 의원들이 간선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챈슬러(Chancellor), 수상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국회의원들 전부 찬성표 모으면 사표 빼면 1400만 표 좀 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16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독일의 제도로, 독일의 어릿한 제도로, 그 탄핵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면 헌법의 연원, 헌법제도의 비교법적 파악, 고찰 이런 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제대로 고찰도 안 하고 그냥 제도 있으니 어쨌거나 이 대통령 싫으니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한 탄핵입니다.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모래 위에 쌓은 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특검 하고 또 특검 하고. 아니, 질리지도 않으십니까? 내란 특검, 내란 특검, 라임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철저한 수사해야 된다고요? 저도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런데요 철저한 수사와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꼭 특검이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엉성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엉성한 사법시스템 망가뜨린 게 누구입니까? 보완수사권조차도 필요 없다 하면서 국가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법시스템은 못 믿겠다, 그러니 나는 꼭 특검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싫으시지요? 검찰 싫어서 검찰 없앴지 않습니까. 공소청 만드셨지 않습니까. 공소청도 썩 안 내키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소청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철저한 수사 못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검찰청 없애시고요 공소청도 하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드십시오.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다 특별검찰청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검찰청이 앞으로 수사와 기소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꼭 부탁드리니 그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 다 좋아하실 겁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채 상병 중요하고 윤석열·김건희 특검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 그래서 우리 특검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 다루듯이 내 사건도 다루어지니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모든 것, 검찰청도 없애시고 공소청도 없애시고 특별검찰청을 꼭 만들

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 무제한토론 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과 특검보 숫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파견검사가 안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부족해서 사람도 130에서 150으로 더 불러와야 되겠고, 검사가 안 오니까,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또 한번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안 올 만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가 바보겠습니까? 자기도 법 공부했는데, 수사하면 어찌 될지 뻔히 아는데. 결과를 못 내놓으면 수사 제대로 안 했다고 괴롭힐 거고 제대로 해 놓으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뒤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뒤틀어 놓으면……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갑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정권 바뀌면 이 특검이 누구 감옥 보내고 누구 감옥 보내듯이 나를 감옥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것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애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지나면, 세월 지나면 내가 섶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안 오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제가 메모가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요. '천천히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날치기했습니까? 헌법재판소 날치기는 괜찮고 특검은 자근자근……

내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그랬지요? 물론 헌법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그랬지요. 대상이 바뀌고 진영이 바뀌니까 태도, 말 다 바뀝니다. 이번에 해군 장병 1명이 바다에서 순직했습니다. 그 해병이 순직할 때 대통령이 뭐 했는지 분초 단위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진실이 중요하고 그때는 그렇게 촘촘하게 다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왜 이번에는 그냥 뭉개도 되는 걸로 됐습니까?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균형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끝까지 밝혀서 진실을 찾아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면 그러면 지금 선거법 특검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것부터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실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악착같이 찾아내야지요. 국민의 참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말씀은 안 하십니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하시면서 보완수사권은 또 없애도 된답니다.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철저히 하려면 검사한테도 수사권 주면 되지요. 오히려 특검을 하지 마시고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원복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검사들에게 수사권 100%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수사 철저히 될 겁니다. 왜 특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100% 원복을 시켜 놓으면, 검사들은 상설조직입니다. 항상 할 겁니다. 특검은 민주당에서 인정하시듯이 임시적이고 잠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시적으로 특정 사건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려면 검찰에 수사권 100% 돌려 드리십시오.

애초에 검사제도라는 건 왕의 대관제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왕이 의회와 싸우고 많은 영주들과 법적 분쟁이 생기니 나를 보호해 줄 법률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관을 뒀습니다. 그게 왕의 대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대혁명을 거치고 시민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었습니다. 왕에서 시민으로 주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와 싸우고 경찰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려다 보니까 시민의 대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검사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종전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받들어서 검찰을 수사의 주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보조역이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권한을,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찰의 권한은 싹 다 뺏어 버리려고 하고 있지요. 그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려고 하고 있지요. 철저한 수사를 하셔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경찰들이 완전한 수사권을 가졌으니, 이미 가진 수사권 뺏기는 어려우니 그것은 그대로 둔다고 칩시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 책임을 묻는 수사, 모든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수사를 하시려 그러면 검찰에게 수사권 100%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검찰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수사기관이고 누구고 간에 모든 국가기관이 자기 잘하는 것 그것부터 챙기게 돼 있습니다. 경제사범·특수범죄 이런 것들, 검찰은 거기에 매진할 겁니다. 검찰이 쫓아다니면서 도둑 잡겠습니까? 강도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자기 잘하는 것 합니다. 경찰도 자기 잘하는 것 합니다. 경찰이 충분히 강력범죄 잘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시민의 안전 잘 지키고 있는데 굳이 시간 들고 큰 성과도 안 나고 하는 특수범죄·경제사범들 잡고 앉아 있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놔두고, 서로 자신의 잘하는 것들을 최고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수사 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놔두고 왜 유독 특검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 하고 검찰청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합니까.

제가 과문해서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은 없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요. 그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믿는 극성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른 겁니다, 복수심이. 그래서 그 검찰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바로잡힌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지지를 받아야지만 정치적 계산이 맞는 민주당원, 그 열성 지지층만을 고려한 검찰청 없애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 놓으니 뭐가 잘 안 되지요. 공소취소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내란 세력들도 다 궤멸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니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특검밖에 없어요. 오로지 적극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그들 기분만 맞추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지지층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권 잡고 뭘 합니까, 마지막에는? 범죄가 확인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알파요 오메가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 이게 이 정권의 진리이자 과제이자 목표, 이념 아닙니까. 국시 아닙니까.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하네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검찰청이 잘 돌아간다면서요. 특검도 그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만 열심히 하셨으면 수사 벌써 끝났겠지요. 증인들 불러 가지고 딱 초시계 놔두고…… 수사 과정이니까 참고인들이지요. 참고인들 불러서 초시계 놔두고 30분씩, 한 시간씩…… 좋습니다, 한 두세 시간씩 쓰십시오. 두세 시간씩 참고인 조사하고 그렇게 다 돌려보내고 했으면 그 수사가 690일이나 갔겠습니까? 30일이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소는 기소 특검 만들어서 따로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도대체 논리가 맞아야지, 이치가 맞아야지 제가 납득을 하지요. 저는 대단한 걸 원치 않습니다. 논리 법칙이 맞고 수미상관 하고 그리만 되면 그 어떤 결과라도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방식, 저기는 저 방식으로 가니 제가 수긍을 못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장악이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요? 정권이 원하는 대로 민정실에서 이래저래 지침 내려가면 안 따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라 할 것 같은데요. 따라 하기 전에, 민정실에서 내려가기 전에 미리 움직일지도 모르지요.

검찰 무력화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검찰청은 더 이상 위협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에? 그리고 오히려 그 검찰은 지금은 저희들, 우파 진영을 더 탄압하고 있는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력화됐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위협입니다.

법원의 무기력화, 앞서 법원은 이미 정치화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아가서 법원의 팔까지 꺾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을 국회 상임위까지 불러 가지고 온갖 면박을 주고 대법원에 법사위원장이 찾아가서 활보를 하고 그 앞에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은, 사법행정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안내원 노릇 하면서 그렇게 사법부가 유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나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재판부의 판사가 누구를 만났네, 어디 갔네,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하면서 얼마나 겁박을 했습니까? 그만큼 압박을 가하고 법원의 팔을 꺾어 놨으면 그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판사들이 이 정권에 맞게 판결 딱딱 해 주고, 그나마 정치화 안 된 판사들이 나서면 그 판사들은 팔을 꺾어 놨는데 그 법원이 이 정권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위협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 의회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석이 어디쯤에서 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2가 여권입니다. 그리고 법률도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든지 만들어 내고요 원구성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쉬우십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경찰 가져, 검찰 가져, 법원 가져, 의회 가져,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특검까지 하시겠다. 와, 탄성밖에 안 나오지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거 비판하려고 드니 입틀막법까지 만듭니다. 입틀막법까지 만들어요. 입틀막법 얘기 나오니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선친이 경주분이십니다. 제가 울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성향, 우리 선친의 정치적 성향은 대충 우파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때는 독재 시절이고 권위주의 시절이라서 대통령 욕만 하면 감옥에 잡혀 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요 동네 어른들 만나면 술 한잔 하시면서 매일 욕하는 게 박정희 욕이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네 어른들 같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욕을 해도 또 필요하면 가서 찍어 주고.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 인상이 하도 강하게 박혀서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대통령 욕을 할까.

요즘 길을 가다가요 대통령 욕 잘못하면 멱살 드잡이당하고요, 유튜브에서 대통령 욕 잘못하면 그 플랫폼은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얼마를 더 가져가시렵니까?

내란, 내란, 특검, 내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의원님께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희들이 계엄한 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또 많은 분들이 사과도 하셨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분들 사과하셨으면 민주당도 사과 한번 하십시오. 계엄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불쑥 아,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계엄 할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계엄입니까? 그 원인은, 계엄 유발자는 누굽니까?

탄핵이 30회 정도 있으면요 그건 정부 불신임입니다. 사실상의 정부 불신임입니다. 우리 헌법에 정부 불신임권 없습니다, 국회에. 그리고요 예산을 특활비고 뭐고 다 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릴까요?

당시 저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여러분, 제 부속실 운영비가 0원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부속실에서 먹을 물을 옆의 운지과 가서 얻어서 먹었습니다, 운영지원과 가서. 그러면서 국회에 와 가지고, 제가 현안질의나 이렇게 있어서 국회에 오면요 국회의원들 물 마시는 거 그것 보고 있으면 '이야, 우리한테는 부속실 운영비 0원 만들더니 자기들은 저렇게 물도 마음대로 마시네' 이랬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던 민주당입니다, 그랬던 민주당. 그런데 불쑥 한 것 같습니까?

자, 내란당, 내란당 그러는데 내란 유발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성하면요, 우리가 사과하면 민주당도 사과하고 그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야지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게. 균형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는요 그게 헌법 파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헌법 파괴 아닙니까?

정부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는 편법으로 정부를 불신임했습니다. 그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특검이라는 칼을 가지고 전 정부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특검을 정치적으로 그만 좀 쓰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마는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소수당, 야당, 힘없는 당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울 때 그때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이제 종합특검으로 숙청하는 데 쓰고 또 이 특검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어 버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기에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합니다. 공소 취소 특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앞서 제가 보완수사권 말씀드렸지요. 보완수사권도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기다. 공소 취소 특검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기인 건 누구든지 다 아시지요. 개헌을 왜 하자고 하지요? 심지어 개헌을 어디까지 갖다 붙이냐 하면 참정권 문제, 참정권 파괴와 관련해서, 훼손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사실은 제일 먼저 얘기돼야 될 거는 오히려 잘못 운영한 선관위에 대한 겁니다. 거기야말로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 데입니다. 그 특검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들 신뢰를 다 잃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개헌을 해야 된답니다.

개헌 안 해도, 선관위 구조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 구조 개혁하는 데 개헌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개헌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 얘기해 왔던 원포인트 개헌 그것 좋은 빌미거리 하나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불행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기회로 만들어 내는 기발한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셨다,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호남 반도체도 사실은 다 알지요, 왜 호남 반도체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추진됐는지. 다 결국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기. 그리고 이번 종합특검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로마가 정벌 전쟁에 나가서 적의 왕이나 족장을 잡으면 끌고 오지요, 묶어서. 마차 뒤에 묶어서 끌고 오면 그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답니다. 반드시 죽는다. 언젠간 죽는다. 지금은 이렇게 영화를 누리지만 너 역시, 그 개선장군 역시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리 얘기하지요, 화무십일홍이라고. 권불십년이라고 좀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정권을 가졌을 때 그때 기준만으로 법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정권 교체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잘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결국 나중에 본인들에게 칼로 돌아옵니다. 그 칼끝이 여러분들을 겨눌 겁니다. 제발 지금 정권 가졌을 때 지금의 목적만 생각하시고 그리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정권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러한 것이라서 '우리는 안 뺏길 거

야, 너네들처럼’ 이리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 역사의 경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의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의를 살리고 싶으시면 특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제도 잘 활용하시고요. 또 다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으시면 국수본이나 많은 권력기관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정의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이미 유죄로 판결 난 이재명 재판 진행 그것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유죄가 나와 있는데 형량만 안 정했을 뿐인데 그 재판 왜 멈춥니까? 멈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판하시면 됩니다. 재판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또 한 분이,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태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책임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판결이 힘을 가지려면 정치적 진공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적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정치에 너무 과도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정치적 진공상태가 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결론이 난다면 그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백번 지지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거 여론 조작을 얘기하시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하시는데 저 역시도 선거의 공정성은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원하겠습니까? 당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선거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계산이 언뜻 안 되는데 한 40여 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5일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내 참정권 살려 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목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지금 그분들 얘기를 들으시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시려면요 선관위 특검부터 하시면 됩니다, 선관위 특검부터요.

(「그거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요, 같이 하게」 하는 의원 있음)

선관위 특검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하시면 된다고요, 들어오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발언시간 지켜 주시고요.

선관위 특검을 해서 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선관위 이번 처음 아닙니다. 제가 불쑥 이번에 처음 선관위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꼭 특검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선관위 ‘소쿠리 투표’ 하나의 단어로 굳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 단어를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취업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곳에서 터진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터졌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게 과실일까, 인식 있는 과실 내지는 미필적고의 수준까지 가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특검을 해도 여기에 해야지요. 여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특검이 필요한 부분에서 특검을 하시는 그리고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

는 특검은 자제하시는 그런 균형감을 가져 주십시오. 그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이 기해지는 방식입니다.

이상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해 온 원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90일, 이 정권이 특검을 가동해 온 날의 합산입니다. 220억 원,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은 국민 세금입니다. 98억 원, 그 가운데 오늘 연장하려는 2차 종합특검 한 곳에 편성된 국민 세금입니다.

그 돈과 그 시간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이 8명입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어서 8명입니다. 그 8명도 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앞서 말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가 겨우 내 준 게 8명입니다. 좀 더 청정한 법원이었으면 이 8명도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18분의 6,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명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6명, 발부율로 33%입니다. 열한 번 기각당했고 마지막 1건은 바로 오늘 법원 심판대에 올랐는데 편향적인 법관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법부에서조차, 참 그 결과가 초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본회의를 붙들고 통과시키려는 법이 뭡니까? 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든 특검에게 한 달 더 생명 연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무려 150명까지 붙여 주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서 150명을 차출해서 법원의 열한 번째, 법원이 열한 번 퇴짜를 놓은 수사기관에게 밀어 넣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더 답답함을 느끼는 건데요. 저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실제 법률 현장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찰들, 수사 경찰관들, 익숙치도 않은 젊은 친구들한테 수사 맡겨 놓으니 수사할 여력은 잘 안 되고 능력은 잘 안 되는데 열심히는 또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지요. 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고소를 해 놨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이의를 해 놨는데도 함흥차사입니다. 한 명의 수사관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 민생 현장에 투입돼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경찰관, 검찰 수사관들을 이 정치적 사건에다 끌어들여 가지고 인력 낭비를 하면서까지 상대를 무력화시켜 놓겠다, 괴멸시키겠다. 참 과하다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회사가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온 직원에게 '야, 너 수고했다. 기간을 연장해 주마. 부하 직원 150명 더 주마. 권한도 더 주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술하다가 실패한 의사에게 수술실을 더 내 주는 병원이 있습니까? 골을 먹기만 하는 골키퍼에게 연봉 올려 주는 구단이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단은 강등을 당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경영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이름부터 좀 바꾸자.

잠깐만요.

민주당은 이 법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내란·외환 특검법, 특검 연장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더 길지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서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목에다가 아예 유죄 판결문을 써 놓았습니다. 판결문 주문입니다, 이거. 판결문 주문 던지면서 특검보고 여기에 맞추라는 거지요, 이유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읽힙니다.

저는 이 법을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이 법의 진짜 이름은 실패한 특검 연명치료법입니다. 회생 가망 없는 수사에 국민 세금으로 산소호흡기 달아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연명치료의 목적이 환자를 살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 이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이 특검은 이미 수사 실패를 증명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수사해서는 안 되는 예외적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예외는 짧아야 합니다. 예외가 길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그리 미덥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란하게 출범한 특검이 초라하게 끝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도 특검이 명분을 가질 경우는 딱 하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쪽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권력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힘없는 야당이 당신들이 쥔 검찰로는 당신들을 수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할 때 오직 그때만 특검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특검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는 자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을 쥐고 있고 그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폭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 휘두르다가 칼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싶으니 이제는 그 칼을 통째로 다 내버리고 더 고분고분할 것 같은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권을 떼어 가라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보완수사권까지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법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아닙니다. 판단은 점점 정치의 언어를 담아 갑니다. 국회,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법안처럼 발의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단 며칠이면 끝나는 다수 의석의 표결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칼을 마음대로 골라 쥐는 권력이 특검이라는 칼을 하나 더 차고서도 모자라다면서 칼날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 없는 쪽의 마지막 무기를 힘 있는 쪽이 독점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입니다.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고 정권의 친위 수사대입니다. 우리 헌정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대한민국의 특검들은 이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짧게 굵게 대상을 특정하고 기한 내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끝을 낸다, 이게 그동안에 특검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 안에서도 결론은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입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 수를 기계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수천만 회에 이르는 공감 클릭이 조작됐습니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여론 그 자체를 조작한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급소를 찌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 공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집권 민주당의 핵심 실세, 전직 경남도지사였습니다.

특검은 60일의 수사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으로 도지사 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특검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60일을 쓰고 정권 실세의 대법원 유죄 확정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2배 반인 150일을 쓰고 기소 8명에 영장 열한 번 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고쳐서 시간을 더 받아 내겠다고 합니다. 역대 특검들은 짧게는 한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사는 석 달이면 충분했고 석 달로 안 되는 수사는 690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특검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권 특검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1차 3대 특검 합산 510일, 2차 특검이 150일, 여기에 오늘 30일을 또 얹겠다고 합니다. 도합 690일, 690일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역대 특검들이 길어야 석 달이면 끝내던 일을 이 정권은 69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특별검사라는 예외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시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도, 공소청 만드시겠다면 굳이 공소청으로 불편을 겪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상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은 저 혼자만의 지적은 아닙니다. 조은석 특검이 종료된 후에 우리 당에서 미디어대변인 윤용근, 우리 윤용근 의원님이 당시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에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실감이 되실 겁니다.

180일간의 폭검으로 끝난 조은석 특검, 결국 정치적 도구의 역할만 충실했다. 조은석 특별감사팀이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 우려했던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돼 야당을 상대로 무도한 폭정의 칼을 휘두른 폭검에 불과했다. 그 결과 떠들썩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여론몰이 압수수색은 지켜보는 국민에게 상처만 남긴 채 입건조차 하지 못하는 무리한 수사로 끝났다. 특검의 본질은 오간 데 없고 야당 탄압의 앞잡이 역할에만 충실했던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특검을 앞세워 정기국회 기간 중 야당 원내 전략 공간인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해 정보를 빼 가려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출범부터 오직 내란 프레임 하나로 버텨왔고 그 길을 조은석 특검이 칼춤을 추며 열어 왔지만 이제 폭검은 끝났다. 특검이 기간 종료로 막을 내렸던 대통령 권력도 유한하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중지시켰고 추가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70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인 검찰청을 폐지하였으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범죄자들과 천화동인 1호 실질 소유주 그분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강요하는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지만 물이 넘치면 댐이 무너지듯 폭정이 쌓여 임계치를 넘어가면 국민들이 배를 뒤집는다는 역사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가설을 엮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자리에서 혐의 소명이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법원은 내란몰이식 프레임 수사에 제동을 명확히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운운하며 특검 정국을 이어 가려는 몰염치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리자 더욱 조급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폭압정치를 이어 가고 있다. 선출된 대통령은 언제든 재판이 재개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그러다 권력을 놓칠까 전전긍긍하며 더 거친 폭력적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는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입법 폭력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내란몰이식으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시스템을 파괴한다면, 정당의 자유를 옭아매고 국민에 대한 입틀막 입법을 강요한다면 더는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사법정의 파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은석 특검 하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1차 3대 특검 전체를 놓고 저희 당이 지난해 12월 9일 낸 성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또다시 정략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쏟아 내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무한 특검 정치쇼와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민중기 특검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3개의 특검이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이자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3개 특검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특검의 재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개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개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백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편파수사 정치특검임을 입증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세력의 사설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음에도 특검은 이를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작동한 명백한 편파수사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고 그중 한 명에게 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시설까지 찾아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장관급 인사 4명과 민주당 의원 명단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민주당 관련 진술을 공식 조서가 아닌 비공식 수사보고 형태로만 남겼습니다.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 커넥션 부분을 수사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기록을 숨긴 행위는 특검이 중립성을 상실했음을 보여 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반면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사소한 진술 하나에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으며 사법부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백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도구에 불과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의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이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상 민중기는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통일교 커넥션과 편파 수사, 직무유기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책임자 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몰이 허울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라는 허상에 기댄 지 벌써 1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밝혀진 진실 하나 없고 국민의 세금과 사법시스템만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2차 특검이니 내란 청산 대행진이니 하며 선거 때까지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는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정청래 대표의 사법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체계를 농단한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성명서를 계속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도 그렇듯이 그중에도 민중기 특검의 문제는 유독 심각합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성명서도 있지만 따로 읽지 않고 앞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글들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이 정권의 특검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이고 편파적이고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법은 바로 그런 특검에게 시간을 더 주자는 법입니다. 690일 동안 수사해서 안 나온 것이 720일이 되면 나옵니까?

저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30일이면 되는 겁니까? 30일 뒤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연장하실 겁니까? 또 그다음에는요? 도대체 며칠이면 끝난다고 하고…… 국민 앞에 기한을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특검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특검 스스로 지난주에 보여 주었습니다.

특검은 지난 15일, 그러니까 이 연장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바로 그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오는 23일 원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23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이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7월 24일 바로 그 전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부터 세상에 다 알려져 있던 사안입니다. 앞선 특검이 실무자를 기소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수사 개시 후 140일 동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장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종료 하루 전날에 첫 소환 일정을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수사를 왜 하필이면 지금 합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장의 명분이 필요해서입니다. 끝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끝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급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입니까? 아니면 시간 연장을 위한 알리바이 제작입니까?

약속하실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애초 약속할 생각조차 없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논리는 영원히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보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한 약속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정직하게 조문을 고치시라고 저는 조언드립니다. '수사기간을 대통령 퇴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쓰십시오. 저는 그 법에도 반대는 여전히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법은 정직한 법은 될 겁니다. 30일짜리 가면을 쓰고 무기한을 숨겨 놓은 이 법보다는 차라리 그게 국민을 덜 속이는 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끝나지 않는 진실규명, 사실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유구한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번 보실까요?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로도 끝나지 않으니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를 낳으면서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태원 참사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고 국회가 국정조사했고 그러고도 다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은 어떻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해병 특검으로, 그 특검이 오늘 끝나자 오늘의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사건의 수사 주체가 다섯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나 사고에는 희생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 저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법정의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아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아픔을 조사기구의 무한 증식으로 소비해 온 정치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정치를.

대법원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최종심까지 마친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차, 4차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납니다.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사법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 위에 또 조사를 또 그 위에 또 조사를 얹습니다. 몇 번을 다시 들여다봐야지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진상규명이 목적이면 결론에서 끝이 납니다. 정치가 목적이면 결론이 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특검 연장은 그 전통의 최신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30일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저는 이미 나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다음 특검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러한 특검이, 선관위 특검이 걱정이 되면 빨리 여기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와서 선관위 특검은 안 하시고 조작기소 특검만 해 버리면 어떡하지요? 저는 문득 그 걱정부터 드네요.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글들을 하면서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처가 이 특검 하나에 들어갈 비용을 추계했더니 2년간 380억이 나왔답니다. 지난해 3대 특검 예산을 전부 합친 것과 맞먹는 돈입니다. 3대 특검에 274억, 2차 특검에 150을 쓰고도 이제 380억짜리 특검이 대기 중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쓰는 국민 세금은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이 넘는 돈을 쓰시면서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 할 때 제 부속실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를 어떻게 저는 납득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드는 정부부처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면서 이 되돌이표 특검에는 800억 이상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십니다.

800억 원…… 국민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것 수사 아니고 산업입니다, 산업. 특검이 특검을 낳고 또 그 특검이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들자고요. 오늘 이 30일 연장은 그 영구기관에 기름을 한 번 더 붓는 일입니다. 오늘 막지 않으면 다음에는 380억짜리가 옵니다.

둘째, 이 정권의 특검들은 돈 쓰는 방식으로도 자신들의 정체를 증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언론의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 당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가동된 특검 4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따위로 부릅니다만 저는 그 이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결론을 박아 주문을 넣어 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검사의 이름으로 특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이명현 특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쿠팡 퇴직금 등 이 네 특검이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쓴 돈이 22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이른바 방값으로 64억 6100만 원을 썼습니다. 집행액의 29.3%, 국민께서 수사하라고 주신 돈의 3할이 수사가 아니고 방값,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광화문 사무실에 달린…… 민중기 특검은 부동산 비용으로 23억

원 넘게 썼습니다. 여섯 달 동안 강남권 민간 빌딩에 들어간 이명현 특검은 임차료로만 18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걸 다달이 내는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3억이 넘는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써 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월세는 얼마입니까? 제가요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의원이 갑자기 됐는데 서울에서 월세를 구하러 다니니까 방 한 칸 원룸을 200만 원, 300만 원씩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기함을 하겠습디다. 그래서 멀리 대학가, 제가 나온 대학까지 쫓아가서 한 100만 원 돈 주고, 100만 원대, 100만 원은 아닙니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대 어렵게 단칸방 하나 구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검들의 월세를 보니 기함을 하겠는데 일견 부럽기도 하네요.

전세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 청년들이 낸 세금으로 특검은 한 달 새 3억이 넘는 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왜 강남의 노른자의 빌딩이 필요합니까? 왜 수억 원짜리 인테리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오늘 연장 대상인 2차 종합특검은 다르겠습니까? 다를 겁니다. 2차 종합특검에 편성된 예산이 약 97억 9000만 원이랍니다. 항목을 한번 볼까요? 수사활동운영비 40억 원, 인건비 28억 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12억 원.

특수활동비 뭐지요? 영수증 없는 돈 아닙니까? 영수증 없다고 지난 정부 때 전부 0원으로 만들었던 그 돈 아닙니까? 그때는 0원으로 만들어도 됐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서고 이제는 그거는 또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법에서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정이 변경이 돼야지 결과도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사정이 변경이 됐지요? 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그때는 못 줘도 지금은 줄 수 있다. 그 사정변경 하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수활동비라는 말 정말 잘 떠오르실 겁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리 얘기했습니다. '증빙 없는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예산 통째로 깎았었지요. 검찰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예산도, 감사원 예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이 일하는 데 쓰는 돈이라면서 죄다 깎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제 부분으로 강조를 할 겁니다. 저도 진짜 몸으로 겪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때 민주당에서 부속실 운영예산 0원으로 깎았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물 한 병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차도 한 잔 안 주십니까?', '우리 차 살 돈 없어요'. 내 사비로 좀 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분들이 하도 안돼 보였는지 우리 방통위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기 커피 사면서 하나 사 가지고 주면서 '드세요' 하면서 제가 동냥커피 마셨습니다. 동냥커피 마셨습니다. 우리 법치를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우리 민주당에서 예산을 깎아 주셔서 제가 동냥커피 마셨습니다.

그때 민주당 논리는 참 서릿발 같았습니다. 국민들 세금은 엄정하게 써야 된다. 좋습니다. 그 서릿발 오늘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영장 열한 번 기각당한 특검의 영수증 없는 돈 12억이 웬 말입니까? 남의 특활비는 단

두대에 세우고 내 편의 특활비는 방석을 깔아 줍니다. 이게 민주당의 예산원칙입니다.

특검께서는 영수증 잘 모아 두십시오. 잘 모아 두세요. 권창영 특검, 잘 모아 두세요. 정권은 유한하고 감사는 언젠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이 있는 돈조차 특검이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예산 집행 내용 요구를 하는데 특검의 입장은 이렇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때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 안 되면 예산 어디 썼는지를 공개 못 한답니다.

성과를 물으니까 침묵하고 영수증 요구하니 조건을 달고 돈·시간 더 달라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 달 더 연장해 주자고 하는 특검의 실체가 이러합니다.

셋째, 이 법은 이름만 연장법입니다. 한 달만 더 살겠다던 세입자의 계약서를 열어 보니 그 안에 집을 증축하겠다는 조항 그다음에 옆집까지 드나들겠다는 조항까지 다 들어 있는 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도로 접하신 것은 수사기간 30일 연장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끼워진 조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큰 것 두 개만 우선 보지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특검 파견 공무원 150명까지 늘리는 겁니다. 150명 어디서 옵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윤기를 막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고생 목숨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결혼자금 통째로 뜯긴 부모의 전세사기, 노인의 평생 저축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학교 앞까지 파고드는 마약, 서민의 급전을 옥죄는 불법 사금융,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붙어야 될 수사관들입니다. 그 인력을 빼서 법원이 열한 번 퇴짜를 놓은 수사에 돈을 밀어 넣고 인력을 밀어 넣겠다는 겁니다. 이 150명의 인력을 밀어 넣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손을 떼 내서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보이지요. 유병호 감사위원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직무 유기했다고 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것을 발부해 주는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내가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또 한마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갑자기 직권남용이 하도 많이 와서 제가…… 그게 제 기억으로 2019년쯤 될 겁니다, 아마 19년, 제가 21년도에 퇴직을 했으니까.

19년쯤에, 대한민국의 판결들은 판사가 판결을 쓰면 그 순간 전부 다 법원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3000명의 법관들이 판결문을 쓰면 다 등록이 되는데 그 판결들이 언제부터 등록이 되었느냐 하면 한 80년대 중반쯤부터 등록이 됩니다. 그 이전 것은 일부 스캔을 해 가지고 등록시켜 놓은 것도 있고 등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법을 다 찾아서 제가,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일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다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예를 다 검색해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삼 년 사이에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된 사건 수가 그 이전 수십 년간 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민주당은 뭔가 미라클(miracle) 한 것을 많이 만들어 내는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이라는, 특검에 종합이라는 단어도 만들어 내시고요. 직권남용죄를 전국

적으로 인기 있는 죄로 만들어 냈습니다. 때로는 그 실력에 제가 감탄을 합니다.

그 직권남용죄는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문제가 되어서 심각하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님이시지요. 그 분께서 대북송금 사건이 문제됐을 때 기소에 직권남용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보수적인 판사라고 이름이 높은 권성 헌법재판관님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악용될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것은 위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게 그게 직권남용죄입니다. 그게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그 직권남용죄는 굉장히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개 무죄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공소가 기소가 안 되든지. 그랬는데 이게 사법부가 바뀌더니 김명수 코트(court)가 들어서더니 그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죄명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정부부처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부하 직원에게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그 지시 강도가 세면 그 다음부터는 직권남용이라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행정부는 하이어라키(hierarchy)가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 관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에 별로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계구조에 대해서 무딘 편인데 행정부 공무원을 제가 한 3년 정도 하면서, 2년 9개월 동안 하면서 정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행정부의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부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직권남용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감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직권남용죄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을 또 받아 주는 법원입니다. 이러니 사법이, 사법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직권남용죄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요.

넷째, 이 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 법의 정체를 증명합니다.

떳떳한 법은 떳떳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이 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소위원회 단독 의결, 전체회의 단독 의결 그리고 오늘 합의 없는……

(「하고 싶으면 들어와야지」 하는 의원 있음)

반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품격을 보여 주시는 방법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 협치를 말하면서 단독처리의 길만 골라서, 협치를 말하면서 단독처리의 길만 골라서 걸어 왔습니다. 내용에 자신이 있는 법이라면 왜 토론을 피하겠습니까? 왜 야당의 질의를 피하고 왜 심사를 생략하고 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입니까? 그리고 그 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심사대 위에 올려놓고 조문 하나 하나를 따져 보는 순간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심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생략한 심사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법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기록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국회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써 놓은 영장기각 결정문이 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을 다 읽고 나면 이 법에 찬성하실 국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산 690일, 세금 220억 원, 방값으로만 64억 그리고 18분의 6, 이 숫자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법원의 심판. 영장기각 11회가 말하는 수사 부실입니다.

기록을 읽어 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영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복을 입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장기록을 앞에 두고 밤을 새운 날들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영장 앞에서 가장 신중해집니다.

사람 감옥에 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그렇게 쉽게 넣었나 본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영장기록을 앞에 두고 밤을 보낸 날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영장 앞에서 가장 신중해집니다. 수사기관이 가져온 기록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물음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나, 도망갈 우려가 있나, 재범할 우려가 있나.

이 물음에 수사기관이 답하지 못하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기각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보내 주는 하나의 메시지, 편지라고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수사는 아직 법정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더 보완해 오십시오', 수사기관에게 이보다 더 아픈 편지, 더 아픈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정확한 성적표도 없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이 편지를 지금까지 11통 받았습니다. 1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것은 6명. 11명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1명이 더 구속되면서 7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발부한 사법부조차도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진공 상태의 법원이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공식 지표에 따르면 23년 한 해 동안 우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5%, 그 앞에 해는 81%, 82%. 22년도가 81.4%, 21년은 82%입니다. 대체로 열에 여덟은 발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해 봐서 압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되면 그것 자체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해하고 울고불고해도 그래도 영장청구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영장청구가 굉장히 절제돼서 올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장 발부율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아, 영장 발부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률이 낮은 겁니다, 낮고 굉장히 영장발부를 충실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어떻습니까? 열에 셋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요. 일단 청구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들면 운 좋으면 됐고 그걸 빌미로 또 수사해 가고 범위 넓혀 가면 되니 그러니 일단 해 보고 하자는 식입니다. 그러니 이게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만 영장 청구가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기각된 그 11장의 편지 그중의 몇 통을 골라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되지 않은 열한 번째……

첫 번째 편지부터 말씀드릴까요? 가장 최근의 편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16일, 그러니까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날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 역시도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변소 취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판결문과 결정문의 언어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감정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단어만 씁니다. 그래서 이 절제된 문장을 시중의 언어로 번역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다', 판사가 쓸 수 있는 가장 정중한 거절입니다. 뜻은 간명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기록 아무것도 안 된다.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이 말은 당신이 낸 증거를 다 읽어 봤는데 읽어 봐도 안 되겠더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심우정·전무곤 두 사람과 같은 주에 청구되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그리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서 이 특검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심우정·전무곤·강호필·이시원, 특검은 단 한 주 동안 이 네 사람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왜 하필 그 주였겠습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 종료일인 7월 24일이 코앞이었기 때문입니다. 150일 동안, 수사하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신병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일주일에 몰아서 청구한 겁니다. 그물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배가 항구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물 4개를 한꺼번에 던진 격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4개 모두 빈 그물이었고 한 주에 4개 모두 연속 기각, 4전 4패였습니다. 딱 코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마지막 구속 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기간이 도과되거나 아니면 항소 기간이 도과되거나 어쨌거나 기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권리행사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법조인이라면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참으로 둔감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나 봅니다. 마지막 특검 종료되기 얼마 전에 그렇게 몰아서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기간에 둔감한…… 법조인이 기간에 둔감하면요 그건 무능한 겁니다. 어째 이런 무능한 사람들만 모아서 특검을 했습니까? 그리

고 그 무능한 사람들이 뭘 못 만들어 냈다고 또 시간 주고 또 무능한 수사를 계속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뭘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네 건은 애초에 준비된 영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에 쫓겨서 급조된 영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급조된 영장을 네 건이나 던져야 할 만큼 이 특검은 150일이 다 가도록 내세울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급함과 빈손 이 두 가지가 한 주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앞선 조은석 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 김태영 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서 공사 업체 대표입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일곱·여덟 번째 편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이 특검의 정체가 이 두 통의 편지에 가장 선명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편지들도 봉투 색깔만 다를 뿐 안에 적혀 있는 말은 같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한 통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부된 것은 어제 발부된 것까지 합쳐도 일곱 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곱 건 발부라는 그리고 열한 건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놓고 수사가 잘되고 있으니 연장하자고 말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험에 열한 과목 낙제한 학생이 여섯 과목, 일곱 과목 과락을 면했다고 성적표를 흔들며 장학금을 요구하는 격입니다.

법원이 이 기각들에서 반복해서 지목한 대목이 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부수적 요건 이전에 죄가 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지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존중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의 결론도 다 승복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법부가 전혀 공정하다고, 100% 완전히 공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전부 다를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3000명 법관 중에 저는 90% 이상은 본인의 본분에 충실하고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정치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다 오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정 학회를 만들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실체는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히 압니다. 제가 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울산 대표로 참석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다 살펴보고 기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

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진공 상태의 온전한 사법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잘못은 바로잡아질 겁니다. 그러한 사법부 그리고 그러한 사법부조차도 팔을 꺾어서 내놓은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사법부의 심판에도 특검은 열한 번씩이나 반칙을 했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이 고른 심판이 여러분의 특검에게 내린 판정입니다. 저는 그 판정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문제는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보면 이 특검이 왜 시작부터 잘못된 수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까 미뤄 뒀던 두 통의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역시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람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이 사람들을, 조은석 특검조차 무혐의를 낸 이 사람들을 다시 입건하고 다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전부 기각입니다. 앞선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사건 가운데 이 특검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 보입니다. 몇 승 몇 패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없어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 역시 당연히 민주당이 만든 특검입니다. 권창영 특검 역시 민주당이 만든 특검입니다. 그런데 한 특검이 무혐의라고 한 사람을 다른 특검은 다시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맞지요? 어느 특검이 틀렸을까요?

조은석 특검이 부실하게 한 것입니까? 저는 조은석 특검,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하셨을까요? 권창영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일까요? 민주당이 답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특검 모두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진상규명의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장담하면서 만든 기관입니다.

답은 사실 이미 법원이 내렸습니다. 재수사에서 청구한 영장 전부 기각됐다는 것은 앞선 특검의 무혐의 판단이 맞다는 거지요. 권창영 특검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한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특검씩이나 됐는데 결론 없이 빈손으로 가면은 체면이 체면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 억지춘향으로라도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기관이 한 사람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두 번이나 수사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쉽게 표적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믿기 어려우신 장면, 특검과 특검이 싸우고 있는 거지요.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을 하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조 대령을 불기소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후임 특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과 특검끼리 싸우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특검, 꼭 해야 되는 특검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조 대령이 자신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2차 특검이 ‘앞선 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자 조은석 특검팀이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정권이 만든 두 특검이 언론을 통해 서로의 수사를 부정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기관들이 진상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농 삼아 둘 다 진상을 부리고 있네요.

이 상황 심판을 누가 봤습니까? 비록 기울어졌지만 법원에서 봤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매번 앞선 특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한 명단에는 민주당 스스로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엄 국면에 관해서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진술해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이 앞다투어서 용기 있는 증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 진술을 탄핵과 특검의 근거로 삼아 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장해 주자는 특검은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읽어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각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있겠지요.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자기모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이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특검이 그 입의 주인들을 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증언할 때는 영웅이라 부르고 수사 성과가 필요해지니 영웅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인용해 온 그 증인들의 신빙성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의자의 진술이 된 그들의 말, 여러분은 계속 그걸 근거로 쓰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특검이 여러분의 증거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검의 다급함입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수사의 원을, 범위를 계속 늘려서 이제는 민주당이 제 편처럼 치켜세우던 사람들에게까지 칼 끝이 닿았습니다. 표적을 가리지 않는 칼은 수사가 아니라 난동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앞선 특검들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 사람들은 그 법정에 설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을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특검은 새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고 앞선 특검이 걸어 놓은 재판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검 활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6일 저희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가 이미 이 특검의 정치기소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성명을 냈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대리 진성준 김태규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 의원 예.

○의장대리 진성준 지금 방청석에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국민들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실 소개로 동삭동 통장협의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토론 계속하시지요.

○김태규 의원 ‘조은석 특검, 법치를 말살한 정치기소.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기소—여기도 종합세트가 나옵니다—종합세트에 불과합니다.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 시행 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청구됐다가 두 번 모두 기각됐고—이것은 당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명서 당시 시점으로 말씀드립니다—가장 최근에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까지 조은석 특검은 구속영장을 총 13건 청구해 6건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와 법리가 탄탄하다면 왜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줄줄이 막혔겠습니까? 특검의 과욕과 정치 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명분으로, 그 수사를 명분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주한미군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마찰 논란까지 자초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걸린 동맹 현안을 두고 특검이 국제적 신뢰 비용까지 치르게 만든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조은석 특검이 문을 닫으면서 법원 앞에 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서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잘못이 샅샅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적 입법을 예고하면서 법원과 판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판사들에 대한 허리를 꺾었다, 압박을 했다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실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다소 지금은 이슈에서 멀어져 있지만 역시 진행형입니다. 일부는 완성이 되었지요, 부족한 형태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힘을 빼놓을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이는 유죄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의 발로이며 이러한 위헌적 시도는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특검이 잘못한 부분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후보 인사검증을 구실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인사 라인 전체를 줄 세워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정치적 무더기 기소입니다. 내란으로 엮기 어렵자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해야겠다는 정치보복 차원입니다.

재판관 임명·지명은 도장 찍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정질서 안정과 국가 번영을 종합해 결정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의 제1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인사권자도 국회의 다수당,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 결정을 하라는 시그널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가 향후 권력자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내세우는 논리는 궁색합니다.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루 만에 하라 했다는 것과 일부 조회가 생략됐다는 정황뿐입니다. 인사검증을 빨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남용입니다. 그러한 처벌 자체가 권력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이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인사는 범죄라는 공포 정치입니다.

플리바게닝 시행 전 감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은석 특검은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상원은 법정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개정 내란특검법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되는데 그 이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법 시행 전이라면 더욱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은석 특검은 남을 수사할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기 팀의 회유·유도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명이 없지요.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언젠가 설명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감찰·수사가 즉각 착수되어야 합니다.

외환죄에서 이적죄로 선회, 무리한 내란 몰이가 스스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구어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의 원래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상식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기소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란 청산을 핑계 삼아 야당 죽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어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은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특검 놀이일 뿐입니다. 이 비판들은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거는 당시의 요구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앞선 성명서를 발표한 사법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 성명 후 한 달여 만인 올해 1월 6일에 조은석 특검을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특검의 영장에 대해서 모든 심사를 했지만 그중 열한 번은 기각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는 법원의 판단을 소리내어 읽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여러분, 오늘 제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다투셔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이 단상의 저를 향해서가 아니고 이 11건의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향해서 반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특검이 이미 해 봤습니다. 열여덟 번의 영장을 들고 법원 문을 두드렸고 그중에 열한 번은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못 한 설득을 민주당이 표결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특검을 국회가 연장해 줘서는 안 됩니다.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이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편지에 답장을 쓸 차례입니다. 답장을 쓰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답장은 40일 연장이 아니라 이 표결에 대한 부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명백한 기록 앞에서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은 연장을 밀어붙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0년 전의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민주당 여러분이 이 단상에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했던 자기모순, 2016년 필리버스터, 검찰 해체와의 정면 충돌.

이제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바로 이 단상입니다. 그로부터 아흐레 동안 38명의 더불어민주당 야권 의원들이 릴레이로 이 단상을 지켰습니다. 총 192시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의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는 혼자서 12시간 넘게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무제한토론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때 이 단상에 올랐던 의원들 가운데 다섯 분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갖고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이언주 의원, 서영교 의원. 그리고 한 분 더, 얼마 전까지 이 국회에 계시다가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옮기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날 이 단상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특히 이분들께서 끝까지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 드릴 말씀이 다름 아닌 그분들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아흐레 밤낮을 이 단상을 지새우셨던 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 현장에는 계시지 않아서 크게 전달력은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6년 그날 이 단상에서 민주당이 했던 말들은 어쩌면 시계 바늘이 맞아떨어진 경우였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다수당의 독주도 폭력이다', '국가기관의 수사 권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날 이 자리에 나온 이 말들 만큼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어쩌다 맞힌 그 시각조차 지금은 정반대로 뒤집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어쩌다 맞은 말들을 그 뱉은 분들 앞에서 그대로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국가기관에 과도한 수사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이 국민을 향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견제장치 없는 권력기관은 반드시 남용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회의록을 발언하신 의원님 이름과 함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정청래 의원님의 이 말씀이 옳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수당의 말할 권리로 이 단상에 선 것은 2016년 의원님께서 지켜 내신 바로 그 권리에 기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권력기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김현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정권,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특검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10년 전 그토록 경계하셨던 그 하수인이 지금 의원님 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걱정되시는 게 아니고 든든하고 흐뭇해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좀 불편해하시고 그때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 계시다가 가셨는데요, '정권 연장을 위해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검을 보십시오. 특검후보 추천에서부터 수사 대상의 선정 그리고 오늘 이 연장 표결까지 전부 한 정당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임명하는 자와 수사의 수혜자, 연장을 결정하는 자, 전부 같습니다.

김현 의원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검이 과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특검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특검입니까? 서영교 의원의 말씀 그대로 정권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다수당은 소수당을 죽이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짓누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독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언주 의원님의 그때 그 단상, 다수당의 독주를 그토록 성토하셨는데요. 막상 집권당이 되셨는데 그때 그 마음이 여전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수당을 짓누르는 그 유혹이라는 것이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누를 때가 다르지는 않을까, 달리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살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준 명령입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꼼꼼히 살피는 일, 발목 잡기가 아니고 의원님의 표현대로 국민이 야당에게 준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나란히 읽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말씀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도 만들어 줬고 국회의원의 권력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 권력은 부리라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잠시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오늘 표결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수 의석은 잠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을 위한, 자신이 정한 표적을 위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위험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활동에는 반드시 기간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당은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아흐레 밤낮을 이 단상 위에서 지새웠습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이제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은 무엇입니까? 10년 전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기한 없는 권력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그 기한을 늘리고자 합니다.

한 수사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이 150명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도 두려

워했던 비대해진 기관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관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고 기관의 몸집도 키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16년의 민주당이라면 오늘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2026년의 제가 아니라 2016년의 여러분이 서 있었을 겁니다. 10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수사의 위험성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속성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사정 변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 여러분이 집권당이 되셨습니다. 그 권력이 나를 향할 때는 괴물이고 내 손에 쥐어 주니 정의가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법의 본질입니다. 이 법은 특검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권력을 쥔 쪽이 원칙을 어떻게 버릴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모순은 한 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최근 10년은 이 모순의 반복입니다.

가장 큰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급기야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길로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권력을 쪼개고 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0년 넘는 국가 수사기관을 그 논리로 한순간에 해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서 특검에 대입해 보면 되지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검찰총장은요 국회에도 불려 나옵니다. 검찰 예산은 낱낱이 심사를 받고요 검사는 인사로 통제됩니다. 특검은 어떻습니까? 예산 내용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기관에게 민주당은 기한을 늘려 주고 인력을 주고 수사 범위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소가 결합된 검찰은 위험해서 해체하고 수사·기소가 결합된 특검은 정의로워서 확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한 정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면 적폐가 되고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면 개혁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원칙이 있다면 두 경우에 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두 경우를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전술이고 정략이고 정치입니다.

이 모순을 풀어내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민주당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권력의 구조가 아니고 수사권력의 주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은 해체하고 내가 만들고 연장해 줄 수 있고 인력을 지원하고 돈을 줄 수 있는 특검은 내가 키운다. 기준은 위험성이 아니라 내가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검찰 해체와 특검 확장이 같은 정당에서 이율배반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째 발언하고 있는 이 무제한토론제도 말입니다. 이 제도는 누가 지켜 낸 제도입니까?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부터 소수의 발언권을 지키는 이 제도를 2016년에 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라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력이라고, 그 말이 옳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겁니다. 견

제와 균형으로 하는 겁니다. 표는, 숫자는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수만 가면 수에 의한 독재입니다. 수에 의한 독재가 극단화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독재를 표방하는 인민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견제·균형은 없고 대화와 타협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거, 다수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10년 전 여러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오늘 제가 서 있는 이유를 부디 다시 한 번이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를 향해 발목 잡기라고 하시겠다면 그 말은 2016년도의 여러분께 먼저 하셔야 됩니다.

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늘 방청석에서 민주당 의원님 한두 분께서 '그러려면 들어와', 저희들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리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법사위를 고집하냐고요? 그 말씀도 드리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제를 최초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움직여 가는 나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은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분립하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연방과 주로 또 권력을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둡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제로 운영될 경우에 과격한 모습들을 자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삼심제도라는 심급제도를 두고 또 각 지방 각 주에도 삼심제도를 별도로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법원이 51개나 있는 겁니다.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도 역시 잘 지켜지고 있는 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원제에서는 양원제의 숙고제도가 없습니다. 하원에서 한번 결정한 것을 상원이 숙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국가를 단원제로 운영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수의 독재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독재를 막아 내겠다고 옛날에는 육탄을, 몸을 던져 가면서까지 저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동물국회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동물국회 그 외향이 너무 거칠고 국민들 보기에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하니 어떤 전통을 만들어 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도를 바꿨습니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꼼짝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동물이 갑자기 A 종에서 B 종이 아니고 동물이 식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식물이 소리칠 수 있고 바람에라도 휩쓸리면서까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 필리버스터 제도밖에 없는 겁니다.

법사위 왜 고집하냐고요? 그 견제와 균형을, 상원이 없어서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원이 하는 역할을 100%는 못 담아내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의 자구를 살펴보는 법사위라도 야당에 줘서 상원의 일부 기능이라도 하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 전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식물국회지만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잘 기능을 해 왔던 겁니다.

저는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래서 이제는 헌법상의 관습으로까지, 관습헌법으로까지 어느 정도 굳어졌던,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법사위를 주는 그 관습헌법을 지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외면하면서 들어와……

제가 어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고집, 어찌 보면 아십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법사위 그게 공약 사업 실천하는 데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법사위 기피 상임위입니다. 공약 사업 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야당이, 소수당인 우리 야당이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우리 국회 안에서 이끌어 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으니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종전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위험합니다. 이 명제는 지금도 여전히 옳습니다. 다만 그것은 민주당의 소유가 아니고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2016년의 민주당은 그 원칙을 지키라 호소했지만 2026년의 민주당은 그 원칙을 자리와 함께 내다 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표결 전에 10년 전의 여러분들의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의록이 오늘 이 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반대토론입니다. 저의 짧은 눌변보다도 훨씬 더 잘 쓰여진 여러분들의 달변, 반대토론입니다.

이제 저는 잠시 논점을 바꿔서 좀 더 얘기를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 하루, 전체회의 하루, 단 이틀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던져 놓은 질문들에 답하는 절차도, 야당과 조문을 놓고 다투는 축조심사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생략한 그 심사를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사람을 벌하는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우리 역사의 얘기들을 한번 했습니다. 단종의 유배를 얘기했고요 사화를 얘기했습니다. 사화는 선비 사(士) 자에 재앙 화(禍), 그래서 선비들이, 즉 그 시대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정치적 반대파의 손에 무더기로 화를 입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연산군 때부터 명종 즉위년까지 반백 년 사이에 네 번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역사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네 사안이……

(「장관님, 어디 가요? 자리 지키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네 사건 안에 오늘 법안이 비추는 거울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화 얘기를 꺼내기 전에 앞서도 말씀드린 '왕의 남자' 1600만이 보셨답니다. 이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린 임금 단종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끝내 16살의 어린 나이로 스러지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에서 임금 곁에서 모든 일을 설계하고 집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명회입니다. 정통성에 시비가 붙자 힘으로 눌렀고 반대하는 자들을 베어 냈으며 그렇게 비운 자리에 제 사람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곧은 말을 하던 사육신이 그 칼에 쓰러진 것도 이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 보복 정치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이 제 정당성을 힘으로 덮고 반대하는 자를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제 사람으로 채우는 방

식, 임금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곁에 칼을 대신 쥐어 줄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처벌의 칼을 남의 손에 쥐어 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역사는 그 원형을 여기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유전은 반백 년이 흐른 뒤 네 번의 사화로 다시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오사화지요. 1498년 연산군 4년입니다. 이 사화는 조선 최초의 사화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빌미로 사람을 숙청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초입니다. 사관이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종 대에 성장한 김종직과 문인들이 사초에 담긴 글 한 편을 빌미로 무더기로 화를 입었습니다. 기록을 남긴 것이 죄가 되어 붓을 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칼도 군대도 아니고 기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후대에 남기는 것, 권력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붓을 꺾으려 사람을 베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는 기록이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누르는 버튼도 기록으로 남는다고. 500년 전에도 권력은 기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사화를 일으킨 자들은 지금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을 지우려던 자들의 이름이 바로 그 기록 속에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굳이 굳이 사안에서 그리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굳이 굳이 본인이 살의를 도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리가 그러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생각에서 일한 사람들까지도 내 편이 아니라고 일일이 단죄하고 그 단죄를 판결문이라는 기록에 남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기자들의 기사 속에 남겨서 그걸 후대에 남겨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정적을 없애려고, 궤멸시키려고 하는 시도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갑자사화입니다. 1504년 역시 연산군 때입니다. 무오사화로 신하들의 견제 기능을 무너뜨린 연산군은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6년 뒤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표면적으로는 폐비 윤 씨의 문제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왕과 함께 사림을 쳤던 훈구대신들까지 왕의 칼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할 세력이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정적을 겨누던 칼은 정적이 사라지면 멈추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립니다. 어제 권력과 함께 남을 베던 자가 오늘은 그 칼 앞에 섭니다. 권한에 한계가 없는 칼, 표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지금의 특검이 한때 민주당의 영웅이라 부르던 증언자들에게까지 칼끝을 돌린 그 장면을 묘사했었습니다. 우리 카로틴의 역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으니 수사의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제 편이던 사람에게까지 닿는 것입니다. 표적을 가리지 않고 도는 칼은 수사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사화가 정확히 그 난동의 역사적 원형입니다.

세 번째는 기묘사화입니다. 1519년 중종 13년, 이 사화의 희생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조광조입니다. 개혁을 내세운 신진 관료들이 왕과 대신들의 손에 숙청되었고 조광조는 끝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희생자 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숙청의 방식에 있습니다.

기묘사화 때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주초위왕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꿀로 글자 쓰고 벌레가 파먹게 한 뒤 그 흔적을 증거라고 들이민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권력이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앞서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로 풀어 준 사람들을 권창영 종합특검이 다시 잡아넣으려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하기로 정해 놓고 죄를 찾는 것, 마녀사냥이지요. 500년 전의 시간을 두고 그 구조가 닮아 있고 서양에서도 역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을사사화입니다. 1545년 명종 즉위년입니다. 이 사안은 앞선 세 사화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왕이 신하를 친 것이 아니라 외척들이, 곧 권력을 쥔 두 집안이 서로를 친 사건입니다. 대윤과 소윤, 같은 윤 씨의 외척이 권력을 놓고 벌인 다툼이 사화로 번졌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끼리의 싸움에 애먼 관료들이 휩쓸려 화를 입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저런 소문으로 그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징계다 뭐다 하면서, 형사 고발이다 하면서 험한 꼴을 당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관료입니다. 전문 직업공무원들입니다. 정무직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칼끝이 겨누어지고 직업군인들에게까지도 칼끝이 겨누어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조직에서 숙청 작업을 사법판단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벌이겠다는 것, 저는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바깥에 적이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저는 한 정권이 만든 두 특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수사를 부정하며 충돌한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이 특검을 반박하고 급기야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끼리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문까지 새로 들어갔습니다. 권력을 쥔 기관들이 견제받지 않으니 이제 자기들끼리 부딪치는 겁니다. 을사사화가 남긴 그 장면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의 사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벌하는 도구를 손에 쥐고 그 도구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을 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기록을 남기려는 자를 벱니다. 칼은 표적을 가리지 않고 결국 제 편까지 벱니다. 없는 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끝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네 사화가 남긴 네 개의 교훈입니다. 이름은 넷이지만 병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처벌의 칼을 쥐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은 이 병을 반백 년 사이에 네 번이나 앓았습니다.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무더기로 쓰러졌고 나라의 공론은 오래도록 얼어붙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네 번의 사화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하나입니다. 권력이 쥔 처벌의 칼에는 반드시 한계와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한계를 지우는 순간 그 칼을 겨눈 자를 향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정의를 벤다는 것, 우리 조상들은 이 교훈을 피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화가 500년 전에 끝난 일입니까? 저는 선뜻 그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화에는 언제나 그렇듯 명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도 정의를 얘기했고 그들도 법을 얘기했을 겁니다. 왕권을 바로 세운다, 기강을 잡는다, 낡은 것들을 없앤다. 그러나 그 명분을 걷어 내고 나면 안에 남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눈엣가시 같은 상대를 제거하는 복수 그리고 그렇게 비운 자리를 제 사람으로 채우는 권력의 공고화입니다. 거기에는 정치만 있고 법은 없습니다. 오직 척살만 있고 빈자리를 제 편으로 메우려는 욕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 사화를 아주 최근에도 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적폐 청산 그리고 역시 김명수 대법원, 당시 김명수 대법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묵묵히 일을 하던 우수한 중견법관들을 다 요직에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향의 법관들로 채웠습니다. 이 정권이 기울여 놓은 법원이라고 말씀드린 그 기울기가 바로 이 인적 청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판할 사람을 갈아 끼웠습니다.

가끔 그러더군요, 저보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법부를 우리 마음대로 했다고? 그게 말이 되겠냐? 우리가 대한민국 판사 3000명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고? 턱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일견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장악할 때, 새로운 집행부가 사법부를 장악할 때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3000명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겠습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갈 실익도 없습니다.

대부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은 전부 일반 서민들의 민사와 형사를 아주 공정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장전담이나 주요 법원, 몇몇 형사재판장들, 그 숫자들, 행정법원 등등 정치적 사안이 몰리는 그 재판부만 정리하면 다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실상을 아시면 왜, 어떻게 저들이 법원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송 역시도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고 행정부 역시도 앞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각 부처, 사법부 그리고 방송, 공공기관 모두 다 인적 청산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얘기했지만 청산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껏 일한 것이 죄가 되어 밀려난 군인,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직사회 전체를 자신들의 색깔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 제 사람을 채우는 것, 500년 전 사화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오·갑자·기묘·을사, 이제는 역사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 같으면 하나의 리듬으로 외워 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네 번의 사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 목록에 두 개를 더 보탰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12·3 사화입니다, 그 하나가. 비상계엄이라는 사건 하나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과 군지휘관, 공무원 등을 내란이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처벌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것,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

목에 '내란'이라는 말을 박아 넣어서 아예 판결의 주문을 법률 제목에 써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종합특검 사화입니다. 사법부는 법관을 갈아 끼워 장착했고, 방송은 사람을 바꿔 장악하고, 부처 공무원들은 청산의 이름으로 솎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도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붙들어 벌하는 칼, 특검입니다. 종합특검은 진상규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앞선 사화들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칼, 복수와 정권의 공고화라는 그 오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정안은 그 칼을 더 오래, 더 넓게, 더 많은 손에 쥐어 주려는 법입니다.

네 번의 사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을 쥔 처벌의 칼에는 반드시 한계와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 누차 수도 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칼에 채워 둔 기한이라는 자물쇠를 풀고 수사 대상이라는 칼날을 넓히고 파견 인력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피로 배운 그 교훈을 정확히 거꾸로 되짚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께서도 짚어 주셨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조상들이 겪은 20세기의 그 일을 20세기 미국도 특검이라는 제도에서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 저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챕터를 만들어서 책을 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특검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제도의 원천은 미국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은 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어 특별검사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21년 만인 1999년 이 법을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1999년에 미국은 이 법을 폐기하는데 그해 1999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법을, 최초의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연장 시한이 왔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특검을 당했던 쪽만이 아니고 특검을 시켰던 쪽까지 함께 이 제도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이고 힘이고 미국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특검이 괴물이 된다는 것을 양당이 모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한 스타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8년 특별검사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사했을 때 대법관 9명 중 단 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입니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제도가 언젠가는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당시에는 1명의 소수의견이었지만 10년 뒤 미국 의회는 사실

상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 이 반대의견은 시간이, 옳다고 증명해 준 판결문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특검의 원조 국가가 특검을 버린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임명 당시의 사건을 넘어 수사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것, 예산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미국이 1999년에 버린 바로 그 병폐를 대한민국 민주당은 2026년에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한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BBK 특검의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관이 아닌 특별검사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결정이 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검법도 헌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특검법도 헌법의 원칙을 넘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검법은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닙니다. 심사받아야 할 법률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이런 판시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사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보충적·예외적,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못 박은 특검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합산 690일 가동 중인 특검, 법을 고쳐 가면서 기한을 늘리는 특검,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하는 특검, 이 두 조건 안에 있습니까? 보충이 본체가 되고 예외가 상시 된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 특검이 아닙니다.

역사와 헌법의 경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법안의 조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현행법 2조는 특검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개 호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조 1항,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제1호,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가 이걸 읽어 가고 있는데 읽어 가는 중에도 조문 자체가 이미 다 유죄 판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두고 재판이라고,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방금 문장을 들으셨습니까?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아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질렀다고.

2호입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3호, 제1호·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가목,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목,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목,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목,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제5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 및 개인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제6호,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9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10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11호,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12호,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13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14호,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그리고 제15호, 공무원이 수사 지연·은폐·비호……

제16호……

제17호, 제1호부터 16호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사건.

많지요? 참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혐의 사건이라는 꼬리표를 열네 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서술어들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주로 '저질렀다' '시도했다' '종사했다' '모의했다' '개입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전부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게 그 내용이나 양을 보면 이게 법률입니까, 공소장입니까? 법률의 문체가 아니고 그것을 조금 풀어 쓰면 그냥 공소장이 됩니다. 공소장 써 놓고 그것을 법률에다 떼어다 붙인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회 다수당이 법률의 형식으로 공소장 쓰고 그 공소장대로 판결문 쓰도록 요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14개의 호가 커버하는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계엄·외환·선거·여론조사·고속도로·산업단지·관저공사·인사청탁·비화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논란과 관련된 것 전부 이 법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 정권 전체를 수사하는 상설 사정기관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의장대리 서삼석 김태규 의원님,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김태규 의원 예.

○의장대리 서삼석 지금 방청석에 2026년도 한미 의회 청소년 교류사업 미국 대표단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좀 보내 주시지요.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셋째, 마지막 17호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뭐라고 했냐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일체, 이미 이 법에 일체라는…… 일체, 법률 용어 중에서는 가장 넓은 표현이지요. 일체라는 표현을 이미 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안은 제15호를 또 넓히겠답니다. 일체로도 부족해서 수사 대상을 또 넓히겠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전 정권, 대통령과 영부인을 포함한 모든 전 정권 인사들의 모든 영역에서의 정치행위라고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풀어 써 놨다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요.

현행법 10조의 수사기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사기간은 10조에 있는데요 8개 항 전부 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고치려는 조문이 어떤 구조인지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서요.

제1항입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특별검사는 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1

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수사를 30일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은 그 승인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항,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제8항, 송치받은 검사장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법 보셨습니까? 이 법은 완결된 설계도입니다. 90일 만에 끝내라. 못 끝내면 딱 두 번, 딱 두 번만 연장해라. 그래도 못 끝내면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 넘긴 뒤의 절차까지 7, 8항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수사가 미완이어도 사건은 죽지 않고 법이 출구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월에 스스로 설계한 출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출구를 놔두고 벽까지 부수면서 또 또 연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대안 전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의 조문들을 앞서 확인한 잣대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수사기간의 연장, 파견 공무원 증원, 수사대상 확대 그리고 그 밑에 숨은 조문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문, 수사기간 연장입니다. 현행법 10조 그대로 읽어 드리지요.

3항에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를 30일 연장할 수 있고, 제4항에 특별검사는 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는 대통령 승인으로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두 항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나왔지요. 그렇지요? ‘1회에 한정하여’.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연장이 남용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1회에 한정하여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데 각각 딱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차 종합특검은 그 두 번의 연장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90일에 30일 또 30일 이렇게 쓴 거지요. 그러니까 다 쓴 거지요. 다 썼는데, 그래서 원래는 7월 24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시 개정합니다.

위원회 대안의 개정문 그대로 읽어 보지요.

제10조제4항 중 ‘1회’를 ‘2회’로, ‘30일’을 ‘각 30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물쇠에 새겨진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 자물쇠를 채웠던 본인들이 직접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에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구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4항

의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연장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특검을 30일 더 연장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전임 정권을 수사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민주당이 법을 고쳐서 연장의 열쇠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열쇠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손에 갖다 쥐여 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저는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문이 그 형용모순의 완성입니다. 임명도, 수사 대상도 그리고 이제 연장의 열쇠까지 전부 한 진영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내야 됩니다. 끝내는 게 그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법의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아예 법 자체를 바꿔 버리자. 법이 안정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적안정성은 없고 법을 모두 다 처분적 법률로 만들고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 45분 다 지나고 추가 시간까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90분 내내 골 한 번도 못 넣었던 팀이 경기를 끝낼 수 없다며 30분 또 더 뛰겠답니다. 그리고 이 팀은 규칙집을 제 손으로 고쳐 쓰고 심판마저 제 편으로 쥐고 흔드는 팀입니다. 그러니 심판에게 판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칙을 고쳐 후반을 120분이라고 써넣고 그대로 경기를 이어 갑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경기를 우리는 공정한 경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수사기간이라는 규칙이 다 끝나 가니 규칙제정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규칙을 고쳐서 경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한시성이라는 특검의 본래 특성이 훼손되었다고 이해할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검에 그토록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성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한시성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일 뿐입니다. 미국은 1999년에 이것을 정확히 목격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문은 파견공무원의 증원입니다. 역시 조문부터 한번 보지요.

현행법 제6조제5항 단서,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개정안은 130명을 150명으로 고치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합니다.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권한을 쓸 때는 그 수단은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며 얻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모든 국가작용이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조문을 비례의 원칙 세 관문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적합성입니다.

인력을 늘리면 수사 성과가 나옵니까? 이 특검의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130명을 15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사인력, 검사인력이 부족하다고, 그것은 제가 모두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

니다. 문제는 인력을 투입해서 더 무언가를 찾아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없는 죄가 150명 아니라 1500명을 넣는다고 한들 나오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죄는 만들어진 죄입니다. 조작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침해최소성입니다. 그 150명 어디에서 옵니까? 검찰과 경찰,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사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고 계신 여고생 피살사건 그리고 민생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데 투입되어야 될 수사인력입니다.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성과 없는 곳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성과 있는 곳은 비워 두는 꼴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 열한 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정권의 위하에, 이 정권에 친화적인 법관들이 상당수 들어서서 내린 결론이 열한 번의 영장 기각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수사인력들의 막대한 투입, 국민세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논의들도 많이 있지만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제6조의2제2항의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검사가 파견을 안 온다, 그런데 공소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왜 안 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력 요건도 인원 제한도 없이 특검이 지정만 하면 그냥 갑자기 특검보의 유사한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특검의 유사한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을 할 때 원안에는 경력도 인원 제한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력 5년에 10명 이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고쳐진다고 해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요. 특별검사 15년, 특별검사보 17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한 경력을 묻지를 않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기 싫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유탄이 돼서 날아올지 모르니 그래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 검사를 넣어서 일처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수사기록에 관한 특정이 있는데요. 이게 21조 2항에 있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독립된 기관의 기록을 다른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조항입니다. 독립성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지적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단도 없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당 조항의 엉성함과 정치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당시에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수사기

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진행 도중에 바꿔서 그 수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문으로 적어 둔 겁니다.

아까 저는 경기가 끝나 가니 규칙을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안 스스로가 부칙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0일 연장이라는 간판 하나 걸어 놓고 그 뒤에 수사대상이 늘고 사람이 늘고 특검의 사람들이 법원에, 법정에 상주하게 되고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세입자 계약서도 비유를 드렸는데요, 세입자가 증축한다고 하고는 집 골조까지 다 바꾸고 있는 걸로 비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정안의 조문 심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심사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갔을 때 국회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15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곧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할 파견공무원을 수사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파견받는 것이 전체 형사사법체계 내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파견된 공무원이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썼습니다.

수사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인데 수사 종료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수사력을 분산시키다 보니 수사 인계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것들은 야당의 논평이 아닙니다. 국회 자신이, 전문 검토기구가 국회 공식 문서에 남긴 문장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받아 들고서도 단 하루 만에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원안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행정처는 공소유지를 위한 변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까지도 이 확장에 고개를 저은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미국의 21년 실험이 반대로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시가 반대로 답했습니다. 영장재판을 통해 법원이 열한 번 기각으로 답했습니다. 국회 전문 검토가 신중론으로 답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회의론으로 답했습니다. 저희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것은 오직 민주당과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 특검 자신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조문 바깥의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헌법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원칙이 아니고 모든 문명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의 대원칙 중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이 왜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

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은 단지 피의자가 된 것으로 직장을 잃고 이웃의 시선을 잃고 잠을 잃습니다. 소환 통보 한 장에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기소가 되든 수사를 받는 시간 그 자체가……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수사를 받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이미 형벌입니다.

그래서 법은 수사에 기한을 두는 것입니다. 국가가 한 사람을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붙들어 둘 수 있는 시간에 한계를 두는 것, 그것이 문명국가의 사법입니다.

690일 그리고 또 30일, 이 긴 시간 동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원이 구속조차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에 국가가 또 30일을 얹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법의 헌법적 의미입니다.

죄가 있다면 기소해서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죄가 없다면 놓아주면 될 일입니다. 기소도 못 하면서 놓아주지도 않는 것,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억류입니다.

오늘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역사로 조문으로 원칙으로 헌법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단상을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특검 가동 690일, 쏟아부은 세금 220억 원, 방값으로만 나간 64억 원 그리고 열여덟 번의 청구에 열한 번의 기각, 성과라고 내놓기 민망한 이 숫자들이 오늘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의 성적표입니다.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이 특검에게 보낸 기각 결정문 그 절제된 문장 속에 특검의 수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기울여 놓은 법원조차도 차마 들어줄 수 없었던 열한 번의 영장 청구였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처벌의 칼을 쥐었을 때, 형벌의 칼을 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선의 네 번의 사화가 반백 년의 피로 남긴 기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의 원조인 미국에서 21년 만에 그 제도를 스스로 폐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 단상에서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의 위험을 아흐레에 걸쳐 밤낮으로 외쳤던 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그 권력의 기한과 몸집과 수사 대상을 늘리는 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민주당 의원님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위험해져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구조의 특검을 키우고 있는 모순을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은 힘없는 쪽의 무기일 때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 여당의 특검은 형용 모순이라는 것, 한시성을 잃은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지 않은 수사 권한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흉기가 된다는 것, 기소도 못 하면서 놓아주지도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억류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 이 법은 심사도, 토론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숫자가 있고 저에게는 그 숫자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이 단상과 몇 시간의 발언과 그리고 기록뿐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기록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10년 전 여러분께서 이 단상에서 남긴 기록을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르는 버튼도 똑같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문 열한 통을 눈앞에 두고 국회, 전문가의 신중론을 귓등으로 흘리고 예산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채로 여러분이 이 법에 찬성했다는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다시 이 단상 쪽에 서게 되는 날 누군가 그 기록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권력의 자리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습니다. 부디 남아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동네 상가에서, 공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하루 버텨 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과 세금은 그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과 세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국민께서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산 690일, 220억 원, 월세 64억 원 그리고 18분의 6, 이 숫자들로 시작했으니 이 숫자들로 맺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명하게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법을 지켰고 누가 법을 도구로 썼는지 역사는 반드시 오늘을 기록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서삼석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윤용근)

(11시28분)

○의장대리 서삼석 다음은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반대 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은수 의원님께서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가 부실하게 공사됐고 준공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위험한 장소인 것처럼 특검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은 이미 작년에 청와대로 옮겨 놓고도 왜 그렇게 위험한 관저에서는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특검은 형사사법체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특검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13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법시스템의 파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관련 법안 형사사건 처리 지연의 고통 속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어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평범했던 일상도 모두 무너진 채 피해 주택에서 매달 연장되는 대출 이자를 겨우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가해자를 직접 추적하고 증거를 모아 경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검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라며 절규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돌봐야 할 우리의 아들딸들이 왜 수사관이 되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되며 세금과 대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두 청년의 비극이 오직 특검 파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다면 그것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연된 한 사건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엄중한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기미제사건 1건은 통계표에 적힌 단순한 숫자나 한 줄의 글귀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돌려받지 못한 전 재산이며 누군가에게는 매달 뼈를 깎으며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재산을 숨기고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이며 피해자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면의 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의 실체를 보아 주십시오. 이미 법정 최장 수사기간 150일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도 무엇을 새롭게 밝혔는지 제대로 된 결과표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일의 수사기간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수사 인력도 더 달라고 합니다.

특검에게 30일은 거대 여당이 법을 고쳐 손쉽게 늘려 줄 수 있는 기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 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이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 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9일 민주당 의원 무려 161명은 스스로 이 사건을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헌법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안을 대하는 국회의 시계도 똑같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종합특검 추가 연장안은 7월 8일에 발의되어 단 하루 만인 7월 9일 법사위에 회부되더니 10일 소위 통과, 15일 전체회의까지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대 여당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달리는 급행열차 특검이 따로 없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직접 발의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걸려 있다던 선관위 특검은 불과 하루 뒤인 7월 9일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현재까지, 7월 20일까지도 여전히 법사위 회부 단계에 멈춰 서 있습니다. 161명의 이름을 올려놓고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묻습니다. 정권에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면 급행 특검이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일에는 침묵하며 시간을 끄는 침대 특검입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이며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입니까?

더욱 가슴 아픈 모습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9일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는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수단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을 때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기록에서 빠진 증거는 서면요구서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폐된 진술은 공문 한 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숨긴 증거를 찾으려면 독립된 기관이 직접 기록을 보고 직접 참고인을 만나며 직접 압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려고 합니까?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주며 영장 청구와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까?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검찰이 하면 권한 집중의 폐해이고 특검이 하면 정의의 완성입니까?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악한 권한이 되었다가 갑자기 선한 권한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권력의 정점을 집중시키는 개악일 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부 역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서 지휘부와 윗선의 외압을 수사해야 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구속된 전 수사팀장은 30여 년 경찰 경력 대부분을 그 지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끈끈한 향찰 유착과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을 과연 내부 수사만으로 철저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조차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의 서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명분은 정치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민생 사건의 지연과 사법 기능의 후퇴뿐이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오직 권력기관 개편과 속도전에만 몰두했던 그 일방독주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었고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역사의 준엄한 경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놓치거나 숨겼을 때, 경찰의 지휘부가 개입했을 때 외부에서 이를 견제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일 수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 독점을 없앤다면서 또 다른 경찰의 수사 독점을 만드는 것은 결코 권력 분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모순, 내로남불에 빠져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칼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의는 민생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권력 유착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특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 축구라는 이 선택적 법치와 모순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특검의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결한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성과표 없는 특검에 다시 30일을 얹어 주는 것이 진상규명은 아닙니다. 정권 유지용 특검이라는 의심만 더 키우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건보다 성과 없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 진정 더 중요합니까? 국민주권이 훼손된 사건보다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한 달 더 이어 가는 것이 더 급합니까?

조정식 국회의장님께도 묻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의장 선출 시에 당적을 내려놓으신 국회법의 정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의 시계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시계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시계입니까?

오늘의 표결은 단순히 특검에 30일을 더 주는 표결이 아닙니다. 국민주권보다 정권의 필요를 앞세울 것인지, 국회가 국민의 것인지 권력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엄중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오늘의 표결을 일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훗날 역사의 무거운 책임까지 대신 져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양심의 본질은 순간에서 영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훗날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의 편에 서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이 모순된 개정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한 헌법 준수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 선서문을 지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의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계속되는 특검 정치로 인한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찰 인력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더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다음 달 23일까지 특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이 특검 수사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들입니다. 지금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검사 두 명으로 버티고 있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면서도 고작 세 명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 수사 인력이 겨우 세 명뿐입니다. 반도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정권 유지 목적의 특검에는 인력을 대거 쏟아부으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을 지켜야 될 수사 인력은 고작 세 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부장검사와 초임검사만 남은 부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후배를 가르치고 사건을 이끌어 가야 할 중견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수사 역량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통계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이미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미제사건도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검사 한 명이 미제사건 500건이 넘는 사건을 떠안고 있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천안지청 상황에 대해 파산지청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실제 수사검사는 8명뿐이라고 합니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500건 이상 누적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수사는 계속하면서 정작 국민의 민생사건은 뒤로 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무너져 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산업기술 유출 피해 기업,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제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수사 역량을 회복시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 인력난과 사건 적체는 더 이상 통계 속 이야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검찰청 앞에서는 민생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피해자들,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 사기 피해자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까지 검찰청 앞에 서서 법의 정의를 보여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분양 사기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1년 동안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려 버렸고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 동안 사건을 보유하다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고 그사이 공소시효 만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국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수사 속에서 정작 피해 구제의 기회마저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서 경찰은 아직 지능범죄 수사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검찰 역시 인력 부족으로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검이 아닙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제때 수사받을 권리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그런데도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2차 종합특검이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특검이 진행됐던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건 장기 미제는 176%, 성폭력 사건 장기 미제는 133% 증가 규모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건 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는 동안 민생 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선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차, 4차 특검을 계속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을 비판하고 있는 사설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6일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또 연장 요청한 종합특검, 정말 3년 내내 수사할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종합특검이 특검 수사기한을 30일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잔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당초 수사기한은 90일인데 부족하다며 30일씩 두 차례 이미 연장한 상태다. 특검법에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파견공무원 정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벌이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긴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지금껏 종합특검이 내놓은 성과는 주로 앞서 진행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뒤집는 것들이다. 내란 특검이 혐의 없다고 판정 내린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등을 줄줄이 입건했다.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직전 특검을 부정하는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군인 일부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합특검이 자신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유다.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을 향해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공격하는 이례적인 사태도 빚어졌다. 앞선 3특검도 무리한 수사로 지적받았는데 종합특검은 그보다 더한 일을 벌이고 있다.

죄가 없으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종합특검은 실적을 위해 죄가 안 되는 것도 죄로 만들려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애초부터 혐의가 없는, 분명한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종합특검이 이러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월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으로 나온 여권 인사를 만나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 임기 말까지 계속 내란 수사를 이어 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집권 후 1년 내내 내란몰이로 정국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내세운 지난 지방선거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론에 반하는 특검 수사 연장은 정권에도 부담 준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신문의 사설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차 특검의 시한 연장과 공소 변호사 요구, 거부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2026년 7월 6일 자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취지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또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차 특검은 이미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총 150일간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소유지변호사 도입, 파견검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경찰 등 파견공무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미 드러난 종합특검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검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위배될뿐더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16조, 검사의 기소·공소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

재정신청 재판에서 법관이 검사 역할을 맡기는 지정변호사와도 차원이 다르다. 무리한 법 적용과 무분별한 수사 확대로 내란특검과도 충돌하고 새로 입건된 내란 재판 증인들이 수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증언 거부 등으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

저도 의심됩니다.

수사기간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그런데 3개 특검에 파견검사만 126명이었고 현재 2차 특검, 관봉권 띠지 특검 등 5개에 파견된 검사가 64명이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에도 15명 안팎이 파견됐다. 선관위 특검, 조작기소 특검도 예고되어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도 그 둘을 합친 특검을 계속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을 넘어 국민과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로 비쳐질 지경이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신문 사설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사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 놓나’라는 제목의 26년 7월 6일 자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유지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간 최대치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영장을 청구한 11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어제까지 최종 7명입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진다.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무한 수사할 셈인가’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도 있습니다. 이어 ‘논란의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이 정도면 상설 수사기관’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논설도 있습니다. ‘민주당 종합특검 세 번째 연장 강행, 뭘 더 수사할 게 있나’라는 제목의 26년 7월 10일 자 매일신문 사설도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내란 수사, 무리수 남발 아닌가’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도 있습니다. ‘검찰개혁한다는 여, 특검 3차 연장이 과잉수사 아닌가’라는 매일경제 사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종합특검 추가 기한 연장’, 국민일보 사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언론에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은 불필요하고 2차 종합특검 출범 자체부터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두겠다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검사에게 맡기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검이 반복되고 상시화된다면 특검은 더 이상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반복되는 상설 수사기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모적인 끝없는 특검입니까, 아니면 민생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입니까?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민중기 특검 등 3대 1차 특검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칼날의 길이가 아니라 칼날이 향하는 방향이 공정할 때 비로소 정의가 됩니다. 특별검사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덮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검을 보며 왜 저 사람만 수사하느냐, 왜 어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어떤 의혹은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민중기 특검이 진행한 통일교 관련 수사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향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과 소환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고 정치적 파장은 실시간으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 수사는 어떠했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

한 피의자로부터 민주당의 범죄사실을 듣고도 이를 덮어 버렸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 문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압수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조에는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라는 제목하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영장집행 당시에 사전통지 규정을 미준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미리 당직자 등에게 영장집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당사에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몰래 섞여서 당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당 당사는 출입카드를 소지한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위층에 올라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외부에는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대상이 당원 명부에 한정되는 만큼 중앙당 당사 전체에 임의로 출입하여 모든 시설물 내지 디지털 매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중기 특검팀이 사전에 영장집행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당사에 출입한 것은 주거 침입 내지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과 범죄사실, 입증취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 및 집행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영장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영장에 기하여 시도된 압수수색은 위법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이 편파적으로 요청해 온 영장 내용에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광범위한 영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1차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언론의 지적도 숱하게 받아 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민중기 특검의 사건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 12월 9일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었다. 반면 민 특검은 지난 24년 8월 수사 단서를 잡고도 4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특검팀의 편파 수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쪽만 집중 수사했다.

본지 취재 결과 특검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최소 18명을 삽심 차례 이상 소환 조사했다. 압수수색도 스무 차례 이상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한 단서가 나왔음에도 이와 관련해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고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거짓말입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서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여러 차례 무리수를 뒀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강압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등 과거 검찰에서도 못 보던 무리한 수사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의원 등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메모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올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정교유착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후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이 민주당 후원 부분은 수사에서 빼 버린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편파적 수사를 일관하는 특검에게 다시 2차 종합특검을 부여하고, 이미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을 또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양심이 있는 것입니까?

특검은 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의혹도 수사해 김 여사와 한 총재, 윤 씨 등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의 '여야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김 여사 등의 공소장에는 국민의힘 부분만 언급했다. 역

시 민주당은 수사에서 쏙 빼 버린 정치 특검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을 통한 수사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지휘부에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특검보와 민중기 특검이 별다른 판단과 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로 파견 복귀를 앞둔 11월 초 민주당 인사들 금품 수수 의혹에 조제 번호만 달아놨다고 합니다. 조제 번호라는 것은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입니다.

당시 한 검사는 '검찰로 파견 복귀를 해야 해서 나중에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생길까 봐 내사 사건 접수만 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건 접수 기록만 남겼을 뿐 사실관계 확인 등 실질적인 내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50대 양평군 공무원은 특검의 회유·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21장 분량의 자필 유서에서 특검 수사관 3명이 돌아가면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성을 진술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검 측은 자체 감찰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1차 특검의 민중기·조은석·이명현, 이 특검 모두가 부실한 수사이고 강압수사이고 무리한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최근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개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4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2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 기록에서는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 물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22일 생성된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 후원 혐의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에 관한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차 특검의 결과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이고 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른 수건을 쥐어짜낸다고 해서 물방

울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민생사건을 방치하게 만드는 특검 연장,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은 과정부터 결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논란만 제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 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 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특검팀은 같은 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설상가상 한 달여 뒤에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라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약 2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회사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더욱이 이 회사 설립자인 오명환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창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민 특검이 거래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악의 축이 아닐까요? 한때 특검 사의 표명설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한 것이라며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만 그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매도 시점이나 권유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민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별도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팀의 신뢰 가도가 지속해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검팀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압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찰의 한계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 인력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면서 수사 동력만 크게 꺾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인력, 시간, 혈세까지 모두 매몰비용으로 소모해 버린 것 외에 특검이 특검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과연 같은 잣대로 들여다봤을까요? 같은 기준으로 수사했고 같은 기준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같은 기준으로 국민 앞에 설명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법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는 권력을 향할 때에도 야당을 향할 때에도 똑같은 온도와 같은 속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한쪽에는 돋

보기조차 들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특검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특검은 국민에게 가장 강한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엄격한 중립성과 형평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오히려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특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수사했는지가 아니라 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합니다. 검찰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경찰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검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공정성부터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이들 특검은 모두 합쳐 1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만 16개, 수사 인력은 255명,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며 가장 막대한 권한과 인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가 컸던 만큼 논란도 가장 컸습니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기소 숫자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이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한 양평군청 공무원은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유서와 자필 메모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어도 되는 것입니까? 법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역시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고 저 역시 고발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면서 민주당 관련 진술은 같은 기준으로 검토되지 않습니까? 특검의 기준은 법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별건수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20명 가운데 11명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후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두 달 뒤 다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특검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일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

는데 30일을 더 연장해서 무엇을 또 찾고 무엇을 또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민중기 특검은 특검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거 고교 동문이 대표인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 이후 매도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이 SO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외교부에 항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출범의 계기가 됐던 핵심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병 특검의 참고인 2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특검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스무 살이 넘은 딸의 방도 들어가서 옷장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은 실시간 언론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특검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종료될 무렵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나와서 서면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창하게 해 놓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스무 살 넘은 딸의 옷장까지 뒤집어 놓고.

특검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그런 특검에게 다시 3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특정 특검 한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만들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3대 특검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한 권한, 막대한 인력, 막대한 예산 그리고 끊이지 않았던 편파수사 논란, 강압수사 논란, 별건수사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2차 종합특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보다 연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평가보다 권한 확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의 검증보다 정치적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한 연장, 인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없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종결을 선언하면서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고 법 아래 특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검찰청은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권을 전부 맡겼으면 특검 사건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경찰에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경찰의 칼끝이 민주당에도 향할까 봐 두려워서 말 잘 듣

는 검사만 골라서 특검을 이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무서워서 폐지해 버리고 경찰의 수사 능력은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에게는 신뢰를, 검찰에게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정의가 완성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국민은 더 신속한 수사를 경험했습니까? 더 공정한 법 집행을 체감했습니까? 아니면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국민은 어느 기관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며 2021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영준 전 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수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지난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추가로 296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업무정보화 예산만 54억 5700만 원, 무려 51.3%를 증액했습니다. 전자영장 전송시스템 구축에 36억 6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생성형 법률 AI 도입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미 5400만 원 상당의 고성능 컴퓨터를 구입했고 AI 이용료로만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예산으로도 19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정보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도 필요합니다. 전자영장 시스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과는 0.05%인데 예산은 17.3% 늘려 달라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AI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는 수사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건이 몇 년씩 묶이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관된 개혁입니까, 아니면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 놓았을 뿐인 것입니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비판이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겨레신문 법조팀 선임기자를 지낸 강희철 기자는 자신의 저서 '검찰외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힘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경찰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판의 주체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법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조차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실패한 정책은 고쳐야 합니다. 실패한 제도는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방향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붕괴시킨 주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공수처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먼저 왜 실패했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사체계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뒤로 미룬 채 검찰청부터 없애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거대한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 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개혁은 또 다른 실패를 낳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출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을 만큼 과연 단 한 번만이라도 치열한 검토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법조계와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깊은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 그리고 민주당의 이 위험한 속도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더 거대한 권력 집중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집중을 비판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겠다는 중수청은 어디 산하입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부여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묻겠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경찰과 내무부장관이 개별 형사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근대 형사사법의 가장 거룩한 원칙은 수사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편안은 사법적 통제를 치워 버리고 정치권력이 수사권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더니 행정부, 무소불위의 권한 집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말

하는 개혁입니까?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보완수사는 검사의 특권이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 힘없는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억울한 증거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미흡하거나 중요한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허점을 채워서 억울함을 풀어 주라고 만든 것이 바로 보완수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 없애고 겨우 보완수사요구권 서류 한 장 남기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간 형사사법을 다뤄 온 실무진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써 내려간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말입니다.

공문 한 장으로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이 한 장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법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마비시킬 대혼란과 실무적 대책 부재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만, 수사 사건인 수만 건의 사건들은 대체 어떻게 어디로 이관할 것입니까? 경찰에서 송치되어 당장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누구 손에 맡겨집니까? 전국 검찰청이 쓰던 거대한 전산시스템과 증거물들은 누가 어떻게 연결하고 관리합니까?

법안은 국회에서 하루아침에 방망이를 두드려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형사사법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준비 없이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2차전지 핵심 공정, 방위산업 기술, 국가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러한 중대범죄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둔 지금 정작 누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조차 정부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같은 법조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대로라면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중수청은 사실상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거의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수사기관과 개청준비단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사법시스템입니까?

정부는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담

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면 단순한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만으로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핵심기반 공격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외부 해킹보다 전현직 임직원이 설계도면을 출력하거나 공정자료를 USB에 복사해 반출하는 방식이 훨씬 많습니다. 국가핵심기반을 공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유출과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중수청은 출범하면서도 자신들이 담당한다고 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 왔던 국가정보원조차 앞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준비된 개혁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과정입니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자는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수사의 적법성 논란부터 불러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국민입니다. 국가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입니다.

이 혼란은 결국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중수청 인력의 자격 요건과 선발 기준을 확정하고 9월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담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유출 사건을 오래 다뤄 온 한 변호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도 수사 주체를 확정하지 못하면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설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관할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가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라고 말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는 정치적 구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명확해야 합니다. 관할은 분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두고도 누가 수사하는지, 어디까지 수사하는지, 어떤 사건을 맡는지조차 다시 법을 고쳐 가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준비된 개혁입니까, 아니면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걸고 진행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실험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가장 솔직하고도 추악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가 막힌 내로남불과 자기모순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뭐라고 외쳤습니까?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절대악이자 검찰 독재라며 77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까지 싹 다 쥐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사법농단이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의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할 특권이고 자신들이 만든 특검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은 착한 권한입니까?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특검 독재를 허용하는 기이한 이중잣대는 더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까지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강제이첩권을 주고 심지어 특검 입맛대로 재판을 끝내 버릴 수 있는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공소취소권, 법조인들도 쉽지 않은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왜 그 어려운 공소취소권이라는 용어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정의입니까?

수사도 특검이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고, 재판을 끌고 가는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재판을 없애 버리는 공소취소도 특검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슈퍼 공룡기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쪼개 놓고 뒤에서는 수사·기소·공소유지·공소취소까지 일극 독점하는 특검 상왕기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는 개혁의 실체입니까? 이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방탄용 사법 파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봤을까요?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검찰이라는 헌법기관은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으니 해체해 버리고 자신들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맞춤형 특검을 세워 사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권한 집중은 안 되지만 민주당 특검의 권한 집중은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안 되지만 특검의 무제한 수사 연장은 된다? 이러한 기적의 논리가 바로 '내가 하면 개혁, 남이 하면 독재'라는 민주당표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방탄막이나 정적 제거용 도구가 아닙니다. 검찰은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어 주는 이 기만적인 특검 내로남불을 우리 국민과 국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위헌적이고 모순된 사법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은 급행 특검,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은 침대 특검입니까?

민주당의 기가 막힌 이중 잣대와 위선을 보여 주는 결정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적 제거를 위한 특검은 어떻습니까? 단 며칠 만에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광석화처럼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 참정권 짓밟기, 선관위의 선거관리 참사에 대한 특검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말로만 특검 하겠다며 드러눕고 시간만 질질 끌며 수사범위를 쪼개고 추천권을 가로채려는 내로남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얼마 전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의 감독이 축구 전략을 잘못 짰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짓밟기, 선관위의 선거관리 참사에 대한 특검, 침대 축구하는 민주당, 국민이 청문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초유의 참정권 박탈 참사입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2시간 넘게 줄을 서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투표가 중단되고 심지어 개표방송이 진행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투표를 하는 기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송파구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표용지를 절반만 인쇄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권장하고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어림짐작, 주먹구구식 짐작으로 투표용지를 잘라먹었다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기관입니까?

2022년 대선 때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긴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2025년 대선 사전투표 때의 투표용지 유출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고갈 사태까지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난 국민들의 억울함과 참정권 침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 신뢰를 뿌리째 흔든 국가적 범죄이자 선거 참사입니다. 민주당의 침대 특검 작전과 제삼자 추천이라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참사 앞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국정조사로 충분하다, 개헌부터 하자며 딴청을 피우더니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이제는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나왔습니다. 과거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하겠다고 국민을 속여 놓고 뒤로 드러누워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게다가 수사범위는 선관위 내부로 대폭 줄이고 특검 추천권은 자신들이나 대한변협 같은 제삼자에게 주자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지난 무수한 특검들에서는 제1야당의 추천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 1호인 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라 불리는 인물 위철환 아닙니까?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거나 그 직무대행이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특검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무늬만 특검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는 치졸한 방탄작전입니다.

이에 대해 올림픽공원에서는 청년들이 밤을 새우며 6월 3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 사설에서도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읽기 전에, 조금 전 올라온 속보 기사 하나를 보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입니다.

더 이상 성실한 일반 공무원들 잡지 말고 고위 책임자들 신속히 처벌할 수 있는 참정권 침해 특검 오늘이라도 당장 수용해 주십시오.

‘사전투표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선관위……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주제의 2026년 6월 9일 자 디지털타임스 사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남긴 상처와 충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선거 당일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초유의 선거 참사가 발생하더니 이제는 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둘러싼 인위적 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토록 무능하고 부실하며 의혹으로 가득 찬 선거와 선관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실 선거 관리에 이은 쌍둥이 득표수 논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인천 송도 1동과 2동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3030표 대 1440표로 정확히 일치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전남 신안군 하의면과 여수시 삼일동 등 광주와 호남 지역 10여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인구수도, 정치 성향도 다른 독립된 투표소에서 로또 당첨보다 희박한 확률의 수치가 복제하듯 찍혀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는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이함의 극치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026년 6월 9일 자 디지털타임스 사설 내용입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란 방패 뒤에서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선거 예산을 대폭 늘려 놓고도 정작 투표용지 인쇄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수에 턱없이 모자라게 줄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계산하지 못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짓밟은 조직이다. 이런 무능한 집단이 내놓은 ‘조작은 없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행정 부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이제는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국가 선거시스템 전체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선관위의 자체 조사나 검경의 수사, 국정조사만으로는 의혹의 흑막을 결코 밝힐 수 없다. 여야로부터 독립되고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개표 분류기 전산망을 전면 포렌식하고 논란이 된 지역의 투표함을 모두 열어 실물 종이투표지와 전산 수치를 한 장 한 장 대조해야 한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과정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그 선거로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된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기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정파적 이해득실을 버리고 즉각 특검법 선포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제와 관련 대만식 100% 수개표 도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30 청년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시위가, 규탄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칫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선거 실시 주장마저 나오지만 이는 답이 아니다. 우선은 진실 규명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국정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보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를 상기시킨다. 당시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선관위의 망 분리 체계가 미흡, 외부 해커가 언제든 내부망에 침투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만이 그 답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라는 제목의 26년 6월 11일 자 경남신문 사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거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이 중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이 사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창원 성산구와 함안군, 통영시, 남해군 등 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긴급 추가 송부됐다. 비록 경남에서는 투표 중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선거 관리의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 자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6월 18일 자 경북일보 사설에서도 '6·3 참정권 훼손, 특검으로 엄정·신속 규명하길'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참정권 짓밟고 국회 우롱 선관위, 특검 수사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26년 7월 3일에도 '활짝 열린 선관위 전산센터,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매일신문 사설이 실렸습니다.

7월 6일 자에도 '선관위 의혹 규명, 야당 추천 특검 받아라'라는 제목의 경북일보 사설이 실렸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 거부해 온 민주당, 선관위 특검은 왜 제3자 추천인가'라는 매일신문 사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국민들이 선관위 특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특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가결하기에 앞서서 국민들 앞에 참정권 침해에 대한 특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진짜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과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지금 선관위 내부에서는 지난 선거의 투표용지들이 튀어나오고 선거 당일 의원과 선관위원장의 통화 기록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범위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카르텔의 뿌리를 뽑고 행안부와 정권 차원의 개입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은 명확합니다. 독단적 기득권을 버린 야당 추천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범위 무제한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진상규명 특검에는 드러누워 침대 특검을 하는 민주당, 이 기만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벌며 증거 인멸을 방조한다면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며 결국 국민의 준엄한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와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한 진짜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편파적·선택적 정의는 또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사건은 특검의 칼날을 가리고 사건을 은폐·축소시켰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설로 민주당에 촉구했었습니다.

사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의장 조정식 예, 다녀오십시오.

○윤용근 의원 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특검 촉구 사설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김병기도 공천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제명됐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증폭되던 지난달 25일 이미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강 의원 공천헌금 스캔들로 번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당 내부 감찰로 끝낼 수준을 넘어섰다. 본인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 2명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돈을 건넸다는 두 구의원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 요구로 수천만 원을 줬고 3~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한다.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실에도 전달됐다.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덮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천헌금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동안 경찰은 정권의 외압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2차 특검 법안을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3대 특검은 헌정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재수사한 경우도 많았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일부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없이 추가 의혹만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헌금 의혹은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4일 자 세계일보 사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제명된 데 이어 역시 돈 공

천 추문의 핵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집권당의 신뢰도와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 이 전 의원은 동작을 현역 의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되는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쯤 이재명 대표실에 보내졌다. 이를 접수한 사람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 현재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며 이 탄원서는 다시 당 윤리감찰원을 거쳐 후보자검증위원장이자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자정능력 상실을 넘어 당 지도부가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셈이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근으로 수석사무부총장 등 요직을 맡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다. 이런 핵심 인사의 비리 탄원서를 당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 내부의 조직적 은폐 비리로 비화되는 현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이번 파문과 관련해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미 당 내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의혹을 폭로가 이뤄진 뒤에야 처리하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이번 돈 공천 의혹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 부속실장 등 권력 핵심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마당에 당 자체 조사나 경찰 조사로 의혹 해소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곪은 부위를 도려낼 의지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외에도 매일신문 사설, 문화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등 여러 사설들이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두 사람의 뇌물공천 사실을 녹음파일로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의해서 사건은 은폐·축소되고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경찰 고위층 부패 문제, 이런 사건을 특검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정의와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정치적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 국가의 법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 권력기관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누군가 조직적으로 진실을 감추려 했는지, 경찰 내부의 지휘 라인이 사건 축소와 증거 은닉에 개입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력팀과 팀원 등 18명을 모두 38차례 조사했고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 일곱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장은 증거 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증거였던 케이블타이와 성인용 인형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주거지와 범행 차량 정보를 알려 준 혐의도 확인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 축소 정황입니다. 강력팀장은 팀원들에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범죄 목적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차량 수색 결과와 DNA 감정 결과 등 중요한 감식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믿고 맡긴 형사사법절차 자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력팀장의 진술입니다. 그는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1명의 수사팀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조직의 지휘 라인까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당시 수사팀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에 이어 광주경찰청 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사건 지휘 라인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의 상급기관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부실 수사와 증거 은닉에 관여했는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경찰 내부에서 증거를 숨기고 수사를 축소하고 윗선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고 검찰이 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국민이 진실을 요구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에는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반복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부의 조직적 부실 수사와 권력형 은폐 의혹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검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권력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든, 어느 조직이든 국민 앞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정말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 고위층의 조직적 부실 수사와 증거 은닉 의혹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국민은 선택적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치주의고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전국에 폭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시간당 80㎜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방, 둑이 무너졌고 곧 출하해야 할 수박과 멜론 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의장 조정식 윤용근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국민들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 의원실 소개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토론해 주십시오.

○윤용근 의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비용으로 특별교부세를 내렸는데 그 금액이 21억 원입니다. 6개 시도의 수해 복구 비용으로 측정한 금액이 고작 2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370억이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을 포기한 국민주권정부 아닙니까?

예산은 반드시 단순히 정부지출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은 정부의 철학이고 국가의 우선순위이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는 엄중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2차 종합특검의 예산과 국정 우선순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폭우로 전국 곳곳이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어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입니다. 복구가 되면 또다시 침수가 되는 비극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항구적 복구를 못 하느냐고 많은 주민들이 질책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항구적 복구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정해진 예산 안에서 완성도를 낮춰 똑같은 임시방편으로 복구하고 이듬해에 또 침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몇 년째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물에 잠겨 썩어져 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며칠 뒤면 출하해 한 해 농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사이 비가 내려 몇천만 원의 손해를 눈앞에서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집이 물에 잠겨 물수건으로 닦아 내고 물기를 짜내는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 보셨습니까?

물기를 빼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입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내리쬐면 집 안팎에서 엄청난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에 긴급 지원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고작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210억 원이 아닙니다. 21억 원으로 6개 시도의 수해를 복구하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민낯

입니다.

반면 권력을 쥔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이 수사의 본질과 무관하게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 써 재낀 국민 혈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4억 6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과 일상을 복구하는 6개 시도 지원 예산보다 정치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 방값과 인테리어 비용이 3배가 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국민의 삶과 일상을 복구하는 6개 시도 지원 예산보다……

안동 귀미리 이재민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살던 집이 잿더미가 되어 1년 4개월 동안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근근이 삶을 이어 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 폭우로 그 임시주택마저 흙탕물에 파묻혔습니다. 열 동의 임시주택단지에 토사와 빗물이 덮쳐 다섯 동이 침수되고 한 동은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 30m나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뉴스1에서 보도한 현장상황 르포 기사에 따르면 새벽에 목숨만 건져 대피한 68세 김모 어르신은 둥둥 떠내려가는 임시 거처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산불로 놀란 가슴에 이번에는 물 때문에 또 놀랐다. 불이 지나가고 겨우 살 곳을 마련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덮쳤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앞으로 또 비가 온다는데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

산불로 집을 잃고 수해로 또다시 보금자리를 잃어 살림살이를 닦아 내며 망연자실해하는 안동 귀미리 주민들의 이 피눈물 나는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지자체당 평균 3억 5000만 원, 21억 원의 재난 교부세를 던져 주고 정치 특검 방값에는 64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국회입니까?

부동산 잔치로 전락한 특검 예산 낭비의 3대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검 예산 220억 원 중 30%에 육박하는 29.3%가 오직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동산 잔치 자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황당한 현실이 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지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피해 국민의 생존보다 정치적 셈법을 위에 둔 국정 우선순위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초호화 사무실의 입지에서 단 6개월 만에 23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14만 원이라는 거액을 오직 방값으로만 태운 셈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의 입지에 5개월간 매달 3억 7700여만 원씩 총 18억 8600만 원의 월세를 낭비했습니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억 25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썼고, 3개월 동안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국민 혈세 27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수해 복구 비용 21억 원 던져 주고 아무 효용 가치도 없는 특검 연장법안에 또 혈세 27억 9000만 원을 날리겠다는 것,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민주당이 부르짖는 사법 정의

회복입니까?

이미 기존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들어간 예산만 무려 220억 3900만 원입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특검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이것이 2차 종합특검의 현실 아닙니까?

공주·부여·청양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식 같은 농산물을 버리고, 안동의 이재민들이 흙탕물 속에서 그나마 쓸 만한 가재도구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둘째, 특검 예산은 펑펑 쓰고 피해 복구에는 짠돌이인 기만적 재정 집행입니다.

6개 시도에 지원한 21억 원만으로는 무너진 제방 하나도, 유실된 도로 하나도 제대로 근본 복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땜빵식 긴급 복구도 감당 못 할 푼돈을 내놓고 재난 지원을 다 했다고 생색내는 것, 안동 귀미리 주민들처럼 연이은 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이번 폭우로 무참히 짓밟힌 6개 광역시도 전체에 던져 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21억 원이라는 돈은 거세게 들이닥친 하천에 휩쓸려 나간 둑 하나 제대로 쌓기에도, 유실된 마을 진입로 하나 근본적으로 복구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정치인이라면, 현장의 피눈물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6개 시도 전체에 21억 원이라는 조족지혈의 예산을 내놓고 생색을 낼 수 있습니까? 항구적인 침수 예방 시설은커녕 당장 눈앞에 닥친 땜빵식 응급 복구조차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던져 놓고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 재난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언론에 생색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 정부 아닙니까?

연이은 대형 재난으로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이재민들에게 이러한 생색내기식 짠돌이 재정 집행은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무너진 제방을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는 수재민들에게는 몇천만 원, 몇억 원의 복구 예산조차 아까워 벌벌 떨면서 정작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정치 특검 사무실을 구하고 초호화 인테리어를 꾸미는 데는 64억 원, 220억 원의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쓰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고 정의입니까?

정작 살려야 할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특검의 초호화 방값에는 주저 없이 도장을 찍어 주는 이 비정하고 기만적인 집행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산 검증마저 거부하는 무소불위 거대 여당의 오만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특검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의 검증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처럼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사하십시오. 왜 무고한 수재민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강남·광화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멈추지 않는 정치 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초호화 특검을 차리고도 뭐가 더 남아 기간을 연장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면 이재민에게 쓰여야 할 세금이 얼마나 더 낭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여당은 수사 연장의 명분으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수사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영장 남발로 법원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경고장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수사기간을 한 달 더 늘리고 파견 인력을 150명까지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체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도 제발 국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 특화 정당의 모습만 보여 주실 것입니까? 여당의 품격과 역할과 책임에 맞는 행동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의 실체를 봐 주십시오. 이미 법정 최장 수사기간 150일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도 무엇을 새롭게 밝혔는지 제대로 된 결과표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일의 수사기간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수사인력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특검에게 30일은 거대 여당이 법을 고쳐 손쉽게 늘려 줄 수 있는 기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순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권을 주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검찰이 하면 권한 집중의 폐해이고 특검이 하면 정의의 완성입니까?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악한 권한이 되었다가 갑자기 선한 권한이 되는 것입니

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 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됩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부 역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서 지휘부와 윗선의 외압을 수사해야 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구속된 전 수사팀장은 30여 년 경찰 경력 대부분을 그 지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끈끈한 향찰 유착과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을 과연 내부 수사만으로 철저히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오직 권력기관 개편과 속도전에만 몰두했던 그 일방독주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놓치거나 숨겼을 때, 경찰의 지휘부가 개입했을 때 외부에서 이를 견제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검찰의 수사 독점을 없앤다면서 또 다른 경찰의 수사 독점을 만드는 것은 결코 권력 분산이 아닙니다. 자칫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모순, 내로남불에 빠져 몰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칼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의는 민생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권력 유착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특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축구를 해 오다가 이제 겨우 합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는 특검에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결한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성과표 없는 특검에 다시 30일을 얹어 주는 것이 진상규명은 아닙니다. 정권 유지용 특검이라는 의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건보다 성과 없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 진정 더 중요합니까? 국민 추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더 이상 침대특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추천 반드시 신속하게 합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고 양심을 가진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단순히 특검에 30일을 더 주는 표결이 아닙니다. 국민주권보다 정권의 필요를 앞세울 것인지, 국회가 국민의 것인지 권력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엄중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오늘의 표결을 일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훗날 역사의 무거운 책임까지 대신 져 주지는 못합니다. 양심의 본질은 순간에서 영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훗날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의 편에 서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이 모순된 2차 종합특검법의 개정안,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한 헌법 준수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 선서문을 지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더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특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입니까, 아니면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들의 인력 보충입니까?

현장에서는 검사 한 명이 500건이 넘는 미제사건을 떠안고 있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수사는 계속하면서 정작 국민의 민생사건은 뒤로 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무너져 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산업기술 유출 피해 기업,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제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수사 역량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검찰의 인력난과 사건 적체는 더 이상 통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겨우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 준 민낯은 어떠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의 모습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의장 조정식 윤용근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1인 서면동의)

(14시17분)

○의장 조정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박해철 의원, 오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훈기 의원, 조인철 의원, 정혜경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9분 투표개시)

○의장 조정식 투표 종료 관계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에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종료해 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투표 의사가 있는 의원들께서 회의장으로 오고 있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1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3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3」 하는 의원 있음)

183, 예.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9995)

(15시19분)

○의장 조정식 그러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월21일 15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강경숙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의겸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朴芝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출석 의원(29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범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의겸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규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朴芝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용근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진숙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동훈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40인)

강경숙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범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규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朴芝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용근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희 이진숙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한동훈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산회 시 재석 의원(173인)

강경숙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의겸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朴芝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출장 의원(2인)

배준영 조정훈

○청가 의원(4인)

강선우 나경원 박충권 이언주

회의록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고용진
입법차장 정명호
사무차장 김상수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리) 이진수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권성동	강원 강릉시	국민의힘	퇴직(당선무효)	2026. 7. 16.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법안심사제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2026. 7. 8.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방	박홍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2026. 7. 6.
행정안전	황명선	박홍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재정경제기획	우원식	김성환		2026. 7. 8.
외교통일	김성환	우원식		
	김영호	박정현		
행정안전	박정현	김영호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이광희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2026. 6. 30.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선무효	2026. 7. 16.

○의안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2026. 6. 30.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2)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6. 3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1)

이상 9건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6)

이상 2건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2)
7월 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9)
이상 2건 7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4)
이상 4건 7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1)
이상 4건 7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2)
이상 3건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3)

이상 3건 7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2)

이상 5건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67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2)

이상 6건 7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3)

이상 2건 7월 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5)

이상 2건 7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6)
이상 3건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1)
이상 4건 7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3)
7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0)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0)
이상 2건 7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최형두 의원·이준석 의원·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9)
이상 4건 7월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703)
7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4)
이상 7건 7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3)
7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8)
7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7)
7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6)
7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9)
이상 4건 7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3)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7.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1)

이상 4건 7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8)

이상 6건 7월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5)

7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5)

이상 6건 7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9)
이상 5건 7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2)
이상 3건 7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3)
7월 6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7)
이상 4건 7월 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8)
7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9)

이상 7건 7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5)

7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6)

7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2)

7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1)

7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4)

7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2)

이상 7건 7월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3)

이상 3건 7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0)

이상 4건 7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6)

7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0)

이상 4건 7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9)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 7. 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이상 8건 7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4)

이상 3건 7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6)

7월 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5)

7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8)

7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3)

이상 9건 7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2)

이상 2건 7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8)
7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9)
이상 3건 7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7. 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이상 6건 7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2)
이상 3건 7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9)
이상 3건 7월 1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6)

이상 6건 7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9)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7)

이상 2건 7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7)

이상 4건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1)

7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9)

이상 2건 7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4)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5)
이상 9건 7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8)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0)
7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8)
7월 13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회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용혜인 의원·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3)
이상 3건 7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5)
이상 2건 7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8)
7월 1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7)
이상 2건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0)
7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2)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5)
이상 2건 7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이상 3건 7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026. 7.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1)
이상 3건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2)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3)
이상 5건 7월 1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김준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2)
이상 5건 7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9)
이상 8건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1)

이상 2건 7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8)

이상 4건 7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4)

이상 2건 7월 1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8)

이상 2건 7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5)

이상 6건 7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96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96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9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9)
이상 4건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2)
이상 12건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0)
이상 2건 7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0)
7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2)

이상 6건 7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0)

이상 3건 7월 2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9)

7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7)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16.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4)

이상 3건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7)

이상 2건 7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3)

이상 2건 7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7)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6.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6. 30.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6)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7.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1)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5)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6. 7. 7.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3)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7. 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준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8)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9)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16.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4)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0.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6)

이상 14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7. 1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9995)

○의안 심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6)

7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1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8)

7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0)

7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8)

이상 2건 7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7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기후에너지환경노동)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80)

7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기후에너지환경노동)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청원 제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 및 당일수개표 등에 관한 청원

(2026. 7. 9. 한재민 외 50,58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4)

7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2026. 7. 14. 최원준 외 50,5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5)

7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특검 실시 및 재선거 촉구에 관한 청원

(2026. 7. 16. 손옥선 외 50,0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7)

7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7. 3. 김학희 외 51,66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3)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

(2026. 7. 14. 박조은 외 50,0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7. 16. 김제헌 외 60,13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8)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청서 및 보고서 제출**

수사 진행사항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요청(23건)(비공개)

(2026. 7. 2. 경찰청 제출)

국회 고발 사건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 요청(비공개)

(2026. 7.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서창1,2지구 방음벽 민원 해결 및 서창2지구 만월중~장아산근린공원 경계 옹벽 보수보강에 관한 질문서

(2026. 7. 7. 유상범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 관련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7. 1. 경찰청장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6. 7. 2.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6. 7. 2.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7. 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7. 3. 기획예산처장관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6. 7. 3. 대통령비서실장 제출)

참정권 훼손 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6. 7. 3. 대통령비서실장 제출)

(이상 7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6. 6. 11. 재정경제부 제출)

7월 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송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 정부광고 집행결과 보고

(2026. 5. 28.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7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6. 5. 30. 기획예산처 제출)

7월 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송부

2025년도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서

(2026. 6. 1. 법조윤리협의회 제출)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2026. 6.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7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2026년도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 보고서

(2026. 6. 17. 해양수산부 제출)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

(2026. 6. 24. 한국은행 제출)

7월 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송부

2025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

(2026. 6. 26.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7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6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26. 6. 26.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7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5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등 보고

(2026. 6. 26.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현황 보고서(비공개)

(2026. 6.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7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중앙행정기관 규제사무목록

(2026. 6. 30. 규제합리화위원회 제출)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권성동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26. 7. 16. 대법원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에 대한 판결이 7월 16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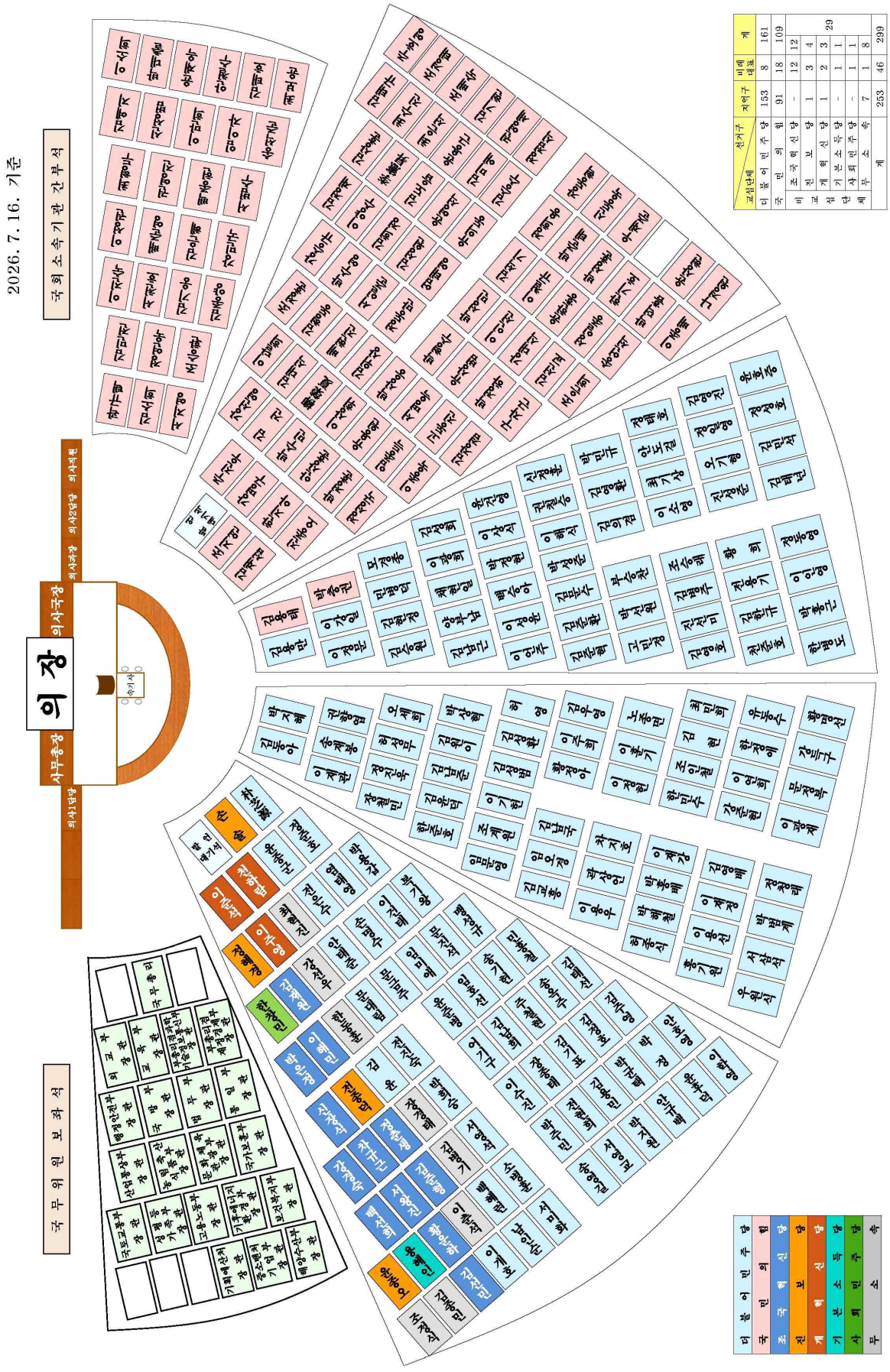
2026. 7. 16.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성동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제43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시	2026년 7월 6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외 160인

(2026. 7. 3.)

○본회의장 의석표


2026. 7. 16. 기준
국회소속기관 간부석
국무위원 보좌석
의 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담당
의석배정
속기사
교섭단체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더불어민주당 153 8 161
국민의힘 91 18 109
조국혁신당 - 12 12
진보당 1 3 4
개혁신당 1 2 3 29
기본소득당 - 1 1
사회민주당 - 1 1
무소속 7 1 8
계 253 46 299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